

발 간 등 록 번 호
-------------

11-1371000-000373-01
----------------------

#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유형에 대한 기초연구

2011. 12.

연구책임자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전영선(건국대학교 HK연구교수)

조은희(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나영(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백캐서린(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유형에 대한 기초연구(요약글)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그 동안 통일과 관련된 사회통합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는 통합논의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 집중되는 경향이었던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동안 이루어져왔던 의식의 문화에 대한 통합논의도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 회복’이라는 복고적인 통합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기된 다문화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상황과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이 남북의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제도나 구조의 통합보다는 미시적이고 문화적 통합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사회통합의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성에 바탕을 두고, 제도의 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다문화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요소들을 고려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가치관, 정서, 정체성 등의 ‘비제도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 지구적으로 다민족·다문화 현상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맞이할 통일국가의 사회문화 통합 전략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 지구적인 사회문화 갈등과 극복을 위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 간 갈등과 통합 유형을 정리하여 ‘문화통합’의 개념을 정리하고, 통일 상황에 맞춘 적극적인 문화통합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해외분단국 통합사례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통합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통일 후 사회문화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의 양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다양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갈등의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함으로써 통합과정이나 통합 이후에도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분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통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가 본 연구의 실천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내용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통합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사회통합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에는 문화갈등의 요인(이주, 지배, 종교, 이념)에 대한 분석, 문화갈등의 형성과정(갈등의 주전선, 적대적 관계 경험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문화통합의 지향점(단일문화 지향, 다문화 지향 등) 및 단위(개별국가 단위, 연합국가 단위 등)에 대한 분석 등이 진행된다. 이것을 위해서 문화통합의 다양한 사례를 단계별, 정책별로 재분류하고, 남북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양상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략이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통합과 사회통합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 검토는 물론, 기존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문화통합과 통일, 다문화사회의 문화통합 등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이론적 논의 및 개념 재정립과 사회문화갈등과 사회문화통합 관련 해외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회문화적 통합전략 마련에 기반이 된다. 따라서 사회문화갈등 국가의 유형 재분류와 통합정책의 비교, 그리고 통합정책의 비교를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갈등과 통합 관계자,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적인 분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 갈등과 통합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연구과제의 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실질적인 사회문화통합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관련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갈등 해결과 극복을 위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 간 갈등과 통합 유형을 정리함으로써, 문화통합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갈등 지형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통합에서 문화적 통합 전략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초 연구로서 통일과정에 동반되는 사회갈등과 통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 II. 문화통합의 개념과 남북문화 통합

### 1. 문화통합의 이론적 논의

#### 1) 문화접촉과 문화갈등

문화갈등에 대한 헌팅톤, 밀러, 그리고 사이드의 견해는 서로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갈등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지만, 문화적 공존을 생각하는 밀러나 사이드의 경우에도 문화갈등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은 일반적인 문화적 갈등의 양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여 왔으며, 현재도 언어를 포함하여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요소들이 적지 않다. 현재 남북한 문화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발전시켜 오면서 이에 적합한 문화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사이드의 이론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남북한 간의 문화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남북한 문화유형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문화적 차이보다는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정치경제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 문화갈등이 문화 자체보다는 남북관계라는 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던 시기에는 상대 문화에 대한 부분적인 접촉마저도 금지되어 있었다. 현재에도 남한의 경우는 보안법이라는 법적 규범으로 북한 문화를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의 향유가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남북한 문화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었으며, 통일을 지향한다면 문화적 갈등은 종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통일의 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밖에 없다. 넷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드는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문화관뿐만 아니라 이에 반발하여 제3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수주의적 문화관도 반대한다.

## 2) 사회문화적 통합

‘무엇이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가’에 대한 고전적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크게 체제통합과 사회활동의 통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거시적 수준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구성원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사회활동의 통합’(societal integratio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회통합에 대한 시각은 사회통합의 발생을 보는 시각에 따라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째는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기회·권리의 평등성 확대와 소통의 확대에 기초한 연대성의 확장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 둘째는 통합을 통제에 기초한 획일성의 증가로 보는 부정적 시각, 셋째는 사회적 관계의 조직화된 패턴을 기술하는 가치중립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은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구조와 행동모형에의 행동적 및 의식적 동화의 과정을 의미하여야 하며, 파슨즈의 지적처럼, 사회의 공통적 가치가 사회체계의 구조적 요소 안에 제도화되고, 공통의 가치모범과 행동지향이 내면화될 때 사회통합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의 가치는 뒤르켐이 이야기하는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구성하며 가치적, 규범적 표준들이 효과적으로 내면화되어 사회의 성원들은 집합의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이해를 통해 ‘내적통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내적통일이란 국가 질서의 가치기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 논의에 탈근대성(post-modernity)을 도입할 경우, 사회통합은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제도나 구조의 통합보다는 미시적이고 문화적 통합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사회통합의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성에 바탕을 두고, 제도의 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다문화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요소들을 고려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가치관, 정서, 정체성 등의 ‘비제도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문화통합과 남북관계

통일한국 사회는 분단 체제의 남북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는 결과인 동시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출발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60년 넘게 지속해 온 적대적 대타성이 극복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이질적인 체제 하에서 생활했던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국가의 새로운 체제 속으로 동시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배태된 남북의 문화의 대규모 접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통합 문제는 통일한국의 남북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삶의 문제를 포괄한다. 통일한국의 문화 통합은 어느 한 편으로의 통일이나 통합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문화통합은 문화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통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남북의 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의 문화는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내는

전 과정의 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문화공동체란 곧 문화의 가치가 소통되고 융합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 Ⅲ.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유형과 사례

#### 1.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유형

##### 1) 문화갈등의 유형화

다른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문화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정도와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요소가 접촉하는 문화이식에 비해서 문화유형이나 문화체계가 접촉하는 문화이식의 경우가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또한 접촉하는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어느 정도 다른가 하는 점도 갈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문화적 차이의 정도와 문화접촉의 상황은 상호 결합되어 문화갈등의 정도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표 1] 참조).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상황이 비적대적이라면 문화적 갈등은 심각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문화갈등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주체 간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면 문화적 갈등은 증폭되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크고 문화주체 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문화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고 관계도 비적대적이라면 문화갈등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2] 문화갈등의 유형

문화 접충 상황	문화 차이 정도	
	차이가 많음	차이가 적음
적 대 적 상황	㉠	㉡
비적대적 상황	㉢	㉣

- ㉠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미국과 아랍근본주의 문화 간의 갈등  
 ㉡ 문화갈등이 실제보다 증폭되어 나타남: 종교 개혁기 신구교의 갈등  
 ㉢ 문화갈등이 제도화되어 문화변동으로 이어짐: 해방 후 미국문화의 남한문화와의 갈등  
 ㉣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유럽문화와 미국문화의 갈등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은 앞의 유형가운데 ㉣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각각 자본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문화체제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오랜 기간 같은 문화를 공유하여왔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같은 언어를 갖고 있으며,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가족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여 많은 문화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자체의 요인보다는 문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며, 문화적 갈등은 남북한의 사회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증폭되기도 하며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2) 문화갈등 국가의 유형화

남북한의 문화통합 과정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문화통합의 다양한 사례를 단계별, 정책별로 재분류하여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양상과 이를 관리하는 필요한 전략이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표 3] 문화갈등의 원인과 관계

구분		관계		
		과정	연합	단일
원인	민족·인종	아일랜드	EU(국가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주	이스라엘	EU(국가 내)	캐나다, 호주
	분단	한반도	중국(홍콩)	독일, 베트남

각국의 문화적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유형화하면 위와 같다. 문화갈등의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민족이나 인종의 종족적 요소이다. 국제 분쟁의 모델로서 민족적 분쟁은 이민족 사이에 발생한다. 둘째, 이주에 의한 갈등은 남북의 문화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인구이동의 사례가 될 것이다. 남북통합 과정에서 경제적인 요인이나 기타 이유로 상당한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 셋째, 분단이다.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독일, 베트남 등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 한반도는 어느 국가보다 치열한 이념갈등을 겪으면서 분단의 상황이 국가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체제적 차원의 대립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한반도 문제는 세계 및 동북아 차원의 일반적 의미와 함께 분단에 의한 냉전 종식의 과정이라는 복잡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슈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안보 이슈로부터 인도주의적 이슈까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2.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사례

### 1)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남북한 관계와 유사한 문화적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침략과 대규모 이주,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종교 갈등으로 심각한 문화갈등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북아일랜드는 내전을 경험하였고, 이후 신구교로 갈라져 테러를 비롯한 폭력적 보복을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증폭되어온 영국과 아일랜드의 갈등은 외면적으로 종교적인 갈등

으로 보이지만,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 지주와 노동자라는 계급적 문제 그리고 민족의 문제까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갈등은 자연적으로 사회문화적 갈등을 동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 백 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와의 갈등 그리고 식민지 종주국 영국과 피식민지 아일랜드 문화 간의 갈등, 친영국계 신교 문화와 민족주의적인 구교 문화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이식하면서 토착민과 토착문화를 파괴하였다. 영국식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켈트(celt)문화를 폄하하면서 고유 언어인 켈릭어(gaelic)를 영어로 대체하고, 새로운 가치와 역사를 심었다. 종교적 차이와 계급적 차이는 사회적 분화를 초래하였고, 사회적 분화는 생활과 문화의 차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일랜드의 문화적 갈등은 남북한 문화갈등에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 못지않게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화적 갈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라는 요인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계급적 요인과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독립과 반독립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 갈등이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등 상대적으로 문화적 갈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조장하는 벽화를 포함한 적대적인 문화구조에서 자라나면서 상대집단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립된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공화국내에서 여전히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갈등의 해소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문화적 차이가 점차 희석되는 과정에서 유럽통합이나 경제성장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적 통합이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과정에서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주민들에 의해 건설되고 경영되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주민 정책에 관한 이스라엘의 정책이 가장 유서 깊고, 어떤 면에서는 원형(prototype)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Jewish Agency’라는 유대인 조직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 민족의 국내 이주를 적극적으로 유도·수용해 왔으며, 이는 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그 경위가 어떠한 간에 모든 이주민이 일단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면, 시온주의(Zionism)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 편입시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즉, 이주민들이 정착에 실패하여 사회 내 기층 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유대인 귀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문화갈등이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붕괴로 마지막 대규모 이주민 집단이 이스라엘에 유입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에 대해서도 다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재배치가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의 대규모 이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갑작스런 이민의 물결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 이민자는 히브리어를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웠고, 이전 사회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라도 새로운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학력 기술자들의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여성들은 더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일부 러시아 여성들이 서비스업종으로 전락하면서 그렇지 않은 다수의 여성들이 자신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이민자들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집단이 에티오피아 출신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들은 이민을 오기 전 대부분 문명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이스라엘처럼 기술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갑자기 적응하며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언어와 가치관, 문화가 다른 이스라엘에서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검은 피부 때문에 차별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자살이라는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의 자살률이 높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과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집단이주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존 이스라엘 국민들과 문화적이고 정서적으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를 믿고 있고, 유대인이라는 자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서구문명에 중심을 둔 기존 유대인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러시아 출신은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집단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 출신들은 문명화 수준에서 뒤떨어졌다는 점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적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민정책이 발전한 이스라엘에서 통합과정의 핵심적인 국가조직은 국정홍보국, 사회통합국, 복지서비스국이다. 국정홍보국(Information and Promotion Department: IPD)은 이스라엘이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유형의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수학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전 세계 젊은 층에게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을 담당한다.

최근 들어 시작된 대이민군의 재유입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들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사회통합국(Social Integration Department: SID)이다. 사회통합국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비이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민 수용정책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다. 주택문제를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의 이민자 수용지원과 보호가 3년간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반해 사회통합 과정은 5년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진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기본적인 추진원리로서 사회통합국은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이 각기 다른 이민군들을 이스라엘이 가진 하나의 문화적 전통의 틀 속에만 융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이민군들에게 이스라엘이 지닌 인종적,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치되 한편으로는 각 이민 집단이 지닌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적 유산과 독창성 역시 소중히 간직하도록 전통문화 보호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혜택(Absorption Basket)은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등록비, 교재비, 지역탐방비, 문화활동비, 개인소모품비 등의 교육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장병 담당부서는 이민자들의 군복무 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한다. 적격 지원자는 청소년개척자(Youth Aliyah)의 지원 아래 교육을 받는 마지막 해부터 복무기간을 마치기 이전의 준비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군 장병 담당부서는 최근 들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스라엘 내에 부모가 없는 제대 군인들에게까지 확대시켜 이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사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부서는 준군사적 청년군대조직인 '가드나'(Gadna)와 함께 20개 지역의 이민자 수용 지역사회에 청년 상담원을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 3) 한반도

문화적 다양화, 문화다양성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문화 갈등은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한 사회의 다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구조의 토대가 문화 갈등을 촉발하는 다문화 사회도 아니며, 한국으로의 이주 역사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따라서 해외로부터 산업연수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충돌 요인들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정 내의 문제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 갈등이 생겨났으며, 자녀 양육에서도 언어의 차이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배타적 인식으로 인한 갈등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민의 모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입견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적용된 대다수의 지원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교육과 정보화교육이 중심이며, 최근에 새롭게 가족교육과 가족생활 상담, 자녀보호, 정서적·문화적 지원으로 친정어머니나 후원가족의 매칭과 결혼이민자 가족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단일 민족이라는 특수성이 약화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초기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최근 상호주의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다문화 정책이다.

### 4) 유럽연합(EU) - 국가 간

유럽연합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 과정은 남부유럽 국가, 북부유럽 국가들

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5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통합을 추진하면서 5억 명의 인구와 30여 개에 가까운 회원국으로 묶인 거대한 통합체로 발전하였다.

유럽통합에서 제기된 갈등의 핵심은 경제적 차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였다.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진행된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약자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사회적 갈등은 격렬한 저항으로 이어지면서 사회통합의 장애물로 제기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다양한 언어도 유럽통합 정책의 장애 요인이었다. 유럽연합은 다언어주의를 원칙으로 27개 회원국 중 23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각국의 언어 속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이 담겨있다는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유럽연합은 중·동유럽 8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문화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신규회원국들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해온 서유럽과 달리 구소련의 영향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었다.

유럽통합의 궁극적인 완성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문화적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유럽통합의 문화정책은 통일성과 분열성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질적 문화권 국가들의 상이한 언어체계, 독립적인 예술작품,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가치체계를 가진 국가들이었다. 유럽의 문화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양면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 유럽 국가의 회원 확대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강화하였다.

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화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용과 근로 복지 정책,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사회포용 정책이 강조되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전개되었다. 1994년 12월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은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드는 직업교육과 훈련, 이를 위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 국가 간 직업훈련 교육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의 문화통합 정책은 동서유럽의 통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지만 유럽인들의 내면까지는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통합을 준비했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이 강대국에 포섭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자발적으로 유럽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

었다. 물론 유럽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이 완전히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인들이 느끼는 정체성 의식은 아직 약하고, 소속과 충성심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정책 차원에 그쳐 관료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유럽인들이 터키와 같은 이슬람 문화를 다양성의 틀 안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유럽인들은 유럽 외의 지역에서는 유럽인으로 행세하지만 정작 유럽 내에서는 자국의 독자성을 강조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으로 문화적 통합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뒷받침되어도 내면적인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남북한의 통합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5) 유럽연합(EU) - 국가 내

### (1) 스페인 바스크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의 17개 자치주 가운데 하나로 남부 4개 지방과 북부 3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때 독립국가였지만 지금은 스페인에 속해 있다. 오랜 역사와 고유 언어인 바스크어를 가지고 있다. 19세기에는 특권이 박탈되는 등 외세에 시달렸다. 외세에 의한 오랜 통치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독립성을 잃지 않고, 민족적 성향을 지켜왔다.

바스크 분리주의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프랑코 정권이었다. 1933년 바스크자치주가 탄생했지만 프랑코 독재정권에 의해 심한 탄압을 받았다. 1960년 프랑코 독재정권에 의해 바스크 언어가 금지되었으며, 바스크 문화도 금지되었다. 이에 대항해서 망명정부가 만들어지고, ETA(Euskadi Ta Askatasuna, 바스크 조국과 자유)가 등장해 분리주의적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 1959년 스페인 프랑코 군사독재 정권이 바스크어 사용을 금지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섰다. ETA는 관공서 차량폭탄 테러, 요인 암살 등을 통해 800명 이상을 살해하였다. 2006년 휴전을 선언하였으나 그해 12월 마드리드 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를 감행해 53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1970년~1980년대에는 바스크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으나 자치권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테러를 시도함으로써 기반이 약화되었다. 프랑스와의 관계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은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달라서 지역별 특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스크 지역을 비롯하여 지방 주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바스크주는 1979년 지방의회 구성, 지방경찰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조세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갈등에는 경제적인 원인도 있다. 바스크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부의 대부분이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평화촉구와 ETA의 무력투쟁 중단 선언으로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 (2) 북부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로마제국 이후로 1860년 이탈리아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개의 도시국가와 식민지로 이루어진 반도였다. 1860년 이후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여왔다.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가 제도화되었고,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경제적인 이유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탈리아는 지역적으로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격차가 크다. 북부지역은 중공업이 발전하였고, 남부지역은 관광이나 경공업이 중심이다. 남북의 경제적 차이는 커서 남부이탈리아의 실업률은 북부의 4배에 달할 정도였다. 남부에는 마피아 조직이 있어서 북부에 거점을 둔 기업들이 남부로 진출하기를 꺼리며, 취업을 위해 남부지역 사람들이 북부로 들어가고 있어서 경제적인 차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 차이는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통일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요인이 크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분리주의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통일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이 그대로 문화적 우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한국 사회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통일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다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분리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6) 홍콩

홍콩인들과 본토 중국인들의 갈등 원인은 홍콩인들의 정체성 상실과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홍콩인의 정체성은 중국의 국민으로서 온전히 형성되지 않



있고, 홍콩인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중국인들은 이런 홍콩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영폭동과 천안문 사건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정책을 통해 홍콩인들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 속에서 ‘홍콩인’의 정체성이 새삼 문제가 된 것이다. 홍콩인들은 넓은 의미의 중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토 중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듯하다.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일부 좌파를 제외하고는 스스로에 대한 ‘우월한 문명 의식’을 느끼고 있다.

오랫동안 영국식민지를 겪은 홍콩 중국인들은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중국인들의 내왕이 자유로워지면서 중국과 홍콩인들의 교류도 확대되자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들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접촉을 통해 홍콩 중국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홍콩 중국인들에게 ‘홍콩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이들의 신분과 함께 인권문제도 갈등을 증폭하는 요인이다. 1999년 홍콩의 중심법원에서 내려진 홍콩 거류권 판결 이후의 판결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내지 자녀들의 일부가 불법체류 명분으로 체포된 사건 역시 행정당국과 홍콩 중국인의 인권의식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불법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본토인들의 홍콩 입경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홍콩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주를 허용하는 ‘터치 베이스 정책(touch-base policy)’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말 홍콩은 ‘터치 베이스 정책’을 취소하고 불법이민자들을 강제송환하기 시작한다. 홍콩인이라는 의식은 이처럼 본토 중국인들을 통제하고, 거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생겨났다. 1997년 중국 정부는 홍콩을 내국으로 간주하고 홍콩정부의 출입경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홍콩 중국인과 본토 중국인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홍콩의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제발전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홍콩에 대한 열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7)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600년대 네덜란드인의 대이주와 1800년대 영국의 식민지로 인한 다인종 다민족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인종 간 갈등상황이 상존해 있고, 식민지를 겪으면서 백인 인종 내의 갈등은 물론, 흑인과 백인간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1948년 국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왔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실시되면서 흑백 간 인종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1994년 이후 민주적 정권교체로 등장한 만델라 정권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당시 폭력적인 정책으로 인한 흑인 분리통치, 그리고 흑백 갈등과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정책, 과거사 청산작업, 평화교육 등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채 2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흑백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및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1994년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 남아공 정부는 국가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정책,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의 활동을 통한 과거사 정리 작업, 그리고 평화교육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현재 복수의 언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다. 남아공은 식민지배과정에서 만들어진 아프리카언어가 여전히 민족정체성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남아있다. 1994년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달성한 남아공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정책을 과거의 영어와 아프리카언어 우대정책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어와 아프리카언어 이외에 9개의 아프리카어를 국가 공식어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언어선택의 민주적 권리 확보는 아프리카 언어의 발달 수준, 그리고 그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언어정책과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TRC)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새로운 국가건설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화해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과거청산의 노력으로 국민의 화해를 위해 진행된 국가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델라정부는 차별이 없는 미래를 목표로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로 통합시키는 정책으로 국가재건과 발전프로그램에 의한 법적·정치적·사회적·교육 문화적 변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흑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민주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통합이후 과거청산의 작업과 평화교육은 남아공의 사례에서처럼 사회통합을 위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같은 분단국은 물론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사회통합과정에서 과거청산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갈등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는 과거청산 작업이 어느 한쪽의 희생에 의한 것일 때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8) 캐나다 ·호주

### (1) 캐나다

이중 언어 국가로서 캐나다에 대한 관념은 캐나다에 대한 유럽의 식민지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캐나다 영토는 두 민족, 즉 영국과 프랑스에 의하여 식민지화되었다. 영국은 오늘날의 뉴퍼들랜드 지역에 정착한 반면, 프랑스는 오늘날의 Nova Scotiz,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및 Quebec에서 식민지를 확대하였다.

19세기 말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였고, 이후 10여 년간 캐나다는 이민의 봄이었다. 당시 대부분 이민자들은 대륙횡단철도를 건설 중이었던 철도회사에 의하여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캐나다 중부의 평원 지역에 정착한 농업 이민자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영국계 캐나다인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인종, 민족 차별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프랑스 식민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배권을 획득한 영국은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강제추방과 회유의 양자를 채택하였다. 첫째, 프랑스 식민지였던 캐나다 남동부 연해주지역의 아카디아 지역에서 영국은 강제적 재배치 정책을 추구하였는데 수천 명의 프랑스 인들을 프랑스로 추방하였거나 미국에 있는 영국 식민지 지역으로 추방하였다. 둘째 회유의 방법으로 오늘날 퀘벡에 해당하는 신 프랑스 지역에서 영국은 영국식 지배의 범위 안에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1971년 캐나다의 튜더 수상은 이중언어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공포하였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의 두 지배집단인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주도하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소수민족의 참여를 권장하는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이중언어주의, 이중문화주의를 고수하던 정책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1987년에 조인된 미치호수협정(the Meech Lake Accord)은 영어권 캐나다와 불어권 캐나다를 강조하고 퀘벡주를 독특한 사

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남아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를 대응해 나가는 이중언어 정책을 볼 때, 향후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현재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말과 남한의 표준어인 서울말에 대한 언어통합과 관련되어 강제적인 남한의 표준어로의 통일이 아닌 통일 당사자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유지·발전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호주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 간의 갈등문제이다. 인종갈등은 호주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백인 인종우월주의에 기반을 둔다. 호주는 앵글로(영국계) 켈틱(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백호주의 아래 민족의 동질적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대단위의 이민 개방으로 인해 다양한 인종, 에스닉 공동체가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민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호주는 백인 인종 순결성에 의존한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결국 호주는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생겨난 공동체 간의 갈등과 민족정체성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문화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50~1960년대 호주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주로 동화정책이었다. 그 당시까지 대부분의 앵글로 켈틱 호주인들은 아시아인 또는 황인종들을 호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1960년까지 백호주의정책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비영국계 유럽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에 대해 비영어권 이민자들은 주류문화로부터 고립되고 방치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호주는 1973년 고프 위트램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다문화사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1978년 이후 민족특성에 맞는 이주, 정착서비스와 복지프로그램, SBS방송실시, 가족초청이민 완화 권고, 지방에 에스닉 위원회 설치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호주정부 다문화정책의 네 가지 기본원리는 첫째, 시민적 의무, 둘째, 상호존중, 셋째, 상호공평성, 넷째, 공동이익 추구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실천전략은 첫째, 조화롭게 살기, 둘째, 더 공평한 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셋째, 생산적 다양성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문화주의가 실시되는 호주에서 아시아인들은 애보리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종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그들의 피부색, 외모의 차이로 인해 자본의 축

적을 통해서도 백인들이 누리는 인종적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 또 아시아인들은 호주 사회 내에 완전히 포함된 것도 배제된 것도 아닌 회색영역, 즉 모호한 공간 또는 제3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현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심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다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단일문화, 단일인종체제를 유지했던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민자들은 민족 정체성에 위협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탈북자들의 적응문제와 함께 통일 이후 진행될 지난 60년간 이질적인 이념과 문화 아래 생활했던 사람들과의 사회통합 문제를 안고 있다.

## 9) 독일·베트남

### (1) 독일

독일의 정치·제도적 통일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 주민들 간 정신·문화적 이질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양 지역 주민의 생활방식, 가치관, 경험체계 등이 상이하여 동독지역 주민들이 아직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치·경제·문화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문화통합 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적 차원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은 공공분야에 대한 것이다. 통일 독일의 문화정책은 처음 10년 동안에는 무엇보다 구동독 지역에서 박물관과 도서관, 연주회장과 전시공간 등 문화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프로이센 왕국의 문화유적이 밀집해 있는 브란덴부르크주라든가 작센 왕국의 문화유적이 밀집해 있는 작센주 등지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복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문화기반 확충과 문화재 복원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자, 2000년대부터는 그러한 정책기조를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 동서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문화적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정치·제도적 통일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 주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통합사라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상호성에 입각하여 남북 주민의 상호적응성을 높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차원의 통합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용력

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통합은 남북 어느 한편이 꺾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남북 주민이 상호 꺾어야 할 문제가 된다. 이 과정은 당연하게도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적응이 아니라 상호 적응일 필요가 있다.

## (2) 베트남

1975년 남베트남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면서 남북베트남은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남베트남 주민들은 북베트남 체제에 편입되어 사회주의 이념을 따라야 했다. 이처럼 베트남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은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만나 일으키는 갈등의 해소과정일 것이다. 통일베트남 정부의 사회통합노력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었다.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인해 남북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 통일베트남은 사회주의를 체제와 이념으로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과 이질적인 양 베트남 사회를 하나의 사회로 통합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정책들이 학교교육과 사회재교육, 정치교육 및 종교개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베트남 정부는 교육을 통해 남베트남 사회의 전통적 이념의 잔재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및 국제주의의 제거에 중점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하였다. 하지만 현실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주의 가치통합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남베트남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북부지역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면서 남베트남 사람들의 불만이 가중되었으며 강제수용을 통한 재교육의 방법 등으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통일정부가 추진했던 정치재교육과 종교정책은 남베트남 주민들을 사회주의적 가치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통일정부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남베트남 주민들에 대해 지나치게 독단성을 띠었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직성은 통일정부의 사회통합노력을 반감시켰다.

## 3.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시사점

문화와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일어나는 문화갈등은 온전하게 해소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정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갈등의 정도

와 범위는 원인과 대응, 문화적 차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문화접촉의 경우를 문화적 차이와 문화접촉의 주체간의 관계에 따라서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국가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문화의 차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문화적 갈등의 원인을 유형화하면, ‘우호적인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가 적은 문화가 접촉하는 경우’, ‘우호적인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가 큰 문화가 접촉하는 경우’, ‘적대적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가 적은 문화가 접촉하는 경우’, ‘적대적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가 큰 문화가 접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은 문화적 차이가 적고, 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문화접촉이 일어난 경우에 문화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문제였다. 문화갈등의 원인은 인종적인 요인, 이주에 의한 갈등, 분단에 의한 갈등으로 나누었으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연합이나 단일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 연합단계에 있는 국가, 단일국가를 이룬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유형별 사례로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반도, 유럽연합(국가 간), 유럽연합(국가 내 사례로서 스페인 바스크, 북부이탈리아),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호주, 독일·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국가의 문화 갈등 및 통합 사례에서 두 개 이상의 문화권이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제도의 통합을 넘어서 ‘문화의 통합’을 성취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문화 통합’의 관점을 갖는 것, 나아가 ‘문화 통합’의 관점에서 통일정책, 통일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이처럼 각각의 사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지만 주어진 조건과 상황 변수에 따라 각기 너무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곧바로 남북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맞는 ‘문화통합’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 1. 문화통합의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의 특수성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각각의 유형별 의미

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남북 문화 통합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사이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이념과 체제 대립이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 문화통합에서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이념과 체제 대립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사이에는 수백만의 살상이라는 전쟁의 상흔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문화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곧 전쟁 이후 심화되어 온 적대감의 치유라 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이념적인 층위와 지역문화적인 층위를 제외하면 비교적 동질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현재 남북한 사이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생활문화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 2. 문화갈등과 사회통합 사례와 남북통합

세계 각국의 문화갈등과 사회통합 사례연구는 남북 문화통합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남북 문화통합의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의 문화통합은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통일논의와 같이 민족사적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이나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는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남북의 문화통합은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은 분단으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었다. 남북의 문화통합 과정은 분단으로 인해 겪었던 갈등과 상처가 우리 생활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 문화통합은 남북 주민의 상호적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통합이란 남북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적 차원에서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민족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의 문화통합은 남북과 해외 한민족의 문화정체성 재정립을 의미한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남북문화의 차이를 민족문화의 차원에서 극복하고 한민족 문화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다섯째, 문화통합 심화를 위한 전략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남북문화통합은 결과로서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통일전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측 및 갈등의 지형도를 구축하여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전통문화예술의 복원과 심성체계 통합이다. 남북의 문화통합은 전통문화의 복원과 함께 생활현장의 창조적 적용을 통해 심성구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민족문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심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물이며, 문화통합의 매개물이다.

###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유형에 대한 기초 연구에서 유형화 연구는 사회갈등과 통합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유형화를 시도한 사례들 가운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의 방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부분과 이와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과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이념과 체제 대결에서 발생한 ‘냉전적 사고’의 원형을 조사 연구하여 ‘탈이념의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제는 복잡적이며, 중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오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한국전쟁의 갈등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출된 지역감정의 오랜 뿌리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여기에 세대 간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이념갈등과 경제갈등이 대북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유 인식의 근원적인 진단과 치유와 통합의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상흔의 치유 작업과 함께 구술을 통한 ‘상흔’의 기록이 필요하다. 이는 이산가족의 ‘자유 상봉’에 의한 개별적 해결의 성과를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특히 고령자 이산가족의 영상기록 등의 사업을 통해 이산의 상처를 보듬고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언어, 민속 등 민족 공통 자산은 물론이고 상호 이질화되어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문화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접근을 통한 ‘실태 조사’가 빠른 시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문화통합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언어적 동질성은 이제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이기보다는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언어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작업은 통일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 통합의 방향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활문화 분야에서 법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 문화적 차이로 오는 갈등과 의도치 않은 범죄 노출 등의 문제가 있다.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별 국가 사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각각의 사례를 관통하는 문화통합의 개념과 관점, 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한이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의 섬’에서 문화통합을 통한 ‘세계평화의 전진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철학적, 문화론적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과 같이 ‘전쟁’ 이후 통합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에 의한 통일이 선회된 후 문화 통합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곳으로서, 또 통일 이후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는 전쟁 상흔의 극복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우리의 시사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서독과 같이 자본주의로의 흡수통합이 된 이후 문화통합 과정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책의 구체적인 철학과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무분별한 독일 사례의 소개가 주는 폐해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산가족의 재결합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백만의 가족과 친척이 수십년 동안 만나지도 못한 채 살아온 남북한 사례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이번 연구에서 주로 문헌자료에 의한 개괄적 조사와 그 유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현지 조사, 특히 주요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통합의 주제는 제도화된 영역 그 너머에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형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목차

<b>I. 서론</b>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	4
3. 연구방법 .....	5
4. 기대효과 .....	6
<b>II. 문화통합의 개념과 남북문화 통합</b> .....	8
1. 문화통합의 이론적 논의 .....	8
1) 문화통합의 개념 .....	8
2) 문화접촉과 문화갈등 .....	12
3) 사회문화적 통합 .....	22
2. 문화통합과 남북관계 .....	27
1) 통일한국과 사회통합 .....	27
2) 통일한국과 문화통합 .....	30
<b>III.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유형과 사례</b> .....	34
1.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유형 .....	34
1) 문화갈등의 유형화 .....	34
2) 문화갈등 국가의 유형화 .....	37
2.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사례 .....	40
1) 아일랜드 .....	40
2) 이스라엘 .....	50
3) 한반도 .....	62
4) 유럽연합(EU) - 국가 간 .....	74
5) 유럽연합(EU) - 국가 내 .....	85
6) 홍콩 .....	90
7) 남아프리카공화국 .....	96
8) 캐나다·호주 .....	111
9) 독일·베트남 .....	127
3.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시사점 .....	144
<b>IV. 결론</b> .....	152
1. 문화통합의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의 특수성 .....	152
2.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사례와 남북통합 .....	154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61
※ 참고문헌 .....	166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그 동안 통일과 관련된 사회통합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는 통합논의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 집중되는 경향이었던 점이다. 그러나 60년이 넘는 남북 분단의 기간 동안 남북한은 독자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문화체제를 구축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적인 통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로서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동안 이루어져왔던 의식의 문화에 대한 통합논의도 ‘이질성의 극복과 동질성 회복’이라는 복고적인 통합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기된 다문화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상황과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통일독일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일방적인 단일문화로의 흡수와 단일문화체제 구축은 사회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갈등만을 야기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통합을 저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과 접촉이 증가하고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한은 오랜 단절의 시간과 적대적 대치관계를 유지한 까닭에 통일 이후 사회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갈등의 양상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sup>1)</sup>

- 
- 1) Berry는 두 개의 문화가 접촉하게 되었을 때 상호적인 작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의해 다른 한쪽이 변화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기존의 문화를 한 축으로 하고 새로운 문화를 다른 축으로 하여 적응의 유형을 ‘문화동화(assimilation)’, ‘문화통합(integration)’, ‘문화분리(separation)’, ‘문화주변형(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보았다. 문화동화(assimilation)란 ‘자기 문화를 버리고 주류문화에 편입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사회에서의 경험과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사회의 환경에 동화하는 것이다. 문화통합(integration)이란 ‘자기 고유문화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문화 접촉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통합 유형이란 균형적

다시 말해서 남북의 문화적 차이와 정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그 동안 남북한이 대타적(對他的) 적대감으로 존재를 인정받아왔던 냉전적, 적대적인 문화 혹은 이질감을 증폭시켜 공동체 형성에 강한 거부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계적인 제도 중심의 통합이나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통합논의는 통일에 대한 피로감을 누적시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거나 거부감을 양산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동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사람, 북한 문화와의 공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통합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통합 이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갈등과 분쟁의 지형 파악을 위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 갈등에 대한 심층적이며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포괄적 의미의 접근이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적대적 관

---

인 시각에서 새로운 사회에서 체험한 다양한 경험을 내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통합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와의 비판적 비교를 통하여 두 문화의 장점을 통합하려고 시도한다. 문화분리(separation) 유형은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고 고유문화를 고집하는’ 유형이다. 즉 기존 문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못하는 유형이다. 기존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거부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문화주변형(marginalization) 내지 탈문화 유형은 ‘자기문화와 주류 문화를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문화주변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느 문화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기존의 문화가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현재의 문화가치를 부정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다. 문화적응 유형에 대해서는 길은배,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윤인진,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2000); 심미경·유연옥, “아동의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응 문제행동,” 『교육심리학』, 17권 2호(2003) 참고.

계를 60년 넘게 지속해온 남북의 경우, 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며 단계별로 사회적 복합성이 증가할 것이고, 갈등의 내용이나 유형도 단순갈등을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시키거나 새로운 갈등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을 남북의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제도나 구조의 통합보다는 미시적이고 문화적 통합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사회통합의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성에 바탕을 두고, 제도의 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다문화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요소들을 고려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가치관, 정서, 정체성 등의 ‘비제도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 지구적으로 다민족·다문화 현상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맞이할 통일국가의 사회문화 통합 전략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전 지구적인 사회문화 갈등과 극복을 위한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 간 갈등과 통합 유형을 정리하여 ‘문화통합’의 개념을 정리하고, 통일 상황에 맞춘 적극적인 문화통합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해외분단국 통합사례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통합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통일 후 사회문화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의 양상을 추론하고자 한다. 사회 갈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 상황을 예측해 보고, 표출된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도 예측 가능한 사회 갈등 및 유사한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통합은 문화적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통합은 문화적 다양성이 주어진 규범 안에서 소통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통합 과정에서도 유용하다. 남북통일의 경우에 문화는 향유층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상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남북한의 문

화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세련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분단기간 동안 상이한 체제하에서 개인 및 사회를 지배해왔던 규범(規範), 가치(價値), 신념(信念) 등의 타성(惰性)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발생한다. 북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청소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성운리의 혼란과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교육제도 하에서 체계적인 사회화를 거쳐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 장년 이상의 세대들은 기존 체제에 익숙하고 재사회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새로운 체제에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극복의 의미는 제도적으로 하나의 통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화(differentiation)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문화를 다양화시키는 것이다. 계층에 따른 청소년문화·노인문화·가족문화 등, 지역에 따른 문화적 특수성, 성별 혹은 직업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를 통하여 계층 간, 직업 간, 연령대 간의 문화소통의 창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갈등의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함으로써 통합과정이나 통합 이후에도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분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통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가 본 연구의 실천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내용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문화통합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한 개념적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문화통합과 남북관계에서 통일과 민족, 다문화문제 등의 상관관계’, ‘사회통합과 문화통합의 관계’,



‘문화통합의 원칙’, ‘문화정책과 문화통합’ 등에 대한 세부 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논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사회통합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에는 문화갈등의 요인(이주, 지배, 종교, 이념)에 대한 분석, 문화갈등의 형성과정(갈등의 주전선, 적대적 관계 경험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문화통합의 지향점(단일문화 지향, 다문화 지향 등) 및 단위(개별국가 단위, 연합국가 단위 등)에 대한 분석 등이 진행된다. 이것을 위해서 문화통합의 다양한 사례를 단계별, 정책별로 재분류하고, 남북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양상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략이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사회문화통합’ 개념화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갈등 해결과 극복을 위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사례들의 문화 간 갈등과 통합 유형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재분류하여 문화통합 사례 조사의 기본 전략 수립과 정책의 모듈화를 지향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통일과정에서 능동적인 문화통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기존에 제시된 문화다양성의 개념흐름을 파악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진행하는데, 문화통합과 사회통합 관련 개념정립을 위해 기존연구 검토는 물론, 기존연구를 검토를 바탕으로 문화통합과 통일, 다문화사회의 문화통합 등 개념을 재정립한다.

문화갈등과 문화통합관련 유형분류 및 시사점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민족·인종갈등, 이주, 분단 등 갈등의 원인을 갖고 있는 모든 갈등상황에 놓인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연구로

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반도, 유럽연합(EU),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호주, 독일 베트남 등이 있다. 특히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는 분단의 과정과 연합의 단계, 단일 국가의 단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반도의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별 사회문화적 갈등의 양상과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론적 논의 및 개념 재정립과 사회문화갈등과 사회문화통합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회문화적 통합전략 마련에 기반이 된다. 따라서 사회문화갈등 국가의 유형 재분류와 통합정책의 비교, 그리고 통합정책의 비교를 한반도 통일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갈등과 통합 관계자,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적인 분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화적 갈등과 통합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연구 과제의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특성상 문화적 통합은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는 오랜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통합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복합갈등 지역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실질적인 사회문화통합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관련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갈등 해결과 극복을 위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화 간 갈등과 통합 유형을 정리함으로써, 문화통합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갈등 지형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통합에서 문화적 통합 전략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초 연구로서 통일과정에 동반되는 사회갈등과 통합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점은 통일한국의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한국 사회를 전망하는 시각은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나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비전은 유토피아적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에서 제시한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토대 위에서 정치적 자유의 보장, 경제적 풍요, 그리고 다양성과 자율성의 신장이 실현되는 조화로운 공동체’,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국가’, ‘구성원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문화적 다원주의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신장’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사회, ‘사회적 자원과 시설, 그리고 역할이 공정하게 배분되며 복지정책과 분배제도가 정착’된 사회이다. 또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가 소통되는 정의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sup>2)</sup> 통일한국에서 이러한 통일비전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sup>3)</sup>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사회비용이 극대화되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얻어 분리 독립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인 가정이기도 하지만 통일이 주는 결과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통일과정에서 무엇보다 남북 사이의 가치관과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 통합은 정치나 제도처럼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 요소로서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1), 175-187쪽.

3) 박형중은 정부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이 하나의 유토피아적 ‘완전한 사회’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수많은 도전이 극복되어야 한다. 박형중,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와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1차 세미나 자료집(2011. 10. 07), 11쪽.

## II. 문화통합의 개념과 남북문화 통합

### 1. 문화통합의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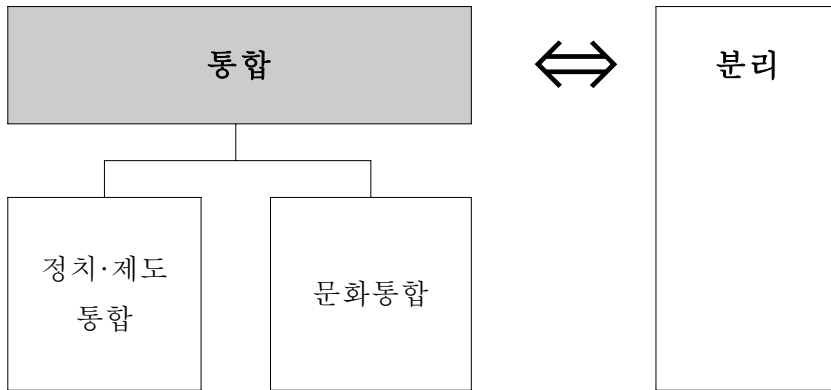
#### 1) 문화통합의 개념

두 개체가 관계 맺는 방식은 ‘통합’과 ‘분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개체가 독립해서 온전히 주체의 삶을 갖는 방식이 분리라고 한다면, 서로를 마주하며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국가들로 정치,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지구화된 국제사회의 현실뿐 아니라 특히 유일하게 분단된 현실을 안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이다.

이러한 통합의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바로 정치·제도의 문제였다. 이것은 세계의 흐름이었으며 한반도의 통일방안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구화됨에 따라 국가들의 다양한 충돌과 흡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치·제도의 통합뿐만 아니라 문화통합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다음은 이렇게 분리와 대별되는 통합의 구분에 관한 표이다.

[표 1] 통합의 구분



위와 같이 분리와 대별되는 통합은 정치·제도통합과 문화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래의 논의에서 통합이라 하면 정치·제도통합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논의되더라도 문화통합이 정치·제도통합에 종속되거나 통합문제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정치·제도의 통합을 이룬 국가들에서 문화통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화통합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통합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문화통합의 독자성과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통합의 개념을 기존의 정치·제도 통합과의 비교 속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문화통합의 유의미성과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통합은 말 그대로 통합에 있어서 ‘정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정의와 그에 따른 특징에 따라 문화통합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문화는 넓은 의미에서 인류의 집적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대단히 폭넓은 개념이다. 반면 좁은 의미로 정치·경제의 집적물과 달리 제도화·규범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포함하는 생활양식과 내용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통합의 문화는 좁은 의미의 정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문화통합을 정치·제도의 통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치·제도통합과 문화통합의 비교

정치·제도통합	문화통합
외적	내적
표면	잠재
단일성	다양성
단일문화	다문화
제도	비제도
구조	비구조
사회·정치	문화·정서
거시적	미시적
측정○	측정×
법, 법률, 제도	의식, 가치관, 정서, 정체성, 가치, 신념

위 표와 같이 정치·제도통합은 외적 통합을 강조하지만 문화통합은 내적 통합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정치·제도통합은 바깥으로 드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문화통합은 잠재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제도의 통합이 이뤄진 공동체에서도 문화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정치·제도통합은 단일성을 목표로 하지만 문화통합은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본래 문화라는 것은 다양성, 즉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정될 수 없는 개념이다. 문화라는 것은 남과 다른 나, 우리의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 즉 타자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정될 수 없다. 그에 따라 당연히도 타자를 인정해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일성, 계급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문화의 특징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게 된다. 결국 문화 내부의 문제에서도 정치·제도통합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면 제도 중심의 단일문화를 추구하게 되지만 문화통합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면 다문화를 기본으로 삼게 된다.

정치·제도통합은 제도적인 통합을 강조하지만 문화통합은 비제도적인 통합을 주로 다룬다. 이는 구조주의적인 접근과 비구조주의적인 접근으로 대비될 수 있다. 정치·제도통합은 제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구조를 합일하는 통합을 말하지만 문화통합은 제도로 포괄될 수 없는 비제도적인 문제들에 눈을 돌려 구조는 다를 수 있으나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배우는 장을 만들어내는 통합을 가리킨다. 단일 제도와 단일 구조로 획일화될 수 없다.

결국 정치·제도통합은 거시적인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문화통합은 문화나 정서와 같은 미시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정치·제도통합은 수치화하여 측정 가능하지만 문화통합은 측정 가능하지 않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예를 보면 정치·제도 통합은 법이나 법률, 제도인 반면 문화통합은 의식이나 가치관, 정서, 정체성, 가치, 신념 등이다.

문화통합의 개념 역시도 통합이라는 의미에 방점이 찍혀서 정치·제도통합의 문제점인 단일성과 식민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 글에서 말하는 문화통합이 아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문화통합은 문화적 다양성이 주어진 규범 안에서 소통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문화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문화의 다양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탈식민주의를 통한 다문화주의, 공존과 화해의 다문화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다문화의 바탕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문화통합은 결국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이는 다문화와 함께 문화적 공통성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문화통합을 이룬 문화공동체란 곧 문화의 가치가 소통되고 융합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는 제도의 통합을 넘어선 문화의 통합을 가리킨다. 이것은 결국 다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화통합의 개념은 같음과 다름을 함께 안고 있는 한민족의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하며 현대에 맞는 새로운 민족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 문화접촉과 문화갈등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문화전파(diffusion)이다. 문화전파란 글자 그대로 한 문화의 요소나 특성들이 다른 문화로 변저나가는 것을 뜻한다.<sup>4)</sup> 이 경우 특정한 문화적 항목이나 문화 유형의 전달에 의해서 문화가 전파된다.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씨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의류문화가 변화한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변동은 문화전파로 말미암아 일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대사회에서도 문화전파의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산아제한이 가족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문화이식(cultural acculturation)이다. 문화이식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 영향을 끼쳐, 그중 하나 또는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문화이식에는 문화적 동질화가 진행되거나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수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문화이식은 제국주의에 따른 식민화, 정복이나 전쟁 혹은 군사적 점령, 대규모의 인구이동의 경우 발생한다. 문화이식은 전체 사회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경제교역이나 관광, 노동자의 파견, 지식의 전파, 매스미디어 등이 문화이식의 통로가 될 수 있다.<sup>5)</sup>

문화 접촉이 문화변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경우 두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더욱 많다. 예를 들어 새로운 농업기술이 전파되면, 비록 그것이 더 많은 수확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기존의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저항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연예인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염색문화는 초기에 머리를 물들인 연예인의 방송이 불허되는 등 기

---

4) R. H. Lauer, *Social Change*(Boston, Allyn and Bacon, 1973), pp. 199-202.

5) W. E. Moore, *Social Change second edition*(N.J.: Prentice-Hall, 1974), p. 90.



존의 머리문화와 커다란 갈등을 겪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하나 혹은 몇몇의 문화적 요소나 특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전파의 경우에도 문화적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적 틀이 접촉하는 문화이식의 경우에는 문화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화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새로운 매체(new media)의 확산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문화가 이식됨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문화를 유지하여 왔던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갈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교포들이 미국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디지털문화와 아날로그문화의 갈등은 기술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의 폭이 적을 수 있다. 또한 이민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민국의 주류문화에 동화(assimilation)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갈등은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국주의 침략 혹은 전쟁의 결과로 문화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화갈등의 양상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문화이식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갈등 혹은 사회적 갈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세력이나 점령국은 문화이식을 정치경제적 지배의 영속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피지배국가나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예속화에 저항한다.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선교사들을 앞세워 식민지국가에 진출하면서, 토착종교와 갈등을 겪는 등 문화이식과 문화갈등이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다. 한국도 식민지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가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강제하거나, 이에 반대하여 조선인들이 조선말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심각한 문화적 갈등을 겪은 바가 있다.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갈등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이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이식의 경우가 문화전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갈등적인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침략과 착취 혹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정치경제적 갈등과 결합되기 때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문화이식으로 인

한 문화접촉이 문화전파에 따른 문화접촉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문화전파의 경우 문화의 부분요소들이 접촉함에 따라 접촉면이 제한적이다. 반면에 문화이식의 경우는 서로 다른 문화유형이나 문화체제가 총체적으로 접촉한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각각의 문화요소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유형을 구성하는 문화요소 가운데 가치나 규범과 같은 요소들은 다른 문화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변화에 저항적인 경향이 있으며,<sup>6)</sup> 외부적인 요소들과 갈등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접촉에 따른 갈등과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은 헌팅톤(S. P.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s)』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문명충돌론은 기본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국제정치의 변화를 전망하는 글이다. 헌팅톤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라 바로 문화라고 보고 있다.<sup>8)</sup>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은 서로 다른 문명은 항상 갈등관

6) 예를 들어 성에 대한 가치나 규범은 옷차림과 같은 유행에 비해서 변화의 속도가 훨씬 느리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제도와 같은 물질적 문화에 비하여 비물질적 문화의 변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Willan F. Ogburn, *Social Change*(N.Y.: Viking Press, 1922), pp. 200-212.

7) Samuel P. Huntington,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2, 3, Summer(1993). 단행본은 *The Clash of Civilizations*. 새뮤얼 헌팅턴 지음,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김영사, 1997) 참조.

8) 위의 글, 20쪽. 헌팅톤이 글에서 쓰고 있는 개념은 문명(civilization)이지만, 실제로는 문화(culture)의 개념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헌팅톤은 문명과 문화를 한 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세대들이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 가치, 기준, 제도,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문명은 크게 쓰인 문화이며, 역사적 근접성, 공동의 가치체계, 생활방식, 세계상,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정치적 사고방식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헌팅톤은 문명의 규정에서 종교를 강조한다. 그는 주요 종교를 구심점으로 세계의 문명을 1. 서구 기독교 문명(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2. 동방 정교 문명(슬라브, 그리스), 3. 이슬람 문명(북부아프리카에서 근동을 지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까지), 4. 힌두 문명(인도), 5. 중화 또는 유교 문명(중국과 그 주

계에 있으며, 특히 냉전체제가 해소된 이후 각각의 문명은 독자성을 심화시키면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팅톤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한 것을 결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서구문명의 승리로 보고 있지 않다.<sup>9)</sup>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리우드 영화나 코카콜라의 확산은 서구문화(기독교)의 확산이 아니라 단순히 대중문화의 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념에 기반을 둔 냉전적 갈등구조 대신에 점차 문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원천은 종교라는 것이다. 또한 각 문명은 국가와 연결되며, 대표국가는 패권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구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문명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슬람국가에 무기를 팔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경우를 볼 때, 이슬람과 유교의 동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은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는데,<sup>10)</sup> 헌팅톤의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뮐러(Harald Müller)라고 할 수 있다. 뮐러는 ‘헌팅톤에 대한 대안’이라는 부제가 붙은 『문명의 공존(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을 통하여 헌팅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sup>11)</sup> 헌팅톤의 이론적 출발점이 국제체계란 완전히 무질서한 혼란이며 각 국민국가는 그 안에서 권력투쟁에 몰두한다고 전제하는 현실주의라면, 뮐러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전통에 선 자유주의자 또는 비판적 근대화론자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위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6. 일본 문명, 7. 아프리카 문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의 글, 48-56쪽.

9)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굴복함으로써 ‘역사의 종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New York: Free Press, 1992) 참조.

10)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Foreign affairs*, vol. 72, no. 4, pp. 2-26 참조.

11) Harald Müller,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하랄트 뮐러 지음, 이영희 옮김, 『문명의 공존』(푸른숲, 2000).

12) 구춘권, “문명의 충돌과 공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두 가지 전망,” <http://jpreview.jinbo.net/journal/0012/chunkeun.html>.

필러에게 현대 정치체계의 전형은 권력국가가 아니라 교역 국가이며, 교역국가의 특징은 정부가 경제계의 요구에 개방적이고, 외교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계를 위시한 이익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 국가들은 세계내의 역동성을 강화하면서 경쟁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세계적인 수준의 근대화이며 결과적으로 문명 간 커뮤니케이션도 더욱 강화된다.

필러는 헌팅톤이 세계를 대결로 단순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적과 아군’의 전형적인 이분법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헌팅톤이 문명충돌의 예로 들고 있는 걸프전이나 보스니아내전 등이 실제로는 인종이나 영토문제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유교 동맹의 증거로 삼고 있는 중국 및 북한의 무기 판매의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 판매국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호전성에 주목하는 헌팅톤의 단선적인 이해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과 ‘공존’이라는 상반되는 글 제목이 상징하고 있듯이 헌팅톤과 필러의 견해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와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도 문명(혹은 문화) 갈등이 극복가능한가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헌팅톤은 문명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까닭에 가능한 한 접촉의 면을 줄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필러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수준의 근대화라는 사회변화과정 속에서 각 문명은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헌팅톤은 문명의 주체로서 국가를 강조하는 반면, 필러는 범국가적인 NGO나 ‘CNN’ 등의 다양한 사회조직을 문화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갈등에 대하여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학자는 사이드(Edward W. Said)라고 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사이드는 그가 살아온 지역에서 배태된 경험으로부터 서구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서구중심주의 편견의 골수들을 해체하는 데 그의 지적 작업을 집중시켜 왔다. 서구인이 동양인에 대해 가진 편견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른다.<sup>13)</sup> 그에게 “오

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알지 못하는 타 문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문화적 편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서양의 동양 지배 프로젝트와 맞물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과학적 “표상 체계”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을 자본주의 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심지어 사회주의자들까지도 공유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동양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칼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부뤼메르 18일”에 나오는 말이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론은 무엇보다도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적인 사고관에 대한 해체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sup>14)</sup> 문명/야만, 선/악, 정교도/이교도, 물질/정신과 같은 서양과 동양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검토한 결과, 그에 의하면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곧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으로 “문화적이고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동양의 모습들을 제도나 어휘, 학문, 심상, 강령, 심지어 식민지 관료체제나 식민지적 스타일에 도움을 받아 하나의 담론 양식으로 표현하고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압축해서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고 권위를 세우려는 서양의 스타일이라는 것이다.<sup>15)</sup> 사이드가 추적하고 있는 점은 서양의 정치적인 폭력

---

13) 팔레스틴 출신 사이드는 서구 지식-체계의 담론과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사이드는 팔레스틴인이면서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의 강력한 비판자이면서도 동시에 회교 분리주의에도 반대하는 그의 정치적 입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교보문고, 1991);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도서출판 창, 1995) 참조.

14) 우실하,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문화 바로 읽기』 (소나무, 1997), 210-212쪽.

15)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과 탄압의 증거들이 아니라, 서양의 동양에 대한 지식 축적 과정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렇지만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들과 스타일들이다. 그래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하나의 담론으로 고찰하지 않고서는 유럽문화가 동양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상적으로 다루어왔고 생산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제국주의의 이해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즉 제국주의는 문화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구의 제국주의 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제국주의가 외면적으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사이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를<sup>16)</sup> 통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을 강조한다. 탈식민주의는 비단 식민지 시대뿐 아니라 독립을 한 후에도 계속 남아 파괴

---

(Orientalism)』, 3쪽.

- 16) 사이드로 시작되는 탈식민 이론이 전통적인 반식민 저항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이론이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프랑스 철학에 힘입어 서양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휴머니즘과 역사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주의는 역사가 발전되거나 모든 인류가 보편적인 인간성을 회복하였을 때 극복된다는 식으로 식민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는 서구와 비서구의 존재 방식 자체이며 이들의 대립 관계가 식민지 문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탈식민 이론은 학문의 세계에서 새로운 담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과거의 반식민 저항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이론의 의의를 일반적인 탈식민주의 문학과 어느 정도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설명한 탈식민주의 문학을 탈식민주의 문학 비평(postcolonial criticism), 그리고 사이드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탈식민이론(postcolonial theory)이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고부웅,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http://member.namo.co.kr/~hrsong/text3-4.htm>;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3』 (또하나의 문화, 1994);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호(1992) 참조. 탈식민주의는 문화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역사학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제기된 바 있다. 역사분야의 탈식민주의론에 대해서는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0) 참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식민지의 잔재를 탐색해서 그것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것들에 대항하자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시적인 억압보다 비가시적인 억압구조를 다루며 직접적인 해방과는 차이를 보이는 상징적인 식민성을 다루게 된다. 특히 현대와 같은 문화적 합병 상태에서는 다문화적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 중심적인 메트로폴리탄 권력과 그들이 만든 경전적 지배문화를 폐지하고, 주변에서 중심의 언어를 전유해서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사이드의 전망은, 문명 간의 우열과 갈등이 아닌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리고 동양 대 서양, 기독교 대 이슬람 및 유교의 대결을 의미하는 문명충돌과 헤게모니 쟁탈전이 아닌 공존과 화해를 통해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팅톤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문화적 우월감과 문화·인종적 편견이 내포되어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문명충돌론은 대결과 갈등으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라고 보고 있다.

헌팅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뮐러와 사이드는 공유점이 있다. 특히 헌팅톤은 문화갈등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뮐러와 사이드는 문화공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확연하다. 그러나 뮐러와 사이드의 헌팅톤 비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뮐러의 경우는 실용주의 그리고 근대화라는 세계사적인 추세에서 타문화와의 갈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사이드는 다른 문화의 인정을 통하여 문화적 갈등이 문화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뮐러가 문명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구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드가 헌팅톤이나 뮐러와 다른 또 다른 점은 문화갈등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헌팅톤이나 뮐러는 서로 다른 문명이나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사이드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

---

17)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28-29쪽;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14쪽.

특히 문화제국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문화적 갈등이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서구 문화가 낯선 문화를 구별하고,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해 낯선 문화에 대한 서구문화의 우월주의적인 담론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 갈등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갈등에 대한 헌팅톤, 월러, 그리고 사이드의 견해는 서로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갈등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지만, 문화적 공존을 생각하는 월러나 사이드의 경우에도 문화갈등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은 일반적인 문화적 갈등의 양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여 왔으며, 현재도 언어를 포함하여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요소들이 적지 않다. 현재 남북한 문화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발전시켜오면서 이에 적합한 문화구조가 형성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적 역사적 경험의 차이로 문명충돌이 생겨난다는 헌팅톤의 입장은 남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명충돌이 국제적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방향성도 남북한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는 사회정치적 차이에 따라 문화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이드의 이론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남북한 간의 문화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남북한 문화유형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문화적 차이보다는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정치경제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남한은 자본주의 이념에 따른 문화적 유형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문화를 강조하면서<sup>18)</sup> 상대 문화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남북한이 상대 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체제경쟁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우월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남북한 문화갈등이 문화 자체보다는 남북관계라는 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던 시기에는 상대 문화에 대한 부분적인 접촉마저도 금지되어 있었다. 현재에도 남한의 경우는 보안법이라는 법적 규범으로 북한 문화를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의 향유가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남한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평가가 기초를 이루었다.<sup>19)</sup>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최근에는 대중가요를 비롯한 남한문화 수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남북한 문화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었으며, 통일을 지향한다면 문화적 갈등은 종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통일의 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문화는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명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헌팅톤과 달리 문화공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이드의 견해가 더욱 적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드는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문화관뿐만 아니라 이에 반발하여 제3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수주의적 문화관도 반대한다. 대신 그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주장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적대적인 문화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18) 남북한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개념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 『통일연구』, 2권 2호(1998) 참조.

19) 1985년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이루어졌던 예술단 공연 이후 남북한이 각각 언론 등을 통하여 상대 문화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통일논총』, 17(1999) 참조.

### 3) 사회문화적 통합

‘무엇이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가’에 대한 고전적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크게 체제통합과 사회활동의 통합으로 대별할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구성원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사회활동의 통합’(societal integration)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회통합에 대한 시각에는 사회통합의 발생을 보는 시각에 따라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 첫째는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기회·권리의 평등성 확대와 소통의 확대에 기초한 연대성의 확장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 둘째는 통합을 통제에 기초한 획일성의 증가로 보는 부정적 시각, 셋째는 사회적 관계의 조직화된 패턴을 기술하는 가치중립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남북한 문제와 관련된 사회통합 개념은 분단국 통합사례를 연구하면서 등장하며 또한 학자에 따라 상이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남북한,<sup>20)</sup> 독일<sup>21)</sup> 통일의 연구에서 사회통합이란 분열되어 있던 두 주민 집단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어떤 사회의 이상적 통합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베트남 통일사례 연구<sup>22)</sup>에서는 억압과 강제를 통해서라도 남북베트남이 분열하지 않고 통합 상태를 이루어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

20) 최협,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논단』, 제6권(1992); 이은숙, 『남북한 사회 통합론』 (삶과 꿈, 1997) 참조.

21)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26호(1995); 김택환, “독일통일후정치경제사회통합의 애로가 한국통일에 줄 교훈,” 『한국교원대학교수논총』, 제9-1호(1993) 참조.

22) 박종철,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 『영남대통일문제연구』, 제16호(1994); 공유식, “베트남의 사회통합: 국가형성의 조건과 과제,” 『아주사회과학논총』, 제7호(1994) 참조.

사회통합을 이상적 차원에서 설정한 경우에도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 일부학자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도, 문제핵심으로서 남북한 문화·정서적 이질성과 그 극복을 상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협은 “사회통합의 궁극적 해결의 열쇠는 50년에 가까운 분단 때문에 야기된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와 의식구조의 이질화의 극복의 문제”라고<sup>23)</sup> 주장한다.<sup>24)</sup> 이에 대하여 사회통합에서 문화·정서적 차원보다는 사회·정책적 차원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장경섭은 통일의 과정에서 특히 북한주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헌법적 권리”라는 뜻에서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사회통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5)</sup> 한편 전태국은 체제통합과 사회통합을 구분하는 록우드(Lockwood)와 하버마스(Habermas)의 개념을 활용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하버마스의 논의를 빌려 화폐와 권력의 체계 규제적 구조가 생활세계의 상호이해와 합의의 사회통합적 구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내적 식민지’가 되는 것으로 말하면서, 체제통합만 몰두하는 경우 결국 북한을 남한의 내부 식민지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사회통합은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구조와 행동모형에의 행동적 및 의식적 동화의 과정을 의미하여야 하며, 파슨즈의 지적처럼, 사회의 공통적 가치가 사회체계의 구조적 요소 안에 제도화되고, 공통의 가치모범과

23) 최협,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80쪽. 한편 이온죽은 ‘통일시대의 정신적 구심적 확립’을 사회통합의 핵심문제로 제시한다. 이온죽, 『남북한 사회 통합론』, 47쪽.

24)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전성우와 김택환은 제도통합의 결과이자 전제로서의 동서독 주민간의 거리감의 극복을 통한 인간적 통합을 사회통합의 핵심문제로 제시한다.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택환, “독일통일후정치경제사회통합의 애로가 한국통일에 줄 교훈,” 참조.

25) 장경섭,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이종석 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431쪽.

26) 전태국, “사회통합의 전망과 과제,”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발표논문집(2000), 117-118쪽.

행동지향이 내면화될 때 사회통합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의 가치는 뒤르켐이 이야기하는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구성하며 가치적, 규범적 표준들이 효과적으로 내면화되어 사회의 성원들이 집합의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이해를 통해 ‘내적통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내적통일이란 국가질서의 가치기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태국은 공속감을 강화시키는 구속력 있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은 말할 것도 없이 남한 사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주민들이 내면화하는 것을 통합으로 간주하고 있다.<sup>27)</sup>

박형중은 독일의 사회학자 오페(Claus Offe)의 이론을 적용하여, 이러한 상이한 낚임스와 강조점을 포괄하는 사회통합 개념을 사용하기를 주장한다. 오페에 따르면, ‘통합’이란 지속성, 안정, 신뢰성 있는 행위조정과 참여라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sup>28)</sup>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의 거시적 통합은 정치, 경제, 또는 문화의 세 차원을 주축으로 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 ① 문화적 차원의 통합방식: 역사, 언어, 문화와 종교에 의해 논증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 사회의 통일성에 대한 (때로는 매우 국수주의적) 관념에 의한 사회통합.
- ② 정치적 차원의 통합방식: 헌법규범의 강력한 구속력, 억압적인 (경우에 따라 매우 억압적인) 정치제도, 그리고 이들이 정치갈등을 조절하고 집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에 의한 사회통합.
- ③ 경제적 차원의 통합방식: 투자, 생산, 소비의 상호관련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복지와 안전의 상식적 기준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사회통합. 분배 관련 갈등은 그 종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통합에 이바지할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다.

---

27) 위의 글, 120쪽.

28) Claus Offe,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m Neuen Osten*(Frankfurt/New York: Campus, 1994), pp. 230-276.

오페에 따르면 잘 통합된 사회는 세 차원 모두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을 수 있다. 서방 중심국가의 경우에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법치를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대량소비 체계, 문화적으로는 제도체계에 대한 충성심과<sup>29)</sup> 대중문화 등의 다차원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회통합이 일어난다.

그러나 취약한 통합이라는 조건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중 어느 한 차원이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조정 메커니즘의 주축을 이룬다. 예를 들어 구동독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민족의식에 기초한 문화적 통합은 기능하지 않았으나, 동유럽에서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뜻에서 주로 경제적으로 통합된 사회였다. 이에 비해 폴란드, 헝가리 등은 주로 민족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던 국가였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주로 억압적 정치지배에 의해서 통합된 국가였다.

오페의 개념 설정은 한 사회의 통합 상태에 관하여 매우 분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오페의 분석을 볼 때, 통합의 상태, 즉 “지속성, 안정, 신뢰성 있는 행위조정과 참여”는 반드시 어떤 사회가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거 동독의 통합이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적 부자유와 억압, 그리고 민족문화적 정체성의 부재 하에서도 ‘지속성, 안정, 신뢰성 있는 행위조정과 참여,’ 즉 통합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설정에서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어떤 사회가 통합을 이루는 핵심 중추가 어떠한 것인가, 즉 그것이 정치적 차원의 것인가, 경제적 차원의 것인가 또는 문화·정서적 차원의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오페의 개념

---

29) 정치·경제·사회적인 여러 제도가 성립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문화, 행태, 규범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헌정체제는 민주 시민적 정치문화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독일식 표현에 따르면 ‘헌법(적 조항, 규범과 절차)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하다. 제도와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Ibid.*, pp. 57-80.

은 어떤 사회가 붕괴하지 않고, ‘지속성, 안정, 행위조정과 참여,’ 즉 거시적 사회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도와 상태, 그리고 그러한 통합의 정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개념이라는 것이다.<sup>30)</sup>

오페의 개념은 보다 사회통합을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의 하위체제 분야별로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오페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오페의 논의가 사회통합의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틀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특정 이론보다는 이미 시행중인 사회통합정책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윤인진의 주장이다.<sup>31)</sup> 그는 기존의 남북한 사회통합논의를 검토하고 나서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시사점이 높은 사례로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말하고 있다.

사회통합 논의에 탈근대성(post-modernity)을 도입할 경우, 사회통합은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제도나 구조의 통합보다는 미시적이고 문화적 통합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사회통합의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성에 바탕을 두고, 제도의 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다문화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요소들을 고려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가치관, 정서, 정체성 등의 ‘비제도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0)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북한사회연구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1997), 129-132쪽.

31)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학회 2001년도 춘계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2001) 참조.

사회통합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전지구화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의 문제이다. 다문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가 구성의 역사적 특성으로 다문화 및 다민족 문제가 일찍부터 내재함으로써 다문화정책이 공식적인 정책 아젠다에 편입된 경우로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가 있다. 둘째, 이주노동력의 유입 증가와 같이 경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특성이 급격히 표출된 경우는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한국 등이 있다.

그리고 통합의 반대 개념으로 분리주의가 있다. 분리주의란 일반적으로 통상 제도화된 하나의 국가체제 안에서 지역이나 그룹이 분리, 독립하려는 운동을 지칭한다. 분리주의는 특정 집단의 사회적 고립이나 분쟁을 의미하거나 정치적 제도나 기관으로부터 독립 내지는 자치권을 얻고자하는 운동이다. 분리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제도화된 체제가 자신들을 억압하거나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리주의 운동은 사회적 차별이나 불공정의 정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운동의 성격이 갈린다. 캐나다 퀘벡주,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연방 탈퇴 등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평화적 분리운동이다. 반면 분리주의는 강제적 점령과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서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분리 독립이나 스페인의 바스크 독립운동, 인도의 시크교 분리주의, 러시아의 체첸 경우처럼 게릴라적 분쟁에서 출발한 대규모의 장기적 시민전쟁의 양상이 있다. 분리주의가 작동되는 이유는 다양하며, 지역이나 역사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로 나뉜다. 폭력적인 분리주의 운동은 애국심이나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다. 아일랜드의 분리주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적 차이가 원인이며, 바스크 분리주의는 고유 언어와 문화를 억압한 프랑코 독재에 대한 반발이 원인이었다. 이탈리아는 경제적 불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2. 문화통합과 남북관계

### 1) 통일한국과 사회통합

통일한국 사회는 분단 체제의 남북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는 결과인 동시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출발이라는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60년 넘게 지속해 온 적대적 대타성이 극복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이질적인 체제 하에서 생활했던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국가의 새로운 체제 속으로 동시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정치체제로 인해 배태된 남북 문화의 대규모 접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2)</sup>

남북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문화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남북 간에도 남한사회의 개인주의와 북한사회의 집단주의는 남북의 의식구조와 삶을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비록 규범적,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된다고 해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은 내적 불만 그 자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화 될 경우, 통일이라는 의미 자체를 반감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도적, 규범적 통합이 곧바로 내적 통합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 통일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조약 제 35조 제1항은 “분단 시대의 상이한 문화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은 독일 민족의 일체감을 지속시키는 기반”이라고 명시하였다.

남북의 정치적 제도적 통일과정은 남북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발전방향의 모색이라는 이성적 목표와 함께 남북이 문화공동체로서 통일과정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공동의 가치를 형성해가는 감성적 목표를 갖고 있다. 문

---

32) 문화의 개념은 다양하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생활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문학예술이나 전통문화, 종교 등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는 문화를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학문·예술·도덕·종교 따위 물심양면에 걸치는 생활 형성의 양식과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는 신기철·신용철 엮음, 『새우리말 큰사전(상)』(삼성출판사, 1992), 1248쪽 참고.



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한 통일은 그 자체로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외형적인 통일,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남북의 사회문화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은 남북 사이에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상태를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3)</sup>

사회적 연계 혹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멤버간의 공통성과 동일성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통합 혹은 원리주의는 공통성과 동일성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의 유용성과 진보 가능성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민족이나 혈연에 기반을 둔 자기 본래 구성원 집단, 소속집단의 고유성에 집착하지 않고, 타문화를 수용해 나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연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시사회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의 사적인 생활과 감정의 기록물인 일기나 블로그를 통해 타인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이것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론적 확인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타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해받고자 하듯이 우리 또한 타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한국의 사회는 내셔널리티(국적, 민족)와 에스니시티(인종)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그렇듯이 현저하게 다른 문화를 영위하는 에스닉 그룹을 안고 ‘국민국가’를 초월한 이질적 민족이나 문화와의 공존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sup>34)</sup>

---

33) 장경섭, “남북한 사회통합의 내용과 방송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문화방송, 1997).

34)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외국인의 비율이 2%가 안 되고 있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위스는 2003년에 20%, 미국도 12%에 다다른다. 극우세력이 있는 독일도 외국인의 비중이 8.9%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부의 통합과 함께 내부 소수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존중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안고도 북미와 유럽은 지역통합체를 구성하였으며, 지역통합체는 국가의 정체성을 없애기 보다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기반 위에 유럽연합이라는 집단별 정체성을 하나 더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의 내부에서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용인하고, 문화의 공존이 가져오는 플러스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주장 내지는 운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국민국가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에 의해 성립해야 한다는 ‘동화주의’에 기초한 국민통합의 정책을 다소 약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일국문화와 타문화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sup>35)</sup>

## 2) 통일한국과 문화통합

통일 논의에 있어서 사회통합, 문화통합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관은 정치 중심 통일의 협의의 개념과 문화적 차원의 광의의 통일관이 있다. 좁은 의미에서 통일은 정치개념과 하나의 제도로 구성된 정치체제가 집단구성원 모두를 규제하는 개념이다. 광의의 통일은 구성원들의 생활공간의 통합, 경제체제의 통합, 문화통합, 의식통합, 정치통합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 보는 것이다.<sup>36)</sup>

35) 히라노 겐이치로 지음, 장인성·김동명 옮김, 『국제문화론』 (폴빛, 2004), 241쪽.

36)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127쪽. “통일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각기 다른 개념을 적용함에 따라 용어의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통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협의의 절대적 통일관이다. 이러한 관점은 통일을 정치통합과 동일시한다. 여기서 정치통합이란 하나의 기본이념과 하나의 제도로 구성되는 하나의 정치체제가 집단구성원 모두를 규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헌법체계를 가지게 되는 상태를 정치통합으로 보고 통일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는 광의의 상대적 통일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민족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영역이 전 영토로, 전사회로 확대되어 생활공간의 통합, 경제체제의 통합, 문화통합, 의식통합, 정치통합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를 통일로 보며, 통일을 ‘연속변량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통일을 양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정도의 차로 이해하며, 정치통합은 통일의 한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협의의 절대적 통일관을 취할 경우 사회통합은 통일과 전혀 별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정치적 통합이 달성되고 난 이후 구성원 간의 상호교류과정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가

문화통합 문제는 통일한국의 남북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삶의 문제를 포괄한다.<sup>37)</sup> 통일한국의 문화 통합은 어느 한 편으로의 통일이나 통합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문화통합은 문화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통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남북의 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의 문화는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내는 전 과정의 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을 의미한다.<sup>38)</sup> 결론적으로 문화공동체란 곧 문화의 가치가 소통되고 융합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화적 소양과 소통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타자(통일, 북한)가 갖는 고유한 본성적 성질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고유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결과로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타자의 타자성

---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광의의 상대적 통일관을 취할 경우 사회통합은 통일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며 정치적 통합의 이전과 이후에 일어나는 구성원간의 상호교류 전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37) 유네스코(UNESCO)에서 1983년 규정한 문화의 개념에 의하면 “문화는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특정 지워주는 고유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복합체인 전체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는 문학과 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문화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부분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반성토록 하는 것, 우리를 비판적인 판단력과 도덕감을 지닌 진정한 인간이요 합리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이다. 가치기준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것, 인간이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알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자신이 성취한 것에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초월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바로 문화를 통해서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문화라는 것을 인간이 만든 성과의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의 차원에서 보면서 사회나 개인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을 강조한 것이다.

38) 한만길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의 실태』 (통일연구원, 2004), 4쪽.

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상으로서 본질적 특성을 무시하게 되고, 그 특성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한다. 남북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공통성과 차이점은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가 아니다. 동질성 회복이란 질적으로 같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질적으로 같게 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한다는 강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양자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로 균일하게 한다는 것으로 폭력화 될 수 있다. 남북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공통성에 기초하여 공통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야 한다.

둘째, 인본주의에 입각한 고통의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타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통일 논의에서 타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근본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성이 배제되어 있다. 승자독식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통에 대한 이해가 통일문제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sup>39)</sup> 남북은 상호 적대성에 기반을 둔 체제 정당성을 강조하였고, 국가 폭력의 구조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통해 상대에 대한 적대와 공포로 변형되어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에는 민주화와 시민 사회의 발전으로 소통의 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상호적대성을 기반으로 국가 폭력이 여전히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정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

39)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 그 자체가 ‘트라우마’이다. 남북은 분단 이후 전쟁과 분단체제가 강화되면서, 국가 폭력이 일상화되고 합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분단의 트라우마는 치유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지배질서를 강화하는데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작동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정당성을 명분으로 한 폭력성에 노출되어 있다. 분단체제하에서 남북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을 겪어 왔으며,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과정은 피해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종속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유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처음부터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대립적 이원주의로 구축된 남북의 개념체계를 성찰하면서 이분법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존재가 있고,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 남북의 관계는 남북이 있음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 남북 사이의 관계는 대립과 경쟁,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관계가 강요되어 왔다. 남북 사이에 대립적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삶을 고찰하기 위한 일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 논의는 체제의 통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체제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일 논의는 국가체제의 정통성 문제와 맞물리면서 ‘통일체제’나 ‘통일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상호 대립을 양산하거나 이상적인 통일 논의로 빠져들 수 있다. 이 사이에서 통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민중(국민, 민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나 생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상이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이며, 거대권력이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되는 지점이다. 호기심이나 낯설음이 아닌 인간의 모습에 관심을 두고, 사회과학의 개념, 구조, 체계의 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조망해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해외동포 문제와 연관된 삶의 방식에 대한 통합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통일 문제에서는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통일과 관련한 어떤 논의든 남북과 해외 한민족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통합대상으로 민족이 있는 한 어떤 논의가 되어도 그것은 민족을 대상으로 한 민족주의 내지 민족의 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느냐,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는 논의와는 별개 차원의 논의이다. 통일은 결코 정치나 경제, 법제도적 통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민족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한 민족구성원들의 삶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성적 당위성과 함께 감성적이고 생활적인 방식의 공감을 통해 움직인다. 정치, 경제, 법과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고 동력을 불어넣는 인간적 삶의 방식에 대한 통합에 주목한다.

### Ⅲ.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유형과 사례

#### 1.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유형

##### 1) 문화갈등의 유형화

다른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문화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정도와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요소가 접촉하는 문화이식에 비해서 문화유형이나 문화체계가 접촉하는 문화이식의 경우가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또한 접촉하는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어느 정도 다른가 하는 점도 갈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조 말기에 유입된 천주교가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 것은 두 문화가 근본 가치부터 행위규범까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과거 유교문화권이었던 중국문화와 한국문화가 접촉하거나, 현재 미국문화와 유럽문화가 접촉하는 경우는 문화적 갈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문화갈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문화가 접촉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는 문화적 갈등이 보다 첨예화될 수 있으며, 문화주체들 간의 관계가 조화롭다면 문화적 갈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적대적인 상황은 국가 간의 관계와 같이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계급 혹은 집단과 같이 사회체제 내에도 발생할 수 있다. 제국주의 침략기에 나타나는 제국주의 문화와 식민지문화의 갈등이 앞의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나 라틴아메리카와 서구문화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갈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sup>40)</sup> 반면에 한 사회체제 내에서 계급을 포함한 집단 간의 적대적인

---

40) Fred E. Jand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cond edition*(London: Sage

관계가 문화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로 자본가 문화와 노동자 문화의 갈등이나 미국 등지의 흑백인종 간 문화적 갈등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문화적 차이의 정도와 문화접촉의 상황은 상호 결합되어 문화갈등의 정도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표 3] 참조).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상황이 비적대적이라면 문화적 갈등은 심각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문화갈등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주체 간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면 문화적 갈등은 증폭되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크고 문화주체 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문화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고 관계도 비적대적이라면 문화갈등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표 3] 문화갈등의 유형

문화 차이 정도 문화 접촉 상황	문화 차이 정도	
	차이가 많음	차이가 적음
적 대 적 상황	㉠	㉡
비적대적 상황	㉢	㉣

㉠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미국과 아랍근본주의 문화 간의 갈등

㉡ 문화갈등이 실제보다 증폭되어 나타남: 종교 개혁기 신구교의 갈등

㉢ 문화갈등이 제도화되어 문화변동으로 이어짐: 해방 후 미국문화와 남한문화의 갈등

㉣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유럽문화와 미국문화의 갈등

Pub., 1998), pp. 75-76; Kay B. Warren, "Interpreting La Violencia in Guatemala," Kay B. Warren, ed., *The Violence Within: Cultural and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29-50; Davida Wood, "Politics of Identity in a Palestinian Village in Israel," Kay B. Warren, ed., *The Violence Within: Cultural and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87-116 참조.

문화적 차이와 문화주체 간의 관계 이외에도 문화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 상대문화를 접촉한 경험의 유무,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의 정도, 미디어 등 문화를 전달하는 통로의 종류, 갈등의 역사적 경험, 언어 등 의사소통 수단의 이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문화접촉과 문화갈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그러나 문화갈등이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갈등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며, 정치적 갈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문화제국주의에 반발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탈식민지적인 저항문화운동의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sup>42)</sup>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중문화운동의 경우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sup>43)</sup>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은 앞의 유형가운데 ㉠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각각 자본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문화체제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오랜 기간 같은 문화를 공유하여왔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같은 언어를 갖고 있으며,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가족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여 많은 문화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자체의 요인보다는 문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며, 문화적 갈등은 남북한의 사회정치적 갈등에 의해

41) Fred E. Jand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cond edition*, ch. 3, ch. 4 참조

42)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337-451쪽; Michael Hanchard, "Culturalism Versus Cultural Politics," Kay B. Warren, ed., *The Violence Within: Cultural and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Boulder: Westview Press, 1993), 참조.

43) 한국사회의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최승운 외, 『문화운동론2』(공동체, 1986) 참조.

44) 남북한 문화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통일연구원, 1994) 참조.



서 증폭되기도 하며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은 전쟁을 통하여 상호적대감을 증폭시켜왔기 때문에 문화적 적대감도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문화의 적대적 관계가 남북한 양 체제의 갈등을 확산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만든 남한 비판 영화나 남한에서 만든 반공영화 등은 단순히 문화적 갈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대심을 강화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문화갈등 국가의 유형화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논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사회통합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갈등에 대한 분석은 문화갈등의 요인(이주, 지배, 종교, 이념)에 대한 분석, 문화갈등의 형성과정(갈등의 주전선, 적대적 관계 경험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문화통합의 지향점(단일문화 지향, 다문화 지향 등) 및 단위별(개별국가 단위, 연합국가 단위 등)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갈등은 생성, 증대, 감소, 그리고 소멸의 양상으로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은 끊임없이 생성되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증폭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한다.<sup>45)</sup>

갈등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식(보상, 포기, 타협, 초월 등)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감소 또는 소멸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한의 문화통합 과정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문화통

45)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들녘, 2000), 217-223쪽 참고.

합의 다양한 사례를 단계별, 정책별로 재분류하여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양상과 이를 관리하는 필요한 전략이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사례와 정책적 대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갈등사례 및 통합사례와 시사점 재분류를 통하여 정책의 모듈화 과정이 필요하다.

[표 4] 문화갈등의 원인과 관계

구분		관계		
		과정	연합	단일
원인	민족·인종	아일랜드	EU(국가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주	이스라엘	EU(국가 내)	캐나다, 호주
	분단	한반도	중국(홍콩)	독일, 베트남

문화적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통하여 각국을 유형화하면 위와 같다. 문화갈등의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민족이나 인종의 종족적 요소이다. 국제 분쟁의 모델로서 민족적 분쟁은 이민족 사이에 발생한다. 남북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신화가 유지되어 오면서 민족적 갈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장 이후 민족적 차별성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족문화의 정통성에 김일성 가계의 정통성을 결합한 ‘김일성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김일성 민족’, ‘민족의 태양’, ‘김일성민족의 언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민족적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다.<sup>46)</sup> 2000년

46)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에는 주체연호와 태양절 제정, 김일성 영생탑 건립, 국제김일성상 제정 등의 사업을 통해 김일성 주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김일성 주석 = 민족’이라는 등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1997년 7월 28일에는 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언어학 학술발표회’에서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김일성 민족의 민족어’로 규정하고, 언어예절 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는 등 ‘김일성 민족(태양민족)’이라는 우월적 선민사상에다 민족적 정서로서 ‘아리랑’을 결합하여 ‘아리랑 민족론’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영선, “북한

이후에는 남북의 민족적 차이를 언급하면서 남북의 민족적 차이를 강화하고 있다. 즉 남북이 단일민족이었지만 남한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행하면서 민족적 순수성을 상실해 나아가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까지는 체제우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이 다른 민족이라는 논리로 확대될 것이다. 둘째, 이주에 의한 갈등은 남북의 문화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인구이동의 사례가 될 것이다. 남북통합 과정에서 경제적인 요인이나 기타 이유로 상당한 인구이동이 예상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인구이동은 새로운 갈등의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남북 사이의 이동은 단순한 지역 간의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기존의 생활방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이주보다 정도는 낮겠지만 여전히 새로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 여지를 안고 있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인구이동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측면에서 문화정책이 작동되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는 분단이다.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독일, 베트남 등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 한반도는 어느 국가보다 치열한 이념갈등을 겪으면서 분단의 상황이 국가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체제적 차원의 대립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한반도문제는 세계 및 동북아 차원의 일반적 의미와 함께 분단에 의한 냉전 종식의 과정이라는 복합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슈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안보 이슈로부터 인도주의적 이슈까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어, 동북아 차원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전제가 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며,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하여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단국가의 문화통합 사례는 오랫동안

---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4권 1호(2011) 참고.

동안 이질화된 상황에서 적대적 문화가 양산되었던 체제의 통합이라는 의미와 주변국들의 협력체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 2.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사례

### 1) 아일랜드

#### (1) 갈등 양상

아일랜드는 남북한 관계와 유사한 문화적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침략과 대규모 이주,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종교 갈등으로 심각한 문화갈등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북아일랜드는 내전을 경험하였고, 이후 신교교로 갈라져 테러를 비롯한 폭력적 보복을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150년대에 교황에 의해 영국에 양도되어 12세기에 부분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아일랜드에서는 전쟁, 반란, 재산몰수가 잇따랐고, 16세기에 영국의 지배지역이 확대되면서 아일랜드 공동체의 발전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아일랜드의 전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주하여 정착하는데 성공했다. 17세기가 훨씬 지난 뒤, 인구는 다시 늘기 시작했고, 1700년에야 겨우 200만이 되었다. 한편으로 가톨릭 지주 대신 신교도 정복자들이 들어서면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쌓여갔다.<sup>47)</sup> 1640년의 반란은 영국의 크롬웰에 의하여 가혹하게 진압되었고,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가혹하게 실시하였다. 신교도의 영국과 가톨릭인 아일랜드는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부재지주와 소작농이라는 계급적 문제까지 결합되어 갈등은

---

47) 피터 그레이(Peter Gray) 지음, 장동연 옮김, 『아일랜드 대기근』(시공사, 1998), 14쪽.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45년부터 1847년에 걸친 감자파동의 대기근으로 11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비슷한 수가 미국 등지로 이민을 떠나 인구의 1/4이 감소할 정도였으나, 영국정부는 이를 방치하여<sup>48)</sup> 적대감은 더욱 심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증폭되어온 영국과 아일랜드의 갈등은 외면적으로 종교적인 갈등으로 보이지만,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 지주와 노동자라는 계급적 문제, 그리고 민족의 문제까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인들은 반란이나 민중봉기 등을 통하여 저항을 가속화하였고, 민족주의를 기치로 한 저항운동은 독립을 선언한 1916년의 부활절 봉기로 절정을 이루었다.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은 내전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22년 신교도가 우세한 북부 얼스터 지방을 제외한 아일랜드가 ‘자유국’으로 독립하지만 여전히 영제국의 일부로 남아 있다가 1949년 정식으로 공화국으로 인정받게 된다.<sup>49)</sup>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영국 소속으로 남아 있었던 북아일랜드에서는 민족주의 성향의 신페인당을 중심으로 한 구교세력과 친 영국계 세력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sup>50)</sup> 1968년부터 구교의 시민권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1972년 ‘런던데리(Londonderry)’지역에서 영국 군인이 시위군중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sup>51)</sup> 1981년 단식투쟁으로 10명의 공화국주의자들이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이후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폭력적인 갈등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지지하는

---

48)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일랜드 토착민의 주식이었던 감자농업이었다. 반면에 부채지주가 관리하였고, 수출품목이었던 밀은 어느 정도 소출되었다. 영국은 대체 작물의 수입 등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들은 기근의 원인을 아일랜드인의 기질도 돌리거나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로 당연시하기도 하였다. 위의 책, 46-61쪽.

49) 박지향, “아일랜드 역사서술: 민족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역사비평』, 50(2000년 봄), 252-261쪽.

50) 독립 이후 아일랜드에 상황해 대해서는 Sabine Wichert, *Northern Ireland Since 1945, Second edition*(London: Longman, 1999) 참조.

51) 이 사건은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로 불리고 있다. 피의 일요일에 대해서는 <http://www.megastories.com/ireland/derrymap/rossvill.htm> 참조.

무장조직 IRA(Irish Republican Army)와 신교 민병대간의 무장투쟁을 선언하였고, 세계적인 분쟁지역이 되었다.<sup>52)</sup>

북아일랜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교 양측과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거듭하여 1998년 4월 ‘Good Friday Agreement’에 합의하여 북아일랜드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sup>53)</sup> 그러나 양측의 강경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테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2000년 2월 11일 자치정부 구성을 골자로 한 ‘Good Friday Agreement’는 유보되고 영국정부의 직접 통치가 재개되었다. 따라서 12세기 영국이 지배한 이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온 아일랜드 문제는 아일랜드 공화국 독립으로 일단락 된 것이 아니며, 오늘날까지도 북아일랜드에서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갈등은 자연적으로 사회문화적 갈등을 동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와의 갈등 그리고 식민지 종주국 영국과 피식민지 아일랜드 문화 간의 갈등, 친영국계 신교 문화와 민족주의적인 구교 문화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이식하면서 토착민과 토착문화를 파괴하였다. 영국식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켈트(celt)문화를 폄하하면서 고유 언어인 켈릭어(gaelic)를 영어로 대체하고, 새로운 가치와 역사를 심었다.<sup>54)</sup>

---

52) IRA는 원래 영국으로부터 북아일랜드 독립과 아일랜드의 재통일을 위해 1919년에 가톨릭교도를 중심으로 결성된 무장투쟁 조직이었다. IRA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북아일랜드 신교도계는 얼스터 민병대를 조직하여 IRA에 대항하였고, 이후 양측의 잦은 충돌은 북아일랜드 분쟁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양측의 테러로 29년간 약 3,200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유영철,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http://www.kida.re.kr/woww/special/ira.htm>.

53) ‘Good Friday Agreement’에 대해서는 [http://news.bbc.co.uk/hi/english /static/northern\\_ireland/understanding/events/good\\_friday.stm](http://news.bbc.co.uk/hi/english /static/northern_ireland/understanding/events/good_friday.stm); <http://www.nio.gov.uk/issues/agreement.htm> 참조.

54)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문화적 이식과 이에 대한 아일랜드의 저항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

아일랜드의 주민들은 주로 켈트족으로 B.C. 9세기부터 B.C. 1세기에 걸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55)</sup> 5세기경부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신학이 발달하는 등 고유의 게일문화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영국은 스코틀랜드 지방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배세력이 되도록 하였다. 아일랜드에 이주한 영국인의 중심은 스코틀랜드인들로서 이들도 인종적으로는 동일한 켈트인이었으나, 영국국교를 신봉하며 영국문화를 소지한 집단이었다. 특히 1649년 청교도 혁명에 반대하여 왕정복고를 노리던 찰스 1세를 지지하면서 아일랜드 영주들이 일으킨 반란을 크롬웰이 진압한 이후, 아일랜드 원정을 지원한 영국인들에게 아일랜드 토지를 분배하면서, 영국 출신 지주들은 명실상부한 식민지 아일랜드의 지배계급이 되었다. 이들이 소위 ‘앵글로 아이리시 특권지배층 (Anglo-Irish Ascendancy)’이 되었다.

새로운 지배세력인 이주 영국인들은 종교적인 차이와 계급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토착 아일랜드인들에게 영국문화를 이식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별적인 문화구조를 유지하였다. 영국국교와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지배집단은 독자적인 학교체제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으며, 음주문화에서 각종 스포츠활동 등 여가활동에서 토착 아일랜드인들과 차이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sup>56)</sup>

종교적 차이와 계급적 차이는 사회적 분화를 초래하였고, 사회적 분화는 생활과 문화의 차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가 전면적인 문화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식민지정책으로 고유의 아일랜드어는 점차 영어로 대체되는 등 지배적인 영국문화가 토착 아일랜드인에게 전파되었고, 엄격한 계급적 분리와 사회적 분화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접촉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근 이후 민족주의 운동이 두드러지고, 독립투쟁이

---

와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387-415쪽 참조.

55)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0495075498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0&sec=1>.

56) 황익주, “아일랜드에서의 일상적 사교활동과 사회집단 분화: 인류학적 사례연구,” 『지역연구』, 3권 4호(1994 겨울), 170-194쪽 참조.

격화되면서 문화적 문제도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

독립투쟁 과정에서 시인 에이츠 등이 주도한 탈식민화 문화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츠는 반제국주의적인 저항의 시기에 바다 건너 강대국인 영국의 지배하에 고통 받는 민족의 경험과 열망, 복구의 비전을 분명히 표현하는 국민적 시인이었다. 그는 시와 논평들을 통하여 아일랜드인과 아일랜드 문화를 도외시하는 제국주의적인 인식에 맞서 고유한 아일랜드 문화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sup>57)</sup>

## (2) 대응

오랜 기간 동안의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아일랜드가 독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에도 양자 간의 문화적 갈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는 문화갈등이 외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아일랜드 고유어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아일랜드 고유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도로 안내, 지명 표기를 비롯하여 공식적인 문건에는 아일랜드어가 병기되고 있다. 또한 크리켓 등의 영국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면 관람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식

---

57)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387쪽. 사이드는 에이츠가 후기에 들어 토착주의와 신비주의에 흐르고, 파시즘에 의존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에이츠에 이어 라이오넬 존슨, 조지 러셀(AE가 필명), 제임스 스티븐슨, J.M., 그레고리 부인 등 아일랜드의 문인들은 게일어의 구제, 고대 아일랜드 전설과 민화의 회복, 민족감정의 고양 등을 지향하였다. 이들의 문학정신은 단순히 국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20세기 세계문학의 전개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주었다.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0702687611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1&sec=1>.



민지 시대 창립한 학교로 출발한 더블린의 ‘트리니티(Trinity)’ 대학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교도들이 입학하지 않는 학교였다. 현재 아일랜드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영국 프로축구인 ‘프리미어 리그’이지만 축구가 영국의 운동이라는 이유에서 크고 좋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에 아일랜드의 고유한 스포츠인 아일랜드식 하키 헐링(Hurling), 겔릭축구(Gaelic football), 카모기(camogie) 등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서는 실제로 대중음악 분야는 컨트리음악과 록음악이 성행하고 있지만 셴 노스(sean nos)라는 민요가 아일랜드 민속위원회에 의해 많은 수의 곡으로 수집되고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영국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어가 일상 언어이고, 주민들이 시청하는 TV 채널은 영국 방송인 BBC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프로축구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포함되어 경기가 치러진다. 또한 수도인 더블린에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지명이 별 다른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문화에 대한 아일랜드의 국민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생활에서 향유되고 있는 문화는 영국의 문화와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자신들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식 아침식사와 구성에서 차이가 없는 아침식사를 굳이 ‘아일랜드식 아침식사(Irish Breakfast)’라고 강조하거나, 스카치와 아이리시 위스키를 구별하는 것도 그러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팝 음악가인 유투(U2), 밴 모리슨(Van Morrison), 엔야(Enya), 시네드 오커너(Sinead O'Connor), 크랜베리즈(the Cranberries), 보이존(Boyzone) 등에 대하여 노래 차이보다는 그들이 아일랜드인이라는 이유에서 더욱 열광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적 갈등도 드러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벨파스트(Belfast)’와 런던데리는 북아일랜드의 핵심 도시이지만 동시에 신구교간의 갈등이 뚜렷한 지역이기도 하다. 벨파스트의 도시 중심은 높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같은 동네에서도 신구교의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의 관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파스트 내 구교 지역에는 아일랜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으며 간판 등에는 영어와 아일랜드어가 병기되어 있다. 또한 신교지역은 영국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많이 쓰이고 있고, 반대로 구교지역에는 아일랜드의 상징색인 초록색으로 주요 건물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주택에는 벽면에 복수를 다짐하는 구호와 투쟁을 선동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런던테리도 마찬가지이다. 구교 중심지역에는 영국경찰에 의해 학살된 주민들을 기념하는 추모비가 있고, 이를 알리는 구조물이 있으며, 보도블록까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다. 주택의 벽면에는 테러리스트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추모하는 사람들, 영국군이 탄압하는 장면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신교지역 중심부는 벨파스트와 마찬가지로 푸른색이 칠해져 있고, 투쟁을 선동하는 그림들이 주택의 벽들을 뒤덮고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런던테리의 경우 강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구교 지역이 강을 경계로 나뉘어있다는 점이 벨파스트와 차이가 있다.

그 동안 폭력이 가장 빈번하였던 벨파스트 지역도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기반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관공서나 시장, 병원 등 생활 토대가 다른 것도 아닌 까닭에 신구교의 일상 생활문화가 다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벨파스트와 런던테리 지역 사람들과 면접한 결과 식당이나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리고 여가 생활과 음주문화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의 벽화, 지역을 치장한 색깔과 언어 등 상징체계에서는 신구교지역 간에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면접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비록 이들이 전통의 아일랜드 흑맥주를 마시지만, 즐겨 찾는 식당이나 술집은 서로 다르다고 하고 있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구별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출입하는 공간을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같은 옷을 입고 동일한 유행을 쫓고 있지만 자신들은 신구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59)</sup> 따라서 상대편 거주 지역에는 가능한 출입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sup>60)</sup> 또한 같은 술을

58) 2001년 8월 24일에서 25일까지 수행한 현지 조사에서 면접한 주민들의 증언.

59) 북아일랜드 지역의 신구교는 인종적으로 동일하며, 신체적 차이도 없다.

먹으면서도 주로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고 하는 등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북아일랜드 문화적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갈등의 원인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문화 외적 요인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신교와 구교라는 종교적 갈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갈등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오랜 기간 동안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고착된 계급적인 문제도 사회문화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식민지 시절 이래 토착 아일랜드인들은 소작인으로 살아왔으며, 1960년대까지도 공직을 포함한 각종 직종의 취업에서 차별을 받아온 까닭에 구교도들은 상대적으로 신교도들에 비하여 빈곤하다. 더욱이 복지 시설의 차별적 분포 등은 생활수준의 차이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갈등의 정도는 사회계층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벨파스트에서 사회적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도심의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부유층 지역에서는 갈등이 외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북아일랜드 전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서부 농촌지역에서 아일랜드 국기를 게양하는 등 사회문화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젊은 세대는 문화적 차이가 없으나,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뚜렷해진다.<sup>61)</sup>

넷째, 사회문화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을 지향하는 IRA 등 전투적 투쟁 세력과 영국 잔류를

---

60) 런던데리 지역은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이 구교 지역에 있는 까닭에 신교 주민들이 공무나 쇼핑 등을 위하여 구교 지역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교 지역의 주민들은 신교지역에 병원 등 각종 복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교지역을 방문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61) 면접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U2나 시네드 오커너 등 아일랜드 출신 대중 가수들을 즐겨 듣지만, 기성세대들이 술집 등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고 한다.

주장하는 신교 민병대 그리고 신페인당(Sinn Fein Party: 구교), 얼스터당(Ulster Unionist Party: 신교) 등 각각의 배후 정당들이 일반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벨파스트에서도 신구교 지역의 정당 사무실이 구호나 벽화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판하는 등 갈등과 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다섯째, 폭력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테러나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동시에 언어나 문학예술 등 각종 문화적 요소들도 서로 갈등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에서 문화적 갈등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적 갈등은 다시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기도 한다.<sup>62)</sup>

여섯째, 아일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도 동일문화와 이질문화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지나온 역사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경험은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등 일상생활 문화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이나 정치문화 등에 있어서는 신구교간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sup>63)</sup>

일곱째, 아일랜드 공화국의 경우 산업화가 진전되고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화갈등의 양상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달리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을 입었다. 또한 최근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제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인들은 경제성장을 이룬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민족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사회에 기반을 두었던 계층구조 등의

---

62) Begoña Aretxaga, "Striking with Hunger: Cultural meanings of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Kay B. Warren, ed., *The Violence Within: Cultural and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222-224.

63) 면접 도중 면접자가 런던테리 지역에 갈 예정이라고 하자, 그 때까지 우호적이었던 피면접자가 정색을 하고 자신들은 '런던테리'가 아니라 '테리'라고 부른다고 한 바가 있다. 실제 런던테리의 구교 지역에는 '자유테리(Free Derry)'라는 표식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명이라고 할지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교 양측이 첨예하고 부딪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런던테리의 두 이름에 대해서는 <http://www.megastories.com/ireland/town.htm> 참조.

변화로 사회집단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시대 이래의 이분법적인 문화차이는 상대적 희석되고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64)</sup>

### (3) 평가와 시사점

아일랜드의 상황과 남북한의 상황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민족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두 체제(혹은 집단)가 갈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아일랜드의 문화적 갈등은 남북한 문화갈등에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 못지않게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화적 갈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갈등이 식민지 지배로 비롯되었고, 갈등의 주체가 토착민과 이주민으로 뿌리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같이 살아오는 동안 언어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종교라는 요인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계급적 요인과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독립과 반독립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화적 갈등이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등 상대적으로 문화적 갈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조장하는 벽화를 포함한 적대

---

64) 유럽통합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황익주,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아일랜드 사회의 변화와 적응: 니나(Nenagh)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권 2호(1998 여름), 81-103쪽; 황익주, “유럽통합의 진전과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변화: 인류학적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9권 3호(2000 가을), 123-142쪽 참조.

적인 문화구조에서 자라나면서 상대집단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립된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여전히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갈등의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문화적 차이가 점차 희석되는 과정에서 유럽통합이나 경제성장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적 통합이 사회 구조전체의 변화과정에서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를 결합시키는 것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문화통합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 2) 이스라엘

### (1) 갈등 양상

이스라엘은 이주민들에 의해 건설되고 경영되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주민 정책에 관한한 이스라엘의 정책이 가장 유서 깊고 어떤 면에서는 원형(prototype)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Jewish Agency'라는 유대인 조직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 민족의 국내 이주를 적극적으로 유도·수용해왔으며, 이는 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였다. 특히, 1968년에는 이주민부(Misrad Haklita; Ministry of Immigrants Absorption)를 내각에 설치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주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개방적이다. 유대인 및 그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살았든 이스라엘로의 이주가 무조건 허용되며,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외로 다시 이주하였다가 언제든지 돌아

을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모든 이주민이 일단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면, 시온주의(Zionism)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이들을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 편입시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즉, 이주민들이 정착에 실패하여 사회 내 기층 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유대인 귀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통합력이 높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유대교를 믿고 있으며,<sup>65)</sup> 문화적인 기준으로 구성된 여부가 결정되는 유대인들의 나라라는 점에서 국민들 간에 동질성 정도가 높으며 문화적 이질화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사회통합이나 문화통합에서 일정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문화갈등이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붕괴로 마지막 대규모 이주민 집단이 이스라엘에 유입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66)</sup>

1989년 옛 소련에서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지로부터 99만 3천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정부의 국경 개방으로 이스라엘에 집단으로 이민 왔던 이 유대인들 중 본국으로 되돌아간 인원은 5-6%에 불과하며 나머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러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현재 이스라엘 내 유대인 인구 중 20%, 아랍계 주민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1980년 중반부터 매 해 약 12,000-13,000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이주하였는데 1989년 말 이주민 갑자기 증가 - 24,050명(1989년), 199,516명(1990년), 176,000명 (1991년) -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4년 간 매 해 76,000-80,000명씩 입국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가운데 75% 이상이 45세 미만, 그 중 반이 25세 미

---

65)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민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유대교 신자여부이다.

66) Surhone, Lambert M. eds., *Russian Jewish Immigration to Israel* (N.Y.: Betascript Publishing, 2010) 참조.

만인 반면 65세 이상은 13%정도에 그쳤다.

인구 구조적으로 특징이 있지만 이들은 이전 이주민들에 비해 고학력이었는데 40.5%가 13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이전 이주민은 24.2%), 60% 이상이 고학력이고 과학 분야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였다(이전 이주민, 29%).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통계청에 의하면 1989~1995년 이민자 중 engineers and architects가 68,100명, 선생 39,900명, 간호사 14,700명, 의사와 치과 의사가 14,300명, 미술·음악·작가가 14,100명 등이었다. 2009년 현재 전체 유대인에서 차지하는 러시아 출신 이주자는 20%에 육박하고 있다.<sup>67)</sup>

러시아 출신 유대인에 대해서도 다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재배치가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의 대규모 이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갑작스런 이민의 물결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의 몫이었으므로, 자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민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점이다. 또한 이민자들이 받는 경제적 지원도 지나치다고 반응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민자들이 적응하여 이스라엘 시민이 되기까지는 험한 길이 놓여 있다. 또한 이들 이민자는 히브리어를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웠고, 이전 사회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라도 새로운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학력 기술자들의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여성들은 더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일부 러시아 여성들이 서비스업종으로 전락하면서 그렇지 않은 다수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러시아 이민자들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집단이 에티오피아 출신 이민자

---

67)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9B%20%EC%86%8C%EB%A0%A8%20%EC%9C%A0%EB%8C%80%EC%9D%B8&contents\\_id=AKR20090907172900079](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9B%20%EC%86%8C%E B%A0%A8%20%EC%9C%A0%EB%8C%80%EC%9D%B8&contents_id=AKR20090907172900079), 2011년 12월 20일 검색.



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68)</sup> 이스라엘은 1991년 이른바 ‘솔로몬 공수작전’을 통해 ‘팔라시무라’로 불리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왕국의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이 동침해 낳은 메네릭의 후손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15만 명에 달하는 이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중 상당수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2005년부터 이들의 이민을 불허했다.<sup>69)</sup> 무엇보다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유대인들의 차별이 심한데, 1996년 초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현혈한 피를 에이즈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병원에서 폐기 처분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같은 유대인이라도 검은 피부의 유대인에게는 호감을 줄 수 없다는 인종차별 사건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 유대인들은 이민을 오기 전 대부분 문명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이스라엘처럼 기술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갑자기 적응하며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 언어와 가치관, 문화가 다른 이스라엘에서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검은 피부 때문에 차별을 견디다 못한 이들은 자살이라는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의 자살률이 높다. 또한 피부색 이외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에티오피아 유대인에게도 선교를 하여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몸에 십자가 문신을 새겼다. 생존을 위해 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십자가 문신을 새긴 채 유대인으로 남기 원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다. 그들이 기독교 신자임이 밝혀지면서 그들은 차별대우를 받는다. 결국 살아남기 위하여 운명에 순응했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

68) Len Lyons et al. *The Ethiopian Jews of Israel Personal Stories of Life in the Promised Land*(Woodstock, Vermont: Jewish Lights Publishing, 2007) 참조.

69) 이스라엘 정부가 2009년에 에티오피아 유대인 8천명의 이민을 향후 4년에 걸쳐 받아주기로 결정하여 다시 이주가 시작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764279>, 2011년 12월 20일 검색.

할 수 있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과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집단이주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존 이스라엘 국민들과 문화적이고 정서적으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를 믿고 있고, 유대인이라는 자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서구문명에 중심을 둔 기존 유대인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민사에서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문제는 대규모의 동질성이 높은 집단이 비슷한 시기에 이주함으로써 그들만의 기존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고학력자 중심이었던 소련 출신 이주민과 후진적인 문명만을 경험하였던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은 성향이나 능력에서 차이가 컸지만, 기존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비슷하였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출신은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갱단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 출신들은 문명화 수준에서 뒤떨어졌다는 점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적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sup>70)</sup> 이러한 차이는 갈등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소련 출신 유대인은 조직화되고 정치화되면서 정치적 이슈화하였지만<sup>71)</sup> 에티오피아 출신들은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계급적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대응

---

70)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적응교육센터에서 6개월 가량의 교육 및 훈련을 받는데, 에티오피아 이주민의 경우는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 집단의 교육 기간이 긴 것은 근대 문명과 관련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71) 현재 옛 소련계 유대인을 지지기반으로 둔 베이테누당은 총선을 통하여 2011년 현재 집권 리쿠드당의 최대 연립정부 파트너가 되었다.

이민정책이 발전한 이스라엘 통합과정의 핵심적인 국가조직은 국정홍보국, 사회통합국, 복지서비스국이다. 국정홍보국(Information and Promotion Department: IPD)은 이스라엘이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유형의 사회 복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수학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전 세계 젊은 층에게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민자들의 새로운 사회에의 빠른 적응과 통합은 상당부분 이스라엘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지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최근 들어 시작된 대이민군의 재유입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들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사회통합국(SocialIntegration Department: SID)이다.

사회통합국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비이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민 수용정책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국은 수시로 세계 각국에서 이민 수용에 관한 홍보교육을 시행한다.

사회통합국은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종 자원봉사기구를 통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문제를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의 이민자 수용지원과 보호가 3년간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반해 사회통합과정은 5년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기본적인 추진원리로서 사회통합국은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이 각기 다른 이민군들을 이스라엘이 가진 하나의 문화적 전통의 틀 속에만 융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이들 이민군들에게 이스라엘이 지닌 인종적,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치되 한편으로는 각 이민 집단이 지닌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적 유산과 독창성 역시 소중히 간직하도록 전통문화 보호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통합국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담당하는 구체적인 주요 활동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율판에서 교육받는 동안 율판담당자와의 협조 하에 이민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강화. (2) 의무적인 예루살렘 순방을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의 역사 유적지와 정착촌 탐방. (3) 세계 각국에서의 유대정신(유다이즘: Judaism), 전통적 유산, 이스라엘 사

회, 경제, 지리, 시민생활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울판주의(Ulpanim)를 채택한 군부대와의 상호접촉. (5) 각종 업무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채용과 이민자들의 접촉과정에 대비한 이들의 사전교육. (6) 청각 프로그램, 영화필름, 팸플릿, 강의 등 각종 정보매체의 제공 지원 등이 그것이다.

유대민족해방운동 포로(Prisoners of Zion), 교육, 군인, 건강문제를 관장하는 4개부서로 구성된 복지서비스국(Welfare Service Department: WSD)의 주요 임무는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서비스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제공되어 지도록 하는데 있다. 유대민족해방 운동을 하다 정치범으로 잡힌 경력이 있는 이민자와 순교자의 친척이 되는 이민자들을 담당하는 부서(Prisoners of Zion Authority: PZA)는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PZA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험기구(National Insurance hist)에 보내 이들의 구금기간 동안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25% 이상의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을 권한이 부여된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부의 문화교육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민자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지원, 개인교습, 재활 및 강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소외집단의 교육지원, 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활동 등을 담당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혜택(Absorption Basket)은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등록비, 교재비, 지역탐방비, 문화활동비, 개인소모품비 등의 교육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장병 담당부서는 이민자들의 군복무 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한다. 적격 지원자는 청소년개척자(Youth Aliyah)의 지원 아래 교육을 받는 마지막 해부터 복무기간을 마치기 이전의 준비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군장병 담당부서는 최근 들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이스라엘 내에 부모가 없는 세대 군인들에게까지 확대시켜 이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사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부서는 준군사적 청년군대조직인 ‘가드나’(Gadna)와 함께 20개 지역의 이민자 수용 지역사회에 청년 상담원을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다.<sup>72)</sup>

그러나 대규모의 이민 집단이 소련 등지에서 옴에 따라 정부의 주관 부

서인 이민흡수부(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MOIA)와 이스라엘 이민의 실질적 중심조직인 Jewish Agency for Israel(JAFI) 역할에 큰 영향을 주었고,<sup>72)</sup> 기존 이주민 정책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하나가 JAFI의 인원이 정부기관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일면 급진적이고 기존의 관념과는 상반되는 작은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주민의 새로운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아주 세심한 배려 속에 서서히 동화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태까지의 기본 방침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직접 적응 방식(Sal Klita)은 각종 지원 조치를 한 묶음(Absorption Basket)으로 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고안되었다.

직접 적응 방식은 첫째, 호텔 숙박 알선, 아파트 물색, 기본 경비 제공 등 초기 동화 조치, 둘째, 3개월마다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1년치 임대 보조금, 셋째, 6개월간의 생계 보조금 넷째, 자녀 교육비 보조, 다섯째, 기본 가재도구 구입비 보조금, 여섯째, Utilities 등 주거비용 보조금, 일곱째, 이주민부의 Standing Loan 및 Jewish Agency의 Loan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동구·중남미·북아프리카·아시아·인디아 지역 출신 이주민이 그 대상이다. Absorption Basket의 약 25%는 밴쿠리온 공항 도착 즉시 제공되며, 나머지는 이주민의 계좌에 약 1년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입금시킨다. 이 방식은 이주민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이주민부와 이주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지원 업무를 단순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대 정신과 히브리어 능력 및 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한 집단에게는 부적합함이 판명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72) 이풍길·김수옥·임병우, “이스라엘의 이민군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 교육프로그램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6권 2호(1999), 124-126쪽 참조.

73) Jewish Agency for Israel은 시온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으로 국제적인 민간단체이나 이스라엘의 국가 성립에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정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Jewish\\_Agency\\_for\\_Israel](http://en.wikipedia.org/wiki/Jewish_Agency_for_Israel), 2011년 12월 19일 검색 참조.

도 있다.

새로운 적응대책은 이스라엘 사회가 이주민의 동화를 위하여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식체계와 공식체계가 병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대규모의 이민자가 일시에 입국함에 따라 이루어진 불가피한 방법 전환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

적응정책의 방법론적인 전환과 아울러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동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국 초기에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후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이주민들의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까닭에 단일문화를 지향하는 일종의 Melting Pot을 지향하였다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과 에티오피아 이민들이 급증하면서 Salad Vowel이라는 다문화 정책을 지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sup>74)</sup>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러시아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문화의 보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신문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시민단체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민단체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평화관련 시민사회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Sulha Peace Project

‘Sulha Peace Project’는 아랍어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와 아랍어 모두 용서(forgiveness)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The sulha는 평화를 바라는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공동으로 풀뿌리 시민 참여적 노력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작한지 10여 년이 되었다. The Sulha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문화적 교류와 용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 ② Neve Shalom(Oasis of Peace)

---

74) Avi Sagi, *The Multicultural Challenge in Israel*(Brighton, Ma.: Academic Studies Press, 2009) 참조.

‘Neve Shalom’는 평화교육 공동체로서 유대인과 아랍인을 공동으로 교육하면서, 상대방 언어 습득을 포함한 다문화 정착을 지향한다.

### ③ American Democracy Project

‘American Democracy Project’는 Al-Quads 대학과 Tel Aviv 대학에서 미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국 Ohio의 Oberlin College에서 함께 지내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대 문화에 대한 경험과 관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 ④ The interfaith Encounter Association(IEA)

‘The interfaith Encounter Association(IEA)’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종교적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중동지역의 문화 간 이해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드루즈인(druze),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다양한 신념을 가진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 (3) 평가와 시사점

소련과 에티오피아에서 대규모의 이민자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면서 이스라엘의 사회문화 통합정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첫째, 여전히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문화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인구의 20% 정도가 아랍인이라는 점에서 명목상으로 다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피점령 문화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고도의 통합성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의 핵심에 유대교와<sup>75)</sup> 히브리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문화를 예외로 한다면, 그 동안 단일문

---

75) 인구에 10%에 달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군 복무도 하지 않는 극보수 유대인 성직자 가족의 생계를 국가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유대교를 통한 사회 통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화 정책을 특히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하여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단 내에서는 동질인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집단 외적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유지한 집단의 출현은 일정한 수준이지만 다문화를 강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적응 및 통합정책은 언어와 같은 문화적 요소와 복지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적응정책의 핵심은 ‘울판’이라고 하는 언어 교육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취업이나 주택과 같은 복지적 요소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이민이 유입되면서 주택문제나 취업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통합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으로 이민과 통합에서 이스라엘은 정부와 유대인 재단이라는 민간조직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유대인 재단이 이스라엘 정부보다 연혁이 오래되고 국제적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민간조직임에는 분명하다. 그 동안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협조하면서 이주민 유치에서 귀국과 교육훈련 그리고 사회적응 지원에 기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이민의 급증은 국가가 직접 나서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취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유대인 재단과 같은 일종의 보수적인 단체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관심을 쏟는 시민사회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평화를 지향하면서 아랍인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기구와 조직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민간부분의 자체 역량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자원마련에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북유럽 등 국외 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생존력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하는 문화갈등 극복 프로그램들은 부분적이거나 이벤트성인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갈등은 두 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아랍문화와의 갈등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



규모 이민으로 발생한 러시아 및 에티오피아 문화와의 갈등이다. 갈등의 정도는 전자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동시에 한반도의 경우에 시사점이 더욱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 단일 문화적 정체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남북한이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탈북자를 포함하여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발생할 대규모 사회 이동과정에서 초래될 갈등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갈등은 이주민(혹은 사회이동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소련출신 이민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대규모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적응정책을 마련한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모와 더불어 출신 국가 및 문화의 차이가 사회문화적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 삶의 경험으로 공동체성이 극히 높았고, 지적 능력이나 전문성을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통합하면서 정치세력화 하였던 반면, 문명 수준에서 뒤떨어지고 사회적 편견을 받았던 에티오피아 이민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교하여 이념적 차이와 생활차이를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갈등의 폭은 더욱 크고 격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문화적 통합정책이 중심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교적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었지만 러시아나 에티오피아 이민자들에게 충분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급격한 이민 증가로 이스라엘 경제사회가 이들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사회적인 차원의 지원 부족이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심화시킨 경향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1) 한반도 - 이념갈등

#### (1) 갈등 양상

한국 사회의 갈등은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간 분단을 시작으로 이념적인 분단이 심화되었고, 정치적으로 동서갈등을 겪었으며, 산업화를 거치면서 계층갈등, 세대갈등이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등록금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 갈등 중에서도 핵심은 이념갈등이다. 남북은 분단과 함께 진행된 체제경쟁의 구조 속에서 이념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여기에 발전지향적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지역갈등과 계층 갈등이 야기되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은 정치적인 동인과 지역적 동인, 계층적 동인이 동시에 작동되는 중첩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한국 사회의 성숙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의 분단은 남북한의 사회구조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전쟁은 우리 사회의 상이한 역사인식과 대북관을 초래하는 뿌리로 일상에 작동하는 적대적 감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이념적 갈등과 분단, 분단 이후의 적대적 공존관계는 남북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의 근대화 방식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분단으로 인해 남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방식으로 근대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남북의 근대화는 다른 의미에서 이질적인 사회문화를 낳았다. 여기에 남북은 분단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남북은 경쟁적으로 체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진행하였다. 상대방은 극단적으로 적대시되었으며,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되었다.<sup>76)</sup>

---

76)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다. 법률 자체가 일상적

한국은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분단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성장이 제한되었고,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한 정치중심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압축적 고도성장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는 반공과 성장의 그늘 속에 있었다.

한국 사회 갈등의 핵심인 이념 갈등과 지역갈등 문제는 뿌리 깊은 냉전 문화와 지역에 기반을 둔 비타협적 정당구조로 이어졌다. 냉전문화와 지역색이 분명한 정당구조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보수와 진보의 갈등 사례는 이른바 촛불시위로 나타났다. 2002년 미순, 효순양 사건은 촛불시위가 일반화되는 사건이었다. 2002년 6월에 있었던 주한미군 훈련 궤도차량에 의해 두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건과 촛불시위가 있었다. 촛불시위의 출발이 된 추모행사는 인터넷을 통해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선거 기간과 겹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끌었고 우리 사회 내의 논란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광화문 추모행사를 주관하였고, 부시대통령의 사과, 한미행정협정(SOFA)의 전면 개정 등을 주장하였다. 촛불집회는 부시대통령의 간접적 유감 표명과 한미 간 SOFA 운영에 대한 개선 합의 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순수한 추모행사에 정치적 주장이 가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반미시위로 인한 한미동맹의 약화에 대해 우려하였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문제나 안보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6·15행사, 6·25행사 등을 보수와 진보 진영은 세를 과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

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상적인 통제와 검열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과 관련한 일체의 사상적인 탄압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적, 심리적인 강력한 통제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3·1절 행사, 4·19혁명, 8·15행사 등의 기념일도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눠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주도한 박지원, 임동원 등을 ‘반역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이념적 대립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갈라진다. 보수와 진보는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 진보쪽에서는 미국의 강경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보는 반면 보수쪽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전협정에 대해 진보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이나 불가침 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쪽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한 현재와 같은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진보쪽에서는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쪽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냉전적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구도로 바꾸었다.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과 이후 이루어진 인적, 물적 교류는 화해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대한 남남갈등을 야기하였다.<sup>77)</sup>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이나 합의의 기반이

---

77)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변화 여부 및 신뢰성 문제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압력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대북 협상 태도와 관련한 것이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정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북한의 입장에 끌려간다는 비판이다. 보수쪽에서는 원칙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추진된 대북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냉전문화와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남갈등은 대북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이 기본적인 치안능력은 갖고 있고 효과적으로 자국 영토와 국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경제개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재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등의 실패국가(failed state)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북한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자원이 고갈되고 인프라 유지가 거의 한계에 달하였다는 점에서 ‘실패한 국가(failed state)’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중전의 10년간의 통일교육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실상과 안보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다.<sup>78)</sup>

## (2) 대응

통일이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남북 교류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인식 확대 등의 정책이 있다.

통일이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 기관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다. 1981년 6월에 창설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체회의(중앙회의 및 지방회의)와 국내의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대북정책에 관한

---

면, 진보쪽에서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강조한다. 셋째, 국군포로를 비롯한 남북자 문제이다. 보수쪽에서는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넷째,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보수쪽에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이 통일문제만 언급하고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였다고 본다.

78) 통일부, 『2009통일백서』(통일부, 2009), 201쪽.

의견개진, 대북정책에 대한 건의 등을 하고 있다.<sup>79)</sup> 그러나 통일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기능은 제한되어 있으며, 자문위원 구성 역시 지역의 명망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정책자문과 함께 여론수렴과 확산이라는 기능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민간기관으로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있다. 민화협은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운동 상설협의체의 성격으로 출범한 민관협력 단체이다. 국민적 지지와 성원 속에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범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결성하였다.

남북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해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시작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남북사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군사, 경제, 체육, 적십자 등 분야별 회담이 이어졌으며, 민간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개성공단 건설을 비롯하여 금강산과 개성 관광, 동해선·경의선 연결 사업이 진행되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꾼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은 2000년을 전후하여 크게 바뀌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남북화해협력이 시작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의 2003년 조사에 의하면 경제대상이나 적대대상에서 협력대상이나 지원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60% 정도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비율도 70% 가까이 되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달라지면서 북한·통일관련 국민

---

7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에 대한 통상적인 자문회의를 비롯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통일문제나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토론회’, 각종 회의,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식이 많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80)</sup>

그러나 남북 사이의 화해와 교류 속에서도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였다. 통일은 분단된 국토의 통일뿐만 아니라 민족의 통일로서 심리적·정서적 통일이 완성되어야만 진정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보적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분열상을 보이는 것도 안보문제의 불안과 관련된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이성적 판단의 영역이기보다는 감성적 판단의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한에서 이러한 갈등은 잠재되어 나타날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서해 교전, 연평도 피격 사건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남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일체를 의미한다. 정부에서 규정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sup>81)</sup>

‘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 보급하는 주

---

80)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은 평화·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급증하면서 남북교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명문화,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이후 다시 한 번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한 의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순차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보 문제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하며, 특히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은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81) 통일부, 『2009통일백서』, 200쪽.

체는 통일부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규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지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지도방향을 담은 것으로 초·중·고에 보급하여 통일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sup>82)</sup>

### (3) 평가와 시사점

한반도의 이념적 갈등의 근본 원인은 냉전구조 및 냉전 문화에 기인한다. 남북이 이념갈등을 겪으면서 대타적으로 공존하는 동안에 형성된 냉전문화는 동서화해의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사회통합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은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졌다.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타파하지 못하였다.

분단 체제 속에서 진행된 체제 간의 적대적 공존관계는 이질적 요소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분단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일상의 인식까지 냉전화시키는 냉전문화로 일상생활에서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냉전적 사유의 일상화는 남북관계 개선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갈등 구조가 증폭되는

---

82)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목적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자주적·민주적·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기반의 확충과 함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창출을 위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규범을 온 국민들이 갖도록 한다. 둘째, 통일조국의 형성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세계 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한다.



현상으로 나타났다. 남북의 상이한 삶의 문제는 통일과정과 이후에 사회적 갈등으로 드러날 것이다. 분단체제 상에서 나타난 이질화의 영향은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만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장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성원들이 장기간 상이한 생활세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사회화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신념체계와 행동체계를 갖고 있다.

통일기반 구축은 내부적인 통합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이 곧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된 통일정책은 남북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며, 이는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근대화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남북의 근대화 과정의 차이는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를 형성했으며, 제도적 이질화는 남북의 구성원들을 상이한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게 만들었다. 남북의 근대화 과정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해석과 의미 차이를 낳았다. 남한에서는 자유에 무게를 둔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을 근대화의 핵심가치로 인식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절대화하면서 상호 보완적이기보다는 경쟁적 차원에서 선택한 가치를 극대화하였고, 선택적 가치에 대한 과대한 가치 부여를 정당화하였다.

오랜 동안에 구축된 반공과 발전이라는 두 핵심 가치는 사회발전과 통합의 가치로 절대화되었고, 반대의 개념은 폭력적으로 억압되었다. 이로 인해 냉전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이념갈등은 남북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성찰적 고찰과 자기반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화해와 협력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냉전문화의 청산 없는 대북정책은 갈등의 불씨를 상시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분법적 논리를 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냉전문화를 온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이며 비타협적인 구도로 재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원화된 사회,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문제는 이념, 세대, 지역 간의 갈등구조가 중첩된 복합적 문제로 심도 있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필요하다. 통일 분야의 국민 통합과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통일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민사회 내의 보수와 진보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관용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단체 간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불신 해소와 사회적 화합,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이 어느 한 편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 편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면, 대북정책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만다.

통일문제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통일문제를 일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정쟁(政爭)화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sup>83)</sup>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주장은 소통되기 어렵다. 논리와 철학이 있는 통일운동이 제기되어야 하고, 소통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둘째, 대북정책의 투명성이다. 대북정책이 밀실이나 특사에 의해 주도되면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한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와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에 대한 강화이다. 통일문제가 미칠 미래 사회에 대한

---

83) 한국 사회에 대북·통일 문제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정당 간의 정략적 경쟁의 대상으로 존재했다. 대북정책이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정당의 정책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적인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켰다. 대북정책은 총선이나 대선과 연관되어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 4월 13일 총선거를 사흘 앞두고 발표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을 표하면서도 시종 비판적 자세를 유지했다.

정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세대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학교 통일교육을 제도화하고,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역할이 중요하다.

### 3-2) 한반도 - 문화갈등

#### (1) 갈등 양상

문화적 다양화, 문화다양성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문화갈등은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한 사회의 다문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구조의 토대가 문화갈등을 촉발하는 다문화 사회도 아니며, 한국으로의 이주 역사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따라서 해외로부터 산업연수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충돌 요인들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주민 역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특히 1987년 노동자 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본격화되고 노동3권의 보장과 임금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였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권익보호를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은 저임금 국가에서 임금상승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경제현장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등의 국가로부터 한국으로의 노동이주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의 노동이주가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인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으로 경제현장에 투입되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용인되었지만 엄연하게 이들의 신분은 불법 체류자였다.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건설 분야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

었다. 경제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다. 외국인 산업이민의 경험이 없었던 1991년 한국에서는 일본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모델로 한 외국인산업연수제도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였는데, 정부는 2004년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서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연수제를 병행하였다.<sup>84)</sup>

2000년을 전후해서는 결혼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결혼이주민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몽골 등지에서 밀려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에 약 25만 여명을 넘어섰다.

산업단지와 주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인과의 결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로 취업하는 산업연수생 등으로 입국하여 정착하는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여성들의 혼인이주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이주민이 1백만을 넘었으며 남한 인구의 2%를 초과하는 수준이 되었다. 통계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이면 5% 수준인 25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다문화 사회로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사회적·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정 내의 문제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 갈등이 생겨났으며, 자녀 양육에서도 언어의 차이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배타적 인식으로 인한 갈등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민의 모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입견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한다.<sup>85)</sup>

84)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고용허가제로 대체되었다.

85) 최현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연구』, 35집

## (2) 대응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민간단체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 내 이주자 지원운동은 1980년대 후반 성남 주민교회를 시작으로 주로 민중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이 시작했다. 한국 내 이주자 지원운동은 주로 종교기관이 후원하는 센터가 대부분이다. 한국 내 외국인 이주자 지원 단체의 사업은 상담, 한국어교육, 건강진료, 문화이해, 통역, 상조사업 등이 있다.

이들 정부 및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상담사업으로는 다국어 상담전화 운영, 생활안내,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의료문제, 비자문제, 산재, 가정문제, 자녀교육 등이 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학습,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등이 있다. 건강관련 사업으로는 무료진료, 건강상담 등이 있다. 문화이해프로그램으로는 한국문화 익히기, 문화탐방, 국제문화교류 등이 있다. 공동체 지원사업으로는 국가별 모임을 지원하거나 국제모임활동,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이 있다. 법률교육으로는 노동, 인권관련 교육강좌가 있다. 그리고 관혼상제 지원, 이주자 자녀교육, 이주여성 인권보호,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주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운영, 한국에서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이주자나, 외국인보호소의 외국인 지원, 이주자를 위한 인터넷 방송, FM 방송국 운영, 통역지원, 공동탁아소 운영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대다수의 지원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이해 교육과 정보화교육이 중심이며, 최근에 새롭게 가족교육과 가족생활 상담, 자녀보호, 정서적·문화적 지원으로 친정어머니나 후원가족의 매칭과 결혼이민자 가족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sup>86)</sup>

---

(2009), 361-362쪽.

86) 위의 글, 363쪽.

### (3) 평가와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단일 민족이라는 특수성이 약화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초기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결혼이주민이나 산업이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적응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상호주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87)</sup>

상호주의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은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은 다문화 정책이다. 기원적으로 다문화를 형성한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로 인식해 왔었다. 따라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도 오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2002년 전체혼인 건수의 5%였던 국제결혼 비율은 2004년 11.2%로 두 자리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88)</sup> 국제결혼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결혼 이주민 사이의 자녀도 늘어나게 된다. 이들의 문화적 특성 수용과 함께 포용정책 없이 문화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 4) 유럽연합(EU) - 국가 간

### (1) 갈등 양상

---

87) 위의 글, 345쪽.

88) 위의 글, 360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sup>89)</sup> 유럽통합, 통합된 유럽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정치인은 윈스턴 처칠이었다. 윈스턴 처칠이 1946년 스위스에서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의 건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 1950년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버트 슈만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주요 원자재인 철강, 석탄의 공동 시장을 만들어 중립적인 초국가 기구가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고, 1951년 4월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유럽통합이 시작되었고, 경제통합이 확대되면서 1967년 EC(European Communities)로 불리는 공동체로 확대되었다. EC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고, 유럽연합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 과정은 남부유럽 국가, 북부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5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통합을 추진하면서 5억 명의 인구와 30여 개에 가까운 회원국으로 묶인 거대한 통합체로 발전하였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출발한 유럽연합은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50년 넘게 통합작업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통합의 방식이나 통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해 왔다.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은 경제로부터 출발하여 외교, 정치 분야에 이르는 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적인 통합과 달리 외교나 정치 분야의 통합은 주권침해 등을 우려한 회원국들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어느 한 분야의 통합이 자동적으로 다른 분야의 통합으로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sup>90)</sup>

기존의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동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

---

89)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라는 명칭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표되기 시작한 1993년 11월 1일부터 사용된 명칭이다.

90) 이정은, 『유럽연합(EU)의 제 5차 확대로 본 동서유럽의 통합: 남북통합을 위한 성찰』(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0쪽.

를 유지하였으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도 큰 국가들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도 길지 않고, 경제발전 수준도 뒤떨어져 있었다. 동유럽의 유럽연합 가입은 이전부터 일정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유럽연합은 소련식 사회주의가 붕괴된 1989년 직후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제협력과 지원을 비롯한 관계 회복에 노력하였다.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부터 이루어진 서유럽의 지원은 동유럽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화가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체제전환 과정부터 서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경험한 동유럽 국가였지만 동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은 새로운 차원의 통합을 요구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 유럽연합과 동유럽 국가들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전체제 하에서 친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랬던 만큼 동유럽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에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단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떠나 경제적인 차이도 컸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동유럽 국가 통합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으로서는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하였고, 동유럽으로서는 경제협력을 기대할 수 있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적 격차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동유럽은 멀리 떨어진 과거의 유럽으로 인식되었고, 공공연하게 유럽으로의 회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유럽연합의 지원도 문화적 통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경험은 주로 경제적인 차원의 통합 문제였던 반면, 새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직면하게 된 문제는 사회문화적인 통합으로서 한계가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 제도만으로는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현실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 국가들이 동시에 유럽연합으로 가입하면서 유럽연합의 통합 작업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는 순조로워 보였던 유럽통합의 한계와 불안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동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도 심화되었고, 서유럽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를 거침없이 드러내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신과 갈등이었지만 뿌리깊지 않은 신뢰와 불신이 경제적인 문제로 표출된 것이었다.

유럽통합에서 제기된 갈등의 핵심은 경제적 차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였다.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진행된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약자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사회적 갈등은 격렬한 저항으로 이어지면서 사회통합의 장애물이 되었다.<sup>91)</sup>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다양한 언어도 유럽통합 정책의 장애 요인이었다. 유럽연합은 다언어주의를 원칙으로 27개 회원국 중 23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것은 각국의 언어 속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이 담겨있다는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다언어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살린다는 취지와는 별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23개 언어로 통역되고, 번역되어서 저장된다. 유럽연합의 회의에서는 한 언어당 동시통역사가 3명이 배정되어 69명이 통역을 하며, 번역을 위한 예산도 유럽연합 연간 예산의 1%에 달할 정도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늘어나면 언어 관련 예산도 늘어나야 할 상황이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언어 정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통합의 토대를 세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용어 없이 각국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강대국들은 공용어로서 영어의 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제2외국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상당하다.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높은 문맹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언어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공용어로서 영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91) 저항의 세력은 이민자와 소수 종족, 장애인, 여성 등이었다. 노동, 빈곤, 교육, 건강, 주거, 남녀 차별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복지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통합 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 (2) 대응

유럽연합에서 문화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영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출범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한계가 있었다.<sup>92)</sup>

2004년 5월 유럽연합은 중·동유럽 8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문화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신규회원국들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해온 서유럽과 달리 구소련의 영향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었다. 이들 국가들과의 통합 작업은 상이한 체제와 생활 방식의 만남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유럽이 경제협력을 넘어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과 같은 과제였다. 유럽통합의 문화정책은 유럽적 정체성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합의 수준을 일상생활의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수준까지 심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유럽의 문화정책은 획일적인 유럽문화의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럽의 문화적 통합은 유럽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갖는 이점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과 이들 문화의 접촉과 교류는 문화발전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93)</sup>

유럽통합이 동유럽 국가로 확대되기 위한 준비는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동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한편으로 유럽협정(Europe Associations)을 통해 체제 이행과정을 지원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예비가입전략을 수립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회원국을 받던 것과는 다른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가입파트너십(Accession Partnership)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입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유

---

92) 박성훈·윤성원·김장호,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논집』, 제8권 15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20쪽.

93) 최진우,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정체성의 정치,” 『국제정치학논총』, 제46집 4호(2006), 88-89쪽.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원책을 찾아 분야별로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무엇보다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럽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차이였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신규로 가입할 10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기존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평균의 15.4%에 불과하였다. 폴란드도 1인당 GDP규모가 8,500달러로 1만 달러를 넘지 않았다.<sup>94)</sup> 경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인 PHARE(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 Economy), 환경 및 교통투자지원프로그램인 ISPA(Investment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 농업 및 지방발전지원 프로그램인 SAPARD(the 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금융안정성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와의 공동재정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신규회원국들이 겪을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동유럽의 신규회원 국가들을 위한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과제는 ‘장기 실업자와 빈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삶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보건복지 서비스와 주택문제, 대중교통 같은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장애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시정 및 함께하기’, ‘아동 권리보호 및 가정과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었다.

경제지원을 통한 통합과 함께 문화통합 프로그램도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규 회원국들은 기존의 회원국들과는 경제적 격차는 물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로 기존의 경제적 통합만으로는 통합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냉전체제 하에서 반세기 가깝게 교류가 없었던 동서유럽이 하나의 유럽, 유럽합중국의 건설과 유럽시민(European Citizen)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94) 이정은, 『유럽연합(EU)의 제 5차 확대로 본 동서유럽의 통합: 남북통합을 위한 성찰』, 34쪽.

유럽연합은 출범 이후부터 외적으로 회원국을 늘리면서도 내적으로는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유럽연합은 문화적 공동상징으로서 유럽우표의 도입, 유럽복권, 유럽과학기술 및 예술원의 설립을 비롯하여 유럽연합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가기 위해서 내부적 결속을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1982년 집행위원회의 노력 끝에 EU 회원국의 문화장관 회의가 소집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집행위원회의 주도로 문화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 체결된 단일유럽의정서는 회원국 간의 정치협력의 제도화, 유럽의회의 기능 강화,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정치, 경제적 협력을 높인 결정의 하나였다.

문화정책이 법적인 근거 위에서 유럽연합의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 유럽연합은 유럽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일성을 모색하고, 문화적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유럽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주력하였다. 마스트리히트에서 도입된 ‘유럽시민권(European Citizenship)’의 개념은 유럽연합 국가 내의 결합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통합의 궁극적인 완성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문화적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유럽통합의 문화정책은 통일성과 분열성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질적 문화권 국가들로서 상이한 언어체계, 독립적인 예술작품,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가치체계를 가진 국가들이었다. 유럽의 문화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양면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sup>95)</sup> 유럽 국가의 회원 확대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의 통합 정책의 핵심은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

---

95) 유럽 문화의 원천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찾는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분열되었다. 종교적 분열에 이어서 정치적 분열이 일어나면서 민족국가의 탄생과 결합되면서 분열이 공고해졌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도 민족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이다.

이라는 철학이었다. ‘다양성 속의 통합’은 27개 회원국을 하나로 묶는 바탕철학이자 방법론이었다. 강대국의 문화를 약소국에 강요하는 일방주의로 흐르지 않고, 개별국의 특징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존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회원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강요나 포섭정책을 쓰지 않고, 정책 시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추구하는 ‘열린 조정 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을 사용하였다. 열린 조정 방식은 동서유럽 국가의 차이를 인정하고, 목표를 이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속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유연한 방식이었다.

유럽연합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새롭게 가입한 국가들을 위해 통합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형적 확대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서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유럽적 정체성의 형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목적도 추구되었다. 서유럽에서는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면서 다양성과 세련된 문화상품이 존재하는 반면 동유럽에서는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통합 정책으로 ‘문화(Culture) 2000’이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문화이해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문화 2000’ 프로그램은 1998년 5월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제출했고, 2000년 2월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유럽통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럽의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유럽의 각 지역에 산재한 주요 유적과 문화유산을 개발, 보존하였다. 한편, 상이한 문화 간의 대화와 사회적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유럽인들이 국가별, 지역별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유럽문화지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sup>96)</sup>

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화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용과 근로 복지 정책,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사회포용정책이 강조되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전개되었다. 유럽통합의 미래를

96) 최진우,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정체성의 정치,” 94-95쪽.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청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에라스무스(Erasmus)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 언어의 바벨탑 프로그램 등이 있다.

1987년 7월부터 시행된 에라스무스는 ‘대학생들 간 이동을 위한 유럽 프로그램’ 즉 Europea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의 약자로 회원국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에라스무스는 대학생들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상호 이해를 높인 프로그램, 대학생 사이에서 ‘우리는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12월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은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드는 직업교육과 훈련, 이를 위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 국가 간 직업훈련 교육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3) 평가와 시사점

동서독의 통합과 같이 동서유럽이 유럽연합의 지붕 아래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의 경험이 축적되었다. 유럽연합의 동서유럽 통합정책은 정책적 한계와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서유럽 선진 국가들은 나중에 가입한 동유럽 회원국을 껴안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다.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하였으며, 사회적 이질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차별이나 불평등 의식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였다.

회원국의 문화와 역사, 자연과 종교,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진행하는 문화통합의 핵심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강대국의 문화를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강

요하지 않고, 개별국의 특징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는 원칙은 유럽연합 문화통합의 핵심이었다. 이는 동서유럽 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유럽은 소련의 영향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서유럽에 비해 낙후하였다. 일방적인 통합은 유럽 2등국이라는 열등감을 생기게 할 수도 있었다. 문화적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칫 강대국으로부터의 지배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인들은 ‘다양성 속의 통합’을 유럽을 설명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합에서도 외형적인 통합 이외에도 내적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나 상호 이해 없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이란 구성원 공통의 가치관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공존을 위한 공생관계가 공고하게 구축되는 관계를 의미한다.<sup>97)</sup> 남북한 사이에는 분단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한 과거의 흔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은 남북통합의 걸림돌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통일과정을 문화적 동

---

97) 란텍커(W. S. Landecker)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사회의 가치와 역할, 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분화하면서 문화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구분하였다. 란텍커는 사회통합을 ‘규범적 통합’, ‘의사소통적 통합’, ‘기능적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규범적 통합이란 사회문화의 핵심적인 공통의 가치가 사회체계 내에서 구조화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적 통합이란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주요한 수단을 의사소통으로 보는 시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기능적 통합은 분업에서 출발한 사회문화가 고도화 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분절화된 개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정은, 『유럽연합(EU)의 제 5차 확대에 본 동서유럽의 통합: 남북통합을 위한 성찰』, 14-15쪽.

화(assimilation)로 인식하고 어느 한편의 문화로 종속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과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상호 인정과 공생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해소되어야 할 갈등과 인식해야 할 필요성 없이 단일민족의 신화에 의존한 통일논의는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유럽연합은 통합방식에 있어서 ‘열린 조정방식(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을 채택하였다. 열린 조정방식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에게 정책이나 규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형편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 국가의 차이가 크고, 문화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었다. 중앙집권적 방식을 탈피하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방식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유럽연합의 문화통합 정책은 동서유럽의 통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지만 유럽인들의 내면까지는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합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통합을 준비했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이 강대국에 포섭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자발적으로 유럽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유럽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이 완전히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인들이 느끼는 정체성 의식은 아직 약하고, 소속감과 충성심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정책 차원에 그쳐 관료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유럽인들이 터키와 같은 이슬람 문화를 다양성의 틀 안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유럽인들은 유럽 외의 지역에서는 유럽인으로 행세하지만 정작 유럽 내에서는 자국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으로 문화적 통합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뒷받침되어도 내면적인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남북한의 통합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된 지 10년 만에 동독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서독 주민의 80%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내적인 장벽은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되었고, 독일통일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화적 갈



등은 줄지 않았다. 동서독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무능한 동쪽사람(Ossis)’와 ‘오만한 서쪽(Wessiss)’이라는 의식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통일 직후에 나타난 동서독인의 거리감이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통일 이후에도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과 달리 문화적 통합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편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다른 문화를 온전히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갈 수 있지만 문화는 소통과정 없이 통합에 이를 수 없는 속성이 있다. 통일 독일이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 역시 서독의 제도와 문화의 이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제도의 이식은 단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지만 정착과정에서는 거부감과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비용의 몇 십 배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어 사회발전의 가장 큰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5-1) 유럽연합(EU) - 국가 내(스페인 바스크)**

### **(1) 갈등양상**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의 17개 자치주 가운데 하나로 남부 4개 지방과 북부 3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때 독립국가였지만 지금은 스페인에 속해 있다. 오랜 역사와 고유 언어인 바스크어를 가지고 있다. 바스크 족은 피레네산맥을 경계로 스페인 쪽에 약 265만 명, 프랑스 쪽에 약 3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바스크 지역은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와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었다. 형질 인류학적으로 바스크인들은 유럽인들과 다르며, 바스크어 또한 계통적 뿌리가 인도-유럽어족과 다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힘이 약하여 많

은 시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 역사적으로 824년에 세워진 나바라 왕국이 다스렸지만 1234년 이후 왕위를 잇지 못하여 이웃 왕가에 의해 통치되었다. 14세기에 스페인에 통합되었지만 준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19세기에는 특권이 박탈되는 등 외세에 시달렸다. 외세에 의한 오랜 통치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독립성을 잃지 않고, 민족적 성향을 지켜왔다.

바스크 분리주의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프랑코 정권이었다. 1933년 바스크자치주가 탄생했지만 프랑코 독재정권에 의해 심한 탄압을 받았다. 1960년 프랑코 독재정권에 의해 바스크 언어가 금지되었으며, 바스크 문화도 금지되었다. 이에 대항해서 망명정부가 만들어지고, ETA(Euskadi Ta Askatasuna, 바스크 조국과 자유)가 등장해 분리주의적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 1959년 스페인 프랑코 군사독재 정권이 바스크어 사용을 금지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섰다. ETA는 관공서 차량폭탄 테러, 요인 암살 등을 통해 800명 이상을 살해하였다. 2006년 휴전을 선언하였으나 그해 12월 마드리드 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를 감행해 53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1970년~1980년대에는 바스크 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으나 자치권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테러를 시도함으로써 기반이 약화되었다. 프랑스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프랑코 정권 당시 프랑스는 바스크 주민들의 망명을 정치적 망명으로 간주하고 받아주었지만 프랑코 사망 이후 양상이 달라졌다.<sup>98)</sup>

## (2) 대응

스페인은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달라서 지역별 특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스크 지역을 비롯하여 지방 주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바스크주는 1979년 지

---

98) 바스크의 북쪽지역은 프랑스 영토에 소속되어 있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북녘민’(Iparretararak)이라는 무장조직을 만들어 프랑스와의 분리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방의회 구성, 지방경찰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조세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갈등에는 경제적인 원인도 있다. 바스크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부의 대부분이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흡수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촉구와 ETA의 무력투쟁 중단 선언으로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 (3) 평가 및 시사점

바스크 분리 독립운동은 오랜 역사와 언어를 지닌 바스크인들의 독립 요구에 의한 것이다. 남북은 오랜 역사적 공통성과 단일 언어를 갖고 있어서 인종적 차이, 언어적 차이에 의한 분리 운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민족적 차이를 강화하고 있다. 민족적 우월주의는 1990년대 중반이후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으로 나타나며 정치체제와 연결되었고, 2000년 이후 ‘아리랑민족주의’를 통해 선민사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정통성 논쟁이나 차별화된 민족의식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민족적 동질성이 깨어질 수 있다.

비록 한민족의 단일민족론이 근대적 신화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도, 단일민족 신화가 갖고 있는 통일의 동력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남북은 오랫동안 민족적 정통성 계승 논쟁을 벌여왔다. 정통성 계승 논쟁은 적대적이면서 대타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민족문화의 계승 작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통일과정에서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되고, 민족문화의 다양한 발전 양상에 대한 상호 긍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일민족의 신화는 부정적인 방향을 깨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족적 차이로 부각되고, 문화적으로 탈가치화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문화적 성과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 불평등이 강화될 경우, 북한주민들에게는 ‘식민화 감정’을 낳게 될 것이다.<sup>99)</sup> 남북 사이에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족문화 논쟁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5-2) 유럽연합(EU) - 국가 내(북부이탈리아)

### (1) 갈등 양상

이탈리아는 로마제국 이후로 1860년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개의 도시국가와 식민지로 이루어진 반도였다. 1860년 이후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여 왔다.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가 제도화되었고,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정치적으로 이탈리아는 1946년 국민투표를 통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가 되었지만 남북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민족국가로 인식되었던 이탈리아는 경제적인 차이가 부각되면서 분리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이해관계, 생활차이에 대한 문제가 새삼스럽게 분리운동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은 로마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동방과 교역이 시작되고, 제노바, 베네치아가 발전하면서 밀라노나 토리노 등과 함께 르네상스의 기반이 된 곳이다. 북부는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중공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남부유럽의 중심적인 공업지역이다. 북부는 경제적으로 윤택

---

99)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한국사회학』, 제41집 6호 (2007), 231쪽. “체제통합이 남과 북의 비대칭적 인정(asymmetrische Anerkennung)으로 흐르기 쉽다. 북한 사람들의 삶과 정치문화가 일률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경멸되고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프레이저의 지적처럼, 사회생활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방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북한 사람들 전체에 의해 그들의 사회적 상황에 전형적인 것으로 경험될 때 집합적 행동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주민들 사이에 ‘비대칭적 인정’을 타파하려는 ‘인정투쟁’이 사회갈등의 범주적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체제통합’이 가져올 ‘사회적 추락’의 경험이 ‘인정투쟁’을 부채질할 것이다.”

한 반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은 경제적 발전이 더딘 지역이다. 남북의 이탈리아는 경제적 차이를 차별요소로 인식하게 되면서, 남부와 북부의 정치적인 차이, 문화적 차이가 재발견되고 분리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은 경제적인 이유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탈리아는 지역적으로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격차가 크다. 북부지역은 중공업이 발전하였고, 남부지역은 관광이나 경공업이 중심이다. 남북의 경제적 차이는 커서 남부이탈리아의 실업률은 북부의 4배에 달할 정도였다. 남부에는 마피아 조직이 있어서 북부에 거점을 둔 기업들이 남부로 진출하기를 꺼리며, 취업을 위해 남부지역 사람들이 북부로 들어가고 있어서 경제적인 차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는 유럽통합으로 인해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북부의 경우에는 유럽통합으로 더 큰 소비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북부 분리주의자들은 정치인들인 정치적 득표를 위해 남부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남부지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부의 분리주의자들은 남북의 분리 또는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는 남북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다.

## (2) 대응

이탈리아 정부는 남북의 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 차이는 쉽게 줄지 않고 있다. 남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남부지역은 노동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사업들이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어서 대기업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북부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차이는 여전히 큰 편이다. 남부사람들은 경제적 차이에 대한 불만이 있고, 북부 사람들은 자신의 세금이 남부인을 위해 쓰인다는 인식이 있다. 문화적으로도 북부의 이탈

리아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남부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봉건왕국에 의해 지배 받았던 지역이다. 이탈리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통일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요인이 크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들이 모아지고 있다.

### (3) 평가와 시사점

이탈리아의 분리주의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통일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이 그대로 문화적 우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분리운동은 전통적인 원인이었던 인종이나 언어, 종교 등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였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남북의 경제적 격차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직후 동독지역의 전문 인력은 대부분 서독인으로 대체되었다. 1997년 통일독일의 행정, 경제, 문화, 학문 등의 분야에서 서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가깝거나 90%를 상회하였다. 이 분야의 전문인들은 대규모 실직을 경험하였다.<sup>100)</sup> 이러한 경향은 통일한국 사회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통일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다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분리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6) 홍콩

### (1) 갈등 양상

---

100) 이두원,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2차 세미나 자료집(2011. 11. 11), 11쪽.

홍콩인들과 본토 중국인들의 갈등 원인은 홍콩인들의 정체성 상실과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홍콩인의 정체성은 중국의 국민으로서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홍콩인으로서 유지되고 있다.<sup>101)</sup> 영국식민지 시기 홍콩은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서 아시아 지역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sup>102)</sup> 반면 중국인들은 이런 홍콩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내륙과 홍콩 사이의 인구 이동은 매우 자유로웠고 홍콩인이라는 정체성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기 1년 전인 1841년 영국군의 통계에 따르면 홍콩섬의 인구는 5,650명에 불과하였다. 본토에서의 분쟁이나 동란이 있을 때마다 홍콩으로 대량 이주가 발생하곤 하였다.<sup>103)</sup> 홍콩에서도 본토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홍콩 중국인이나 본토 중국인의 의식 차이나 토착민과 이주민의 구분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반영폭동과 천안문 사건을 비롯한 중국의 인권정책을 통해 반감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 속에서 ‘홍콩인’의 정체성이 새삼 문제가 된 것이다. 홍콩인들은 넓은 의미의 중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토 중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듯하다.

---

101) 홍콩인들의 문화적 갈등은 홍콩 중국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본토 중국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 홍콩의 중국인들은 자기 고유의 언와 풍습을 보존하면서 족보를 통해 조상을 확인하는 등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홍콩 중국인들은 대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온 중국인들로 주로 동향회나 상조회 등을 조직하여 집단의식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강한 자의식을 가진 홍콩 중국인들은 원주민들과 오랜 종족적 갈등(ethnic conflict)을 겪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의 갈등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다수의 본토 중국인들이 홍콩에 들어오고, 홍콩의 정치사회적 생활방식과 중국의 정치사회적 생활방식이 충돌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102) 홍석준·이현중, “홍콩 중국인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의 지속과 변화,” 『중국현대문학』, 제23호(2002), 456쪽.

103) 장정아, “타자의 의미: ‘홍콩인’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 『한국문화인류학』, 36권 1호(2003), 50쪽.

특히 ‘문화대혁명’ 이후 일부 좌파를 제외하고는 스스로에 대한 ‘우월한 문명 의식’을 느끼고 있다.<sup>104)</sup>

홍콩 중국인들의 구분의식이 형성된 결정적인 사건은 1967년에 있었던 반영(反英)폭동이었다. 반영폭동은 조화(造花)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이 삭감된 데 항의하여 파업을 하자 공장 측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진압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폭동으로 확대되었다. 영국 식민통치에 대한 항의로 출발한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좌파에 대한 공포와 반감으로 이어졌다. 폭동의 과정에서 보여준 좌파의 행동에 대해 홍콩 중국인들은 본토의 중국인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sup>105)</sup> 영국의 식민지배 통치 방식도 변화되었다. 영국은 홍콩인에 대해 배려를 하면서 영국인 관료와 경찰의 전횡적인 권력남용과 부패를 줄여나갔다. 홍콩인들에게는 법치홍콩과 부패한 중국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생겨났다. 여기에 홍콩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홍콩에서 태어난 인구가 늘면서 홍콩이라는 귀속의식이 생겨났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도는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홍콩 중국인과 본토 중국인들의 신분적 경계의식도 크고, 문화적 경계의식도 분명하였다. 1989년 있었던 천안문사태도 홍콩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식민통치 방식에 익숙한 홍콩인들은 향후 홍콩을 지배할 중국이 보여준 천안문사태 처리 과정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민주와 자유를 홍콩의 상징으로 생각하던 홍콩인들에게 중국 정부의 탄압은 야만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홍콩인들에게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기억이나, 중국의 대만통일이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 있다.

오랫동안 영국식민지를 겪음으로 해서 홍콩 중국인들은 중국 국민으로서 갖는 정체성이 약하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중국인들의 내왕이 자유로워지면서 중국과 홍콩인들의 교류도 확대되고

104) 임춘성, “1997년 회귀를 전후한 홍콩중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중국현대문학』, 제23호(2002), 432쪽.

105) 장정아, “타자의 의미: ‘홍콩인’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 50쪽.



문화적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인들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접촉을 통해 홍콩 중국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홍콩 중국인들에게 ‘홍콩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2004년 홍콩 피크트랩의 새치기로 인해 발생한 폭력사태는 홍콩 중국인들과 본토 중국인들 사이의 문화적 격차를 확인시켜주는 일례였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홍콩을 방문한 중국인 가족이 순서를 기다리던 홍콩 중국인 가족을 체치고 새치기를 하는 사건이었다. 먹살잡이까지 가는 사태로 확대되었다.<sup>106)</sup> 중국 대륙에서 새치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홍콩 중국인들은 질서를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인식한다. 홍콩 중국인들은 본토 중국인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홍콩은 국제적인 도시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홍콩의 문화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중국에 반환되었지만 이런 질서의식과 국제적 감각은 여전히 홍콩 중국인과 본토 중국인을 경계 짓는 요소가 되고 있다. 홍콩 중국인들은 본토 중국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너도 갖추지 못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지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고, 국제적인 감각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홍콩 중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홍콩사회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풍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본토의 중국인들은 외부세계와의 접촉 경험이 일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sup>107)</sup>

홍콩인 자녀의 신분문제도 갈등의 한 측면이 되고 있다. 홍콩인이 외국에서 낳은 자녀는 쉽게 홍콩인이 될 수 있지만 본토에서 낳은 아이들은 특수한 입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경절차를 밟고도 거류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홍콩 입경처에서는 외국에서 출생한 홍콩 중국인의 자녀와 중국 내지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내지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체포 송환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내지 자녀들

106) 홍석준, “1997년 이후 홍콩인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 홍콩인 정체성 만들기의 문화적 의미,” 『인문학논총』, 제5집 2호(2006), 185-186쪽.

107) 위의 글, 185-186쪽.

은 내연관계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로서 홍콩인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홍콩 입경처나 홍콩 내에서는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과 함께 인권문제도 갈등을 증폭하는 요인이다. 1999년 홍콩의 중심법원에서 내려진 홍콩 거류권 판결 이후의 판결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내지 자녀들의 일부가 불법체류 명분으로 체포된 사건 역시 행정당국과 홍콩 중국인의 인권의식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홍콩 행정당국의 약속과 달리 일부 내지 자녀들이 체포되었으며, 체포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인권탄압에 대해서 홍콩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sup>108)</sup> 홍콩 중국인들은 본토 중국인들이 세계 자본주의 흐름이나 세계화 경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취지면서 홍콩 중국인들과 다르다는 의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 (2) 대응

홍콩은 영국식민지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 이후 새로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의 중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 것이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홍콩은 1841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은 홍콩을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시켰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도시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 내의 특별한 행정구의 형태로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사회주의 중국의 홍콩으로서 재탄생한 것이다.

홍콩의 중국 편입은 자본주의 체제하 홍콩인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으로 진입한다는 새로운 역사적 실험대였다. 홍콩 나름대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 홍콩 중국인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편입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의미하였다. 중국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국양제’에 합의한 이후 홍콩특별행정구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홍콩은 식민지 시기의 경

---

108) 장정아, “타자의 의미: ‘홍콩인’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 55쪽.

제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sup>109)</sup> 중국 정부는 경제적 차이와 제도적 차이가 큰 홍콩에 대해서는 홍콩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홍콩 반환 이전의 정책을 유지하지는 않았다. 홍콩 중국인과 본토 중국인의 갈등 원인인 불법 입경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홍콩인 신분이 생긴 것은 1949년이였다. 1949년 중국이 성립되면서 홍콩 식민정부가 ‘인구등기법’과 ‘홍콩신분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식적인 ‘홍콩인’ 신분이 탄생하였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본토 중국인들의 홍콩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홍콩의 경제적 발전은 많은 본토 중국인들을 홍콩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되었다. 본토 중국인들에게 홍콩은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다. 홍콩드림을 꿈꾸는 중국인들의 불법 입경이 계속되었다.

불법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본토인들의 홍콩 입경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홍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홍콩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주를 허용하는 ‘터치 베이스 정책(touch-base policy)’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80년 말 홍콩은 ‘터치 베이스 정책’을 취소하고 불법이민자들을 강제송환하기 시작한다. 홍콩인이라는 의식은 이처럼 본토 중국인들을 통제하고, 거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생겨났다.<sup>110)</sup> 1997년 중국 정부는 홍콩을 내국으로 간주하고 홍콩정부가 출입경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홍콩 중국인과 본토 중국인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홍콩의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제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홍콩에 대한 열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3) 평가와 시사점

---

109) 홍석준, “1997년 이후 홍콩인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 홍콩인 정체성 만들기의 문화적 의미,” 176쪽.

110) 장정아, “타자의 의미: ‘홍콩인’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 52쪽.

홍콩인들의 경계의식이 생겨난 주요 원인은 홍콩으로의 입경 차별, 경제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이다. 1970년대 홍콩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홍콩은 본토로 귀속되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 국제도시로서 홍콩은 현대화와 산업화, 세련된 국제도시로서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홍콩에 거주한다는 자긍심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홍콩에서 출생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속감이 강화되었다. 홍콩으로서는 본토 중국에 귀속되어야 할 이유가 많지 않았다.

홍콩의 발전한 대중문화는 문화적으로 홍콩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홍콩인이라는 의식형성을 촉진하였다. 홍콩 대중문화 속에 비추어진 본토 중국인들은 촌스럽고 탐욕스러운 대륙인으로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에서 현대 문화는 홍콩영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홍콩문학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은 것도 30년이 넘었다. 문화적으로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희망과 희망 없는 변화 속에서 홍콩인들의 심리적 불안과 도시적 풍모가 영화와 문학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홍콩인들의 정체성이 드러났다.<sup>111)</sup>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영국인이 될 수 없었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중국으로의 회귀 속에서 홍콩인들은 홍콩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7) 남아프리카공화국

### (1) 갈등 양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600년대 네덜란드인의 대이주와 1800년대 영국의 식민지로 인한 다인종 다민족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인종 간 갈등상황이 상존해 있고, 식민지를 겪으면서 백인 인종 내의 갈등은 물론, 흑인과 백인간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48년

---

111) 임춘성, “1997년 회귀를 전후한 홍콩중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432쪽.

국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점진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실시되면서 흑백 간 인종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sup>112)</sup>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은 주택·교육·언어 등 실질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인종에 따라 엄격히 나눈 분리정책이었다. 194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의해 모든 흑인들은 인종적 정체성에 따라 분류되었다. 흑인들 사이에서는 인종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반대현상이 병존하고 있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인종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모든 흑인 인종집단들을 동일시하고 비인종주의적 관점에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는 상반된 현상으로 특히 1970년대 초에 나타난 흑인의 정체성, 흑인의식운동은 백인지배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인종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반투교육을 추진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아프리카인을 분리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프리카어를 교육하였다. 즉 민주적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유럽인 지배계층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어를 교육시켰던 것이었다. 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던 반면, 아프리카인들은 아프

---

112) 다른 지역과 동떨어져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20세기 내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라고스나 카이로 같은 아프리카 주요 도시로부터 수천km 떨어져 있고, 남아프리카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의 나라들로부터는 1만km 이상 떨어져 있다. 소수 백인들에 의해 지배되었던 정부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따라, 주택·교육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에 따른 엄격한 분리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주민들을 백인, 유색인, 흑인으로 구분하여 3개 국가로 분리했다. 첫 번째는 영국과 네덜란드계(보어인) 조상을 가진 백인 집단이다. 이들은 정치적 지배권을 얻기 위해 몇 세대에 걸쳐 싸웠고, 그 투쟁의 폭력적 정점은 보어 전쟁(1899~1902)이었다. 2번째 흑인 집단은 북서쪽 사막지역에서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산족, 동쪽 고원에서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줄루족, 그리고 남쪽의 케이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코이코이족 등으로 구성된다. 유색인종 집단은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종인 칼라드와 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중국계 아시아 인종으로 구성된다.

리카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1960년 쉐퍼빌 사건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차별적 언어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아프리카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악법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결국 쉐퍼빌에서 시위를 하는 아프리카인 학생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였다.

1994년 이후 민주적 정권교체로 등장한 만델라 정권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당시 폭력적인 정책으로 인한 흑인 분리통치, 그리고 흑-백 갈등과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정책, 과거사 청산작업, 평화교육 등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채 2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흑백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및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와 식민지화는 남아공의 문화적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 세기에 걸쳐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진 이주의 결과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언어집단들이 서로 교류하였고 문화이입이 일어났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반투어 종족들은 서로 혼합되었으며 이곳에 살았던 선주민인 코이산 족들과도 혼합되었다. 식민지화는 남아프리카에 유럽계의 후손들과 아시아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17세기부터 시작된 백인들의 정착은 인종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단순히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종집단에 또 하나의 이질적인 문화집단이 유입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유럽인의 가치와 관습들이 소개됨으로서 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이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되었다. 케이프로부터 시작된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통치는 모든 토착민들에게 적용되어 갔으며 확대되어 갔다.

식민통치기간 동안 이루어진 인종집단들의 상호작용은 개척자적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우세한 지배력을 가진 인종집단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은 백인들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토착민 집단의 노동력은 인종집단들의 상호작용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초기 케이프(Cape) 사회에서는 백인들과 다른 인종집단들 사이에 대체

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구별은 색과 인종에 따른 차별로 고정되어 갔으며 남아공 사회의 특징적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113)</sup>

남아공의 식민지화는 더욱 다양한 인종집단들이 유럽과 다른 대륙으로부터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유럽인들과 그 후손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아공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문화적으로 더 다양한 색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sup>114)</sup> 남아공의 이러한 인종적 다양성은 인종의 우열과 열등이라는 개념을 갖게 함으로써 남아공의 정치역사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다원화된 사회 중 하나로 이야기될 정도로 다문화(multicultural), 다인종(multiethnic)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의 인구구성을 보면 크게 흑인, 백인, 칼라드, 인도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내에서도 이주와 식민지로 인해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고 있다.

흑인의 경우 인종학자들에 따르면 5개의 인종으로 정리되고 설명되고 있다. 은구니(Nauni)집단(줄루Zulu, 코사Xhosa, 스와지Swazi, 은데벨레Ndebele), 소토(Shoto)집단(북부 소토와 남부 소토 그리고 츠와나Twana족), 샹가네(Shangane)/쑹가(Tsonga)집단, 벤다(Venda)집단, 그리고 램바(Lemba)집단이다. 가장 큰 단일한 인종집단은 줄루족이며, 약 200여개의 하위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부족은 씨족으로 나뉘어져 있다.

194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의해 모든 흑인들은 인종적 정체성에 따라 분류되었다. 흑인들 사이에는 인종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반대현상이 병존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인종의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모든 흑인 인종집단들을 동일시하고 비인종주의적 관점에서 행동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따른 아프리카인의 교육목표 또한 문화적

---

113) 김광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적 정체성,” 『아프리카연구』, 제13호(2001), 115-116쪽.

114) 위의 글, 117쪽.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는 상반된 현상으로서 특히 1970년대 초에 나타난 흑인 정체성 운동은 백인지배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인종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sup>115)</sup>

국민당정부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의해 1950년 실시된 인구등록법은 남아공의 인구를 백인, 칼라드, 인도인 그리고 흑인 등 4개의 주요 인종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인구등록법에서 사용된 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다. 흑인들은 인종적인 상속에 따라 분류되었고, 칼라드인들은 ‘개념의 제거(conceptual elimination)’에 따라 분류되었다. 주로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했다. 백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주로 외모에 기준을 두었다.<sup>116)</sup>

**[표 5] 인종에 따른 인구비율(1996)**

구분	인구크기(백만)	백분율(%)
흑인	31.1	76.7
백인	4.4	10.9
칼라드	3.6	8.9
인도인	1.1	2.6
기타	0.4	0.9
총계	40.6	100

남아공에서 두 번째로 큰 인종집단은 백인과 유럽인들의 후손이다. 남아공에 정착한 최초의 백인은 1652년에 들어온 네덜란드인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1688년에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이, 1820년에는 영국인들이, 마지막으로 독일인들이 이주하였다. 백인들의 인구구성 또한 다양한 인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백인들 내의 문화와 언어는 아프리카어와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115) 위의 글, 118-120쪽.

116) 위의 글, 117쪽.



아프리카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백인들 중 가장 큰 집단이다. 아프리카언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너의<sup>117)</sup> 민족적 정체성은 17세기부터 시작된 네덜란드계 백인들의 이주가 시작될 때부터 여러 세기 동안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네덜란드의 후예들이며 독일과 프랑스의 자손들이 포함된다. 케이프에서부터 이주자들은 내륙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확대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언어를 발전시켜나갔다. 이후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영국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남아공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던 아프리카너들과 갈등하였다. 영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언어와 종교, 도덕,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이주를 시작했던 아프리카너들의 국가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와 영국 제국주의 사이의 분쟁은 1902년 5월 아프리카너의 패배로 끝나게 된 앵골로 보어전쟁(1899~1902)으로 그 정점에 달했으며 이 전쟁은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이 설립된 이후 아프리카너는 국립학교와 네덜란드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1925년 아프리카너는 남아프리카 연방의 공식어 중 하나로 선포되었다. 때문에 아프리카너어는 아프리카너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들은 1930년대부터 국민당(National Party)과 아프리카너형제동맹(Afrikaner Broederbond)의 지도하에 활발히 활동하였고 1948년 국민당은 선거에서 승리,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을<sup>118)</sup> 실시하였다.

---

117) 20세기 이전 아프리카너라는 말은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써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아프리카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118)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구가 다양한 인종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가능한 한 영토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인종적 집단은 그들 자신만의 모든 것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는데 결과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는 다른 집단들에 대한 차별을 가져왔다.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국민당정부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아프리카너의 우월적 지배, 그리고 공화국의 건설이었다. 이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는 백인들의 우월적 지위와 백인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고안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들은 영국의 이주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인들의 문화는 주로 관공서 같은 공공부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영국인들은 주로 도시에 정착하였다. 1815년 이후에 영국의 양식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이 변화되었다. 그 이후 150여 년 동안 아프리카너와 영국인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하였다.

언어는 네덜란드인들의 ‘영국화’와 관련하여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 영국으로부터 이주한 이주자들은 19세기 행정분야, 군사분야, 그리고 지적인 분야에까지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였다. 앙골로 보어전쟁과 밀너의 영국화 정책은 백인들 사이의 갈등을 첨예하게 하였다. 1910년 남아프리카연합이 출범하면서 영국인들의 지위는 법적으로 아프리카너와 동일하게 되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아프리카너는 영어 화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였다. 영어 화자들의 정치적 힘은 1948년 이후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동안 많이 약화되었다.

칼라드(coloured)는 말레이계 노예들과 코이코이 노동자들, 산족 또는 아프리카인들과 백인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결합으로 태어난 후손들로 구성된다. 19세기 후반 ‘칼라드’라는 용어는 주로 모든 비유럽인들을 의미했다. 1950년에 만들어진 인구등록법은 아프리카인도 백인도 아닌 모든 사람들을 칼라드로 정의했다. 칼라드로 불린 혼혈 종족 그룹은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나머지 아시아인들, 말레이인, 그라쿠아(Griquas)인, 산(san)족과 코이코이족, 다른 종족들과 혼혈이 일어난 남아프리카인과 다른 인종과 결혼한 유럽인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인도인은 그들 자신의 인구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일본인은 명목상 백인으로 취급되었고, 중국인은 백인으로 재분류되었다. 1991년 종족분류가 폐지된 이후 칼라드들은 다른 정치적, 문화적 집단으로 흡수되었다.

인도인의 경우 두 가지 형태의 이주에 의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860년부터 1911년 사이에 인도인들이 계약노동자로 이주해 왔으며, 이후에는 ‘여객인도인’으로 불리는 무역업자와 상인들이 이주하여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

되어졌다. C.J. Jooste, "Partition as a constitutional option," D.J. van Vuuren et al.(eds.), *South Africa in the nineties* (Pretoria : HSRC, 1991), p. 232.

이에 남아공 정부는 인도인 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1913년 ‘이주제한법’을 실시하였다. 즉 인도인들의 문화는 쉽게 동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인도인들이 인도로 송환된다는 가정 하에 인도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1994년 민주적 정권교체에 따라 인도인들은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인도인들은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정부 고위층의 관리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인들은 남아공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아공은 대이주와 식민지의 경험으로 인한 구조주의적인 다원주의로 인해 문화적으로도 다원성을 띠게 되었다. 이는 인종 간의 갈등을 낳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갈등 역사는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들의 일체감을 갖기 힘들게 하였고 공통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을 낳았다.

1945년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당 정부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인종적 차별 정책을 강화하였고, 국민의 통일된 국가의식 형성은 어려웠다.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과정 없이 남아공의 다양한 인종집단을 획일화시켜 구별했다.<sup>119)</sup>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만을 강조함으로써 차별의식을 자리 잡게 하였다.

1994년 이후 정권교체로 인해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은 종식되었지만, 남아공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정책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의식이 남아 있고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이주와 식민지 경험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인종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너의 민족주의 등으로 인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1990년대 중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

119) 김광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정체성과 국가건설 그리고 아프리카너의 역할,” 『아프리카연구』, 제14호(2001), 175쪽.

## (2) 대응

1994년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 남아공정부는 국가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어정책,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의 활동을 통한 과거사 정리 작업, 그리고 평화교육이다.

### ① 언어정책

언어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 국가는 언어정책을 통해 국가건설을 꾀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특히 복합적인 사회문화를 지닌 국가일수록 언어정책은 중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현재 복수의 언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아공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프리칸스어가 여전히 민족정체성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남아 있다.

1994년 이전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아래에서는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만 공식어로 사용되었고 아프리카어는<sup>120)</sup> 소수언어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었다. 1994년 정권을 잡은 아프리카민족회의당은 기존의 공식어에 9개의 아프리카어를 공식어로 추가해 복수의 언어를 공식어로 지정했다. 과거 인종차별정책 아래 실추되었던 아프리카어와 소수민족어의 위상을 높여 모든 언어의 평등한 사용권을 보장한 것이다. 1996년 현재 남아공의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아프리칸스어의 영향력은 여전히며, 국제어로서 영어는 인종을 뛰어넘어 남아공사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sup>121)</sup>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언어정책은 아프리카어에 대한 불평등과 언어분리를 바탕으로 공식어로서 영어와 아프리칸스어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

120) 아프리칸스어의 경우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유럽어의 일종이지만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프리카어에 포함된다. 장용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어정책과 국가통합,” 『아프리카연구』, 제19호(2005), 101쪽.

121) 남아공 공식어의 특징은 특정 언어사용이 특정지역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아공의 역사, 특히 식민지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있었다. 아프리카언어가 공식어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중요했다. 먼저, 공식어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은 사회진출, 특히 정부관련 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즉 아프리카언어의 공식어 위치 획득이 아프리카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언어정책의 골격은 당시 남아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에 대한 도전과 아프리카 언어를 분리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 유는 첫째, 아프리카어와 아프리카언어가 섞임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아프리카언어의 오염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둘째, 아프리카너들은 영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아프리카언어의 활성화를 위해 역설적으로 아프리카어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즉 아프리카인들이 영어를 선호하는 환경에서 아프리카어가 약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영어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sup>122)</sup>

실제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반투스탄 정책은 아프리카 사회를 10개로 분리 정착시켰다. 반투스탄 정책은 반투교육을 통해 아프리카인에게 영어가 아닌 아프리카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아프리카어에 대한 민주적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어를 교육한 것이다. 또한 정권은 1953년 아프리카인들이 선교후원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투교육조례 47호를 통과시켜 선교기관에서 영어를 교육받음으로써 아프리카인 엘리트 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1994년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달성한 남아공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언어정책을 과거의 영어와 아프리카언어 우대정책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영어와 아프리카언어 이외에 9개의 아프리카어를 국가 공식어로 제정하였다. 남아공 정부는 언어를 통해 국가통합과 국민들의 언어선택에 따른 민주적 권리를 높인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언어정책은 다른 현안에 밀려 큰 관심을

---

122) Kathleen Heugh, "Recovering multilingualism: recent language-policy developments," in Rajend Mesthrie, (ed.), *Language in South Afric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 460.

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민족회의당의 경우 모든 언어가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고, 이와 함께 다른 언어에 비해 영어에 대한 호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sup>123)</sup>

현재 남아공의 언어정책은 정체성과 방향성에 있어 문제를 안고 있다. 남아공의 언어정책은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단절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언어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남아공 인구 중 아프리카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특정 거주 지역, 정확히 말해 과거 반투스탄 지역과 일치한다. 즉 특정 거주 지역에서 그들의 언어인 아프리카어를 사용하는 경우 주류사회에서 쓰는 언어와의 소통문제 등으로 인해 다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의 현 언어정책이 국가통합과 국민들의 언어선택이라는 민주적 권리 확보라는 차원의 큰 대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아공 정부는 국제기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세계은행의 경우 교육정책과 관련해 세계은행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즉 외형상으로는 각국의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혜국의 언어정책에서 지역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국제어(영어)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sup>124)</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아공 헌법에 명시한 언어의 평등권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언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영어나 아프리칸스어에 비해 현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어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동안 영어와 아프리칸스어가 지배력을 행사해 왔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언어선택이라는 민주적 권리 확보는 아프리카 언어의 발달 수준, 그리고 그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언어정책과 다를 수 없을 것이다.

---

123) 이는 아프리카민족회의당을 이끈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영어권 국가에서 망명활동을 했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4) 장용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어정책과 국가통합,” 117쪽.

## ②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진실과 화해위원회(TRC)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새로운 국가건설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화해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으며 과거청산의 노력으로 국민을 화해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sup>125)</sup>

1994년 5월 1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취임식을 가졌다. 그 이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24년에 걸친 소수 백인통치와 46년간 유지되어 온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흑-백 갈등이 첨예했었다. 만델라 정권은 백인정권이 저지른 인종차별정책 및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1995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8년 7월까지 2년 여에 걸쳐 무려 160회의 청문회와 2만 1천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백인정권 시절 자행된 고문과 처형, 살인과 성폭행 등 잔혹한 인권탄압의 실상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피터 보타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으며, 흑인살상용 박테리아 개발 계획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리고 1998년 10월 29일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그 동안 활동을 정리한 총 5권, 3천 5백 여 쪽에 달하는 ‘인권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단죄하며, 특히 보타 전 대통령이 정적살해 등 인권탄압을 전반적으로 조장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백인정권의 잔혹한 인권유린 실상이 폭로되었지만, 한편으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흑백 간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당초부터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흑·백간의 화해’를 도모한다는 목적아래 ‘보복 없는 과거청산’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

125) 김광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정체성과 국가건설 그리고 아프리카너의 역할,” 179쪽.

인종차별로부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보복 없는 과거청산’은 화해를 통한 국민화합과 새로운 국가건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만델라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평화교육

남아공은 1600년대 네덜란드의 동방진출에 의하여 점령되고, 300년이 지난 뒤 영국의 식민지로 뒤바뀌었다. 그리고 금광과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되면서 한때는 세계의 자본이 집중되었다. 때문에 더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 인도의 노동자들이 대량 유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백인들이 남아공의 풍부한 자원을 독점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흑인들은 값싼 타 인종들의 노동력에 밀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변부로 전락하게 되었다.

영국은 식민지에 대한 동화정책을 펼치면서 자치권을 일부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정치협상을 하였지만, 백인정당인 민족주의 정당이 1945년 이후 우경화되면서 유색인종을 투표에서 배제하는 정책인 인종분리주의 정책을 실시한다.

1948년 영국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민족국가에서 이루어진 백인통치는 오히려 흑인들의 사회적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흑인분리를 위한 집단 거주지역과 반투교육정책에<sup>126)</sup> 따라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차단하고, 흑인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근대화의 길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였다.

1976년 차별적인 반투교육에 반대하여 백인들과 동등한 교육을 주장하며 일어난 소웨트 지역에서의 학생시위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민중적 대규모 봉기로 발전하였다. 이후 남아공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

126) 흑인 아프리카인에게는 아프리카 말(반투어)로만 교육하도록 하였다. 도시지역의 백인들은 서구 상류사회 수준의 교육혜택과 생활문화를 향유한데 반하여, 아프리카인들에게 학교는 있었지만, 근대적 직종 수행에 필수적인 영어를 배울 수도 없었다고 한다. 정용민, 『평화교육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연구』(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9쪽.



경제적 제재조치를 받아 1994년 마침내 흑인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아프리카 흑인정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합법화 승인, 인종 차별법 폐지 등을 실시하고 범국민적 개헌 협상회의인 민주남아공회의를 개최하는 등 획기적인 민주화 및 민족화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4년 국민선거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종식시킨 만델라 대통령의 교육개혁은 국가재건과 발전프로그램(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명명한 전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교육개혁은 국가재건과 발전프로그램의 핵심부분으로 정부는 아파르트헤이트의 파괴적 유산을 극복하여 민주주의·인권·평등·사회정의를 수립하는 교육제도를 형성하고, 평생교육제도의 설립을 통해 남아공 국민들이 21세기의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sup>127)</sup> 결국 남아공의 교육개혁은 21세기로부터의 도전과 기회를 과거 문제의 극복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 것이다.

만델라정부는 차별이 없는 미래를 목표로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로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재건과 발전프로그램에 의한 법적·정치적·사회적·교육 문화적 변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흑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민주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현재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 진행된 남아공의 모든 노력은 이전의 적대 세력이었던 흑과 백이 어떻게 평화공동체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때문에 남아공의 평화교육은 일반적 교육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자유·평등·비폭력·공존 등의 평화교육적 과제는 민주적인 국가건설 앞에서 다급히 완성되어야 할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설정되었다.

웨이커 평화센터는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는 인종분리주의 정책에 의해 고난 받는 민주적 인사들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해외로의 정치적 망명까지 주선하던 반정부적 성격의 기관이었으나,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시기에는 흑·백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교육·계몽하는 평화센터가 되었다. 이들의 핵심적 활동 가운데 하나가 1998년부터 시작된 “평화를 위한 학교발

---

127) 위의 글, 50-51쪽.

전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 for Peace)”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빈곤한 교수-학습의 환경과 함께 새로운 교과과정과 방법론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전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교육 현실에서 평화로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의 발전적 변화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sup>128)</sup>

### (3) 평가와 시사점

1994년 민주적인 정권교체로 만델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흑-백 갈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언어정책,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활동, 평화교육 정책 등을 실행하고 있다.

언어정책의 경우 국가통합과 국민들의 언어선택이라는 민주적 권리 확보의 원칙 아래 9개의 아프리카어를 공식어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남아공에서는 영어와 아프리칸스어와 함께 11개의 공식어가 있게 되었다. 이는 아프리카와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언어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지 결여와 국제기구의 압력 등으로 인해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재정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11개의 공식어가 있지만, 영어와 아프리칸스어 이외의 아프리카어들은 특정지역에서 특정하게 쓰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분리통치로 인한 탄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어들이 현재 변화 발전된 사회를 표현하기에는 상당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르트헤이트정권 시기의 언어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정책과 더불어 국가통합을 위해 만델라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강력하게 진행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청산작업과 평화교육은 새로운

---

128) 웨이커 평화센터는 그 외에도 특히 흑인 청소년들의 실업으로 인한 폭력화를 예방하기 위한 평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재훈련과 갈등 다루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은 그 지역의 폭력문화를 완화하는데 앞장서게 하고 있다. 위의 글, 54쪽.

국가건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흑백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및 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일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 이후 과거청산의 작업과 평화교육은 남아공의 사례에서처럼 분명하게 사회통합을 위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같은 분단국은 물론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사회통합과정에서 과거청산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갈등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는 과거청산 작업이 어느 한쪽의 희생에 의한 것일 때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8-1) 캐나다 ·호주 - 캐나다

### (1) 갈등양상

이중언어 국가로서 캐나다에 대한 관념은 캐나다에 대한 유럽의 식민지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캐나다 영토는 두 민족, 즉 영국과 프랑스에 의하여 식민지화 되었다. 영국은 오늘날의 뉴퍼들랜드 지역에 정착한 반면, 프랑스는 오늘날의 Nova Scotiz, New Brunswick, Prince Edward Island, 및 Quebec에서 식민지를 확대하였다. 1700년대 초까지 영어권 식민지와 불어권 식민지가 형성되었는데, 이들 집단들은 문화적 특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식민지 지역은 불어를 사용하고 가톨릭을 신봉하였으며 법 및 정치제도로써 시민법 체제를 답습한 반면, 영국 식민지 지역은 영어를 사용하고 개신교를 신봉하였다.

궁극적으로 영국은 ‘앤 여왕 전쟁’과 ‘7년 전쟁’과<sup>129)</sup> 같은 일련의 유럽

---

129) 7년 전쟁으로 인해 캐나다의 많은 영토가 영국계인 앵글로 색슨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차 차별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특히 19세기 들어서 정부는 원주민 동화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Residential Schools를 설립했고 이 기숙학교

전쟁을 통하여 캐나다에 대한 지배를 견고히 하였는데, 연해주 및 퀘벡과 같은 모든 프랑스 식민지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이 지역들은 영국의 통제를 받는 반면 문화적으로는 프랑스 문화권이었다,<sup>130)</sup> 1774년에 영국은 퀘벡법을 제정하여 포고령의 관행을 완화하였고, 1867년의 캐나다 연방헌법 제정에 의해 프랑스계 문화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19세기 말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였고, 이후 10여 년간 캐나다는 이민의 불이었다. 당시 대부분 이민자들은 대륙횡단철도를 건설 중이었던 철도회사에 의하여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캐나다 중부의 평원 지역에 정착한 농업 이민자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개방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영국계 캐나다인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인종, 민족 차별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다.<sup>131)</sup> 영국계는 전통적으로 경멸해 온 동부 유럽계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 사회에서 영국적 가치관이 흐려질 것을 우려하였으며, 프랑스계는 연방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소수민족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로 간주하였다. 이민은 또한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희망하는 기존의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위협요소로 인식되었다. 소수민족 이민자에 대한 민족적, 계급적, 지역적 차별은 자연스럽게 이민자들 사이에서 좌파운동으로 이어졌다.<sup>132)</sup>

---

들에 원주민 자녀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럽식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가족으로부터 격리시켜 원주민의 전통문화를 습득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또한 1880년대 캐나다는 서부지역의 인구확대를 위해 태평양 연안까지 철도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중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했던 백인이나, 흑인 그리고 원주민 노동자들 급여의 3분의 1만 지급받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이후 중국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 정부는 중국인들의 이주를 제한하기 위해 인두세를 부과하였다. 최혜양, “캐나다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이해,” 『다문화콘텐츠연구』, 4호, 통권 9호(2010), 229-230쪽.

130) 강휘원,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국가정책연구』, 제 23권 3호(2009), 200쪽.

131) 이창언, “캐나다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1권 2호(1998), 571쪽.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반 이민 정서는 여전하였고, 특히 1920년 중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법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캐나다 경제 부흥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숙련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이민요구가 증대되었고, 이민자에게 일시체류가 아닌 영주권과 잠정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쟁점이 되었다. 1960년대 유럽경제가 회복되자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캐나다는 경제적 재구조화 과정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를 아시아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1960년대 당시 ‘조용한 혁명’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격변을 경험하였다. 이시기 퀘백의 모든 분야에서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혁명의 핵심내용은 국가가 교회권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사회변화를 주도한 것이다. 정치적 개혁을 통해 불어권 퀘백인의 교육기회 향상과 사회법의 개정을 통한 생활안정, 공직에서 영어권 및 불어권 퀘백인의 동등성 추구 등을 들 수 있다.<sup>133)</sup> 퀘백주의 불어를 사용하는 다수 사람들은 퀘백주의 연방가입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언어적, 문화적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소수의 영어계 퀘백인이 퀘백의 상업과 산업 부문에서 대부분 우위를 점하였고 또한 불어가 영어에 비하여 그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퀘백정부는 ‘문화부’를 신설하고 새롭게 시행된 캐나다 연금플랜과 같은 다수 연방정부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등 퀘백의 분리주의 운동이 이 기간 동안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 (2) 대응

프랑스 식민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배권을 획득한 영국은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강제추방과 회유의 양자를 채택하였다. 첫째, 프랑스 식민지였던 캐나다 남동부 연해주 지역의 아카디아 지역에서 영국은 강제적 재배치 정책을 추구하였는데, 수천 명의 프랑스 인들을 프랑스로 추방하

132) 위의 글.

133) 한민주, “캐나다 퀘백의 언어정책,” 『불어불문학연구』, 제59권(2004), 355-376쪽.

였거나 미국에 있는 영국 식민지 지역으로 추방하였다. 둘째 회유의 방법으로 오늘날 퀘벡에 해당하는 신 프랑스 지역에서 영국은 영국식 지배의 범위 안에서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sup>134)</sup>

7년 전쟁의 종식으로 이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가 포기되고 영국에 이양되자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던 프랑스계는 수적으로 다수였던 영국계에 상대적으로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것과 자신들이 피정복민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영국은 1763년 에 포고령을 제정하여 많은 프랑스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해 북미 지역의 모든 식민지에 영국의 법률과 관행을 강제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774년에 영국은 퀘벡법을 제정하여 포고령의 관행을 완화하였다. 이 법은 퀘벡주 지역에서 통치원칙들을 확립하는데, 이 법에 따라 영국은 퀘벡 지역에서 주민의 사적인 문제에 관하여 프랑스 시민법의 적용을 유지하며 가톨릭 신앙을 보장하는 등 프랑스계 지역 내에 독자적인 정치적, 법적 체제를 보호하였다. 보통법의 영국식 제도는 단지 형사소송법과 같은 행정에 관련된 문제에만 적용되었다.

프랑스계 문화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1867년의 캐나다 연방법헌 제정에 의한 연방제도의 성립을 통하여 계속된다. 유럽대륙에서 캐나다로 이주해온 이민기간에 따라 여러 지역에 집단으로 정착하며 인구분포의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캐나다는 통합을 추구하며 발전하기보다 개별 지역별로 발전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 중심에는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식민지 간 언어 사용권을 중심으로 문화, 종교 및 경제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sup>135)</sup>

### ① 이중언어정책

1960년대 퀘벡주의 분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자유당 연방정부는 프

134) 강휘원,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201쪽.

135) 이옥연, “연방제를 통한 통합과 분권의 구현: 캐나다 경험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1호(2006), 251쪽.

랑스계의 포용을 의도하여 1963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에 관한 왕립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Bilingualism, 이하 B&B)’를 설립하고 불어를 영어와 함께 캐나다 연방의 공식언어로 지정하였다. 위원회는 퀘벡주이든 다른 지역이든 전국적으로 이중 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는데 이 전략은 캐나다인에게 이중 언어 사용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언어의 보호를 포함하였다.<sup>136)</sup>

B&B의 제안은 언어정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sup>137)</sup> 첫째, 모든 계층의 정부(연방, 주, 지방)가 언어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언어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공공이슈라는 것이다. 둘째, 이 위원회는 평등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언어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행동방안 형성에 공헌하였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2개의 공식언어(공용어)로 선언하고 이민자 및 원주민 중심의 소수민족에게는 모국어와 1개의 공식언어(영어 또는 불어)를 선택하게 하는 이중 언어정책을 채택하였다.

캐나다는 B&B 위원회 이후 불어와 영어 사이의 동등한 지위와 캐나다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이중언어 공동체 창출을 목표로 하는 언어정책을 추구하였다.<sup>138)</sup> 연방정부의 언어정책은 소수 언어집단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불어를 비롯하여 이중 언어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포함한다.

## ㉠ 공식언어법

연방정부에 의해 취해진 주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는 1969년 공식언어법(The Official Language Act)이다. 이 법은 불어와 영어를 캐나다의 공식 언어로 선언하면서 정부부처 및 정부기업과 같은 모든 연방기관들이

136) OCOL, 1996-1997 Annual Report. Canada: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Official Languages(1996); 강휘원,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204쪽 재인용.

137) Jay Makarenko, “Official Bilingualism in Canada: History and Debates,” *Mapleleaf web*(2007).

138) 강휘원,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204쪽.

고객의 선택에 따라 불어나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불어사용자나 영어사용자들에게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공식언어를 사용하는 소수언어 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2개 언어의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연방정부는 수년간에 걸쳐 나라 전체에 불어와 영어의 동시적 촉진이라는 보편적인 하나의 이중언어 공동체 비전에 근거한 언어정책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퀘벡주정부는 캐나다 내에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퀘벡주에 특별한 권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즉 퀘벡주의 언어정책은 하나의 이중언어 공동체가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언어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으로 퀘벡지역에 근거를 둔 불어권 언어공동체와 여타 캐나다 지역에 영어권 언어공동체의 ‘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 ㉠ 연방공무원 임용의 언어이슈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이중언어 공동체 촉진을 위하여 공무원 임용에서 불어사용자 및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하였다.<sup>139)</sup> 이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1978년에는 불어사용자가 각각 연방 공무원 25%, 관리자 18%였지만, 2002년에는 각각 31%와 2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불어 사용자의 증가가 반드시 공공부문의 이중언어 사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불어사용자가 그 수에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영어가 공무원들의 직무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 공교육 및 소수민족의 이중언어교육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1970년부터 교육부문에서 공식언어 교육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주와 지역 모두에서 2개의 공식언어로 제2언어교육 및 소수민족 언어교육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개별 주가 독

---

13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가 공공업무에서 1차적인 언어이었기 때문에 불어 사용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 불어권 캐나다인들이 연방공무원에 지원하는 경우와 그들의 공직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립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공교육의 교육기간도 주마다 다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1967년 영어와 불어를 공식언어로 하는 이중언어 제도를 시작한 이후 지속된 이민정책으로 인한 다민족·다언어적 특성을 공립학교 교육제도에서 공식 및 비공식언어 모두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제도로 조정하였다.

캐나다의 이중언어 교육은 크게 두 유형으로 첫째, 영어와 불어 간의 이중언어 교육인 언어몰입교육(Language Immersion Program)을 들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언어정책의 우선적인 목적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하나의 공식언어(영어 또는 불어 택일) 모두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민자 소수언어교육(immigrant minority language instruction)과 이중언어 교육에 의하여 수행되어졌다.<sup>140)</sup>

이 프로그램 이후 이중언어에 근간을 둔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1980년대에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많이 증가하였지만, 1990년 이후에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 이유는 부적절한 교재와 자격을 갖춘 교사의 부족 등이다.

## ② 다문화주의정책

1971년 캐나다의 튜더 수상은 이중언어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공표하였다. 곧이어 다문화주의를 전담하는 연방정부의 부서가 설치되었고, 1977년에는 ‘캐나다 인권법’이 통과되었다.<sup>141)</sup> 1987년에는 캐나다 다문화주의법이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캐나다인들은 다문화주의의 혜택을 헌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캐나다 정부는 인종, 민족,

---

140)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캐나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사용능력의 한계가 있는 신규이민자들을 위하여 문화강좌와 언어강좌들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의 장애가 없도록 하였는데, 특히 소방차·경찰 또는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시에는 희망하는 언어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혜양, “캐나다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이해,” 234-236쪽.

141) 이창언, “캐나다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574쪽.

피부색 및 종교에 관한 캐나다의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의 두 지배집단인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주도하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소수민족의 참여를 권장하는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이중언어주의, 이중문화주의를 고수하던 정책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1987년에 조인된 미치호수협정(the Meech Lake Accord)은 영어권 캐나다와 불어권 캐나다를 강조하고 퀘벡주를 독특한 사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남아 있다.<sup>14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계 중심에서 이중언어주의와 이중문화주의로, 그리고 다시 다문화주의로 정책이 변경된 것은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3) 평가와 시사점

캐나다의 이중언어 정책은 영어와 불어의 두 개 공식언어를 다루는 문제로 나타난 것이지만 종족적 민족주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 캐나다를 지배하려는 영국계와 이 지배에 저항하는 프랑스계와의 갈등과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퀘벡에서도 이민인구가 급증하면서 이것은 이민자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퀘벡 내에서도 영어권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선호하였다.<sup>143)</sup> 이러한 상황은 다수인 프랑스계 퀘벡인들에게는 위협의 요소였다.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불어사용을 강제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고려해야만 했다. 최근에도 퀘벡의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민자들을 반대해온 입장에서 전환하여 서서히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불어권의 확대를 유도해 오고 있다.

---

142) 위의 글, 575쪽.

143) Raymond Breton, "From Ethnic to Civic Nationalism: English Canada and Quebec," *Ethnic and Racial Studies* 11, no. 1(1988), pp. 86-102.

지난 1960년대 이후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로부터 다양한 이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중언어 정책은 새로운 이민자들에게는 그들의 모국어와 영어 또는 불어, 캐나다 원주민들에게는 그들의 토착 언어와 영어 또는 불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었다.<sup>144)</sup> 따라서 캐나다 연방정부 언어정책의 특징은 첫째, 다인종·다문화사회에서 일반대중의 복리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언어의 상대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언어적 정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민족을 수용해야 하는 언어정책은 변화하는 언어적 환경 및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진화하였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를 대응해 나아가는 이중언어 정책을 볼 때, 향후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현재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말과 남한의 표준어인 서울말에 대한 언어통합에서 강제적인 남한의 표준어로의 통일이 아닌 통일 당사자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유지·발전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8-2) 캐나다 ·호주 - 호주

### (1) 갈등 양상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 간의 갈등문제이다. 인종갈등은 호주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백인 인종우월주의에 기반을 둔다. 호주는 앵글로(영국계) 켈틱(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백호주의 아래 민족의 동질적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대단위의 이민 개방으로 인해 다양한 인종, 에스닉 공동체가 유입되었다. 이민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호주는 백인 인종 순결성에 의

---

144) 국응도, “복합 문화와 이중언어 사회 속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5권 (1990), 81-106쪽.

존한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결국 호주는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생겨난 공동체 간의 갈등과 민족정체성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문화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770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의 동부해안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을 영국의 영토로 선언한 후 호주는 영국의 이주자 식민지가 되었다. 호주는 그로부터 200여 년이 넘게 앵글로 켈틱 단일인종, 단일문화권 국가였다. 20세기 초에 이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앵글로 켈틱 단일문화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정부가 채택한 백호주의 정책의 영향이 크다.

백호주의 정책은 1901년에서 1973년까지 비유럽인의 이민을 막기 위해 호주정부가 채택한 모든 법안 및 정책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인과 태평양 연안국 인구가 호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법안이 만들어진 당시 호주의 인구구성을 보면, 영국계 98%, 독일계 1%, 중국계 0.8%였다.

당시 앵글로 켈틱계 호주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된 대상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이 최초로 호주에 유입된 시기는 호주에 금광개발이 활성화되었던 1851년이었고, 이후 20여 년 동안 약 4천명의 중국인이 호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금광에서 일하기 위해 모여든 영국계 호주인들과 중국인들 간에 분쟁과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그 결과 중국인의 이민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결국 호주정부가 ‘이민제한법안 1901’에 대한 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민제한의 기준을 인종이 아닌 언어로 전환하면서 호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자들은 유럽에서 통용되는 언어 중 한 언어의 단어 50개에 대한 받아쓰기 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유는 영어로 시험 볼 경우 영국계가 아닌 유럽인들에게는 불리하지만 영국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일본인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언어시험이 영어가 아닌 유럽언어가 되었다고 한다.<sup>145)</sup>

---

145)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 갈등,” 『국제 정치논총』, 제48집 1호(2008), 274쪽.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은 호주의 민족정체성이 백인 인종과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동질성 담론에서 문화가 독립적으로 강조되기 보다는 인종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은 이주자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인 애보리진을 이질적인 인종으로 간주하고 배제했다. 호주는 영연방국가로 탄생하기 이전인 1869년부터 이미 ‘애보리진 보호정책 1869’를 통해 애보리진 아동, 특히 여아를 가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 양육함으로써 순수한 애보리진 연구와 문화의 소멸을 조장했다.<sup>146)</sup>

호주의 이러한 백호주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천 백만 명의 작은 국가로서 아시아국가로부터 침입이 있을 경우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호주는 유럽이민자들의 이민을 적극 받아들였다.<sup>147)</sup>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호주에는 산업노동력, 특히 하층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주요 기업들은 호주정부에 해외 이민을 통해 노동력 확보를 요구했고 호주 정부는 해외 인력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호주정부가 비영국계 유럽인들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시한 동화주의 정책은 비영국계 유럽 이민자들의 삶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불만 표출로 나타났다. 일부 이민자들은 ‘호주화’ 과정을 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호주의 주류 문화로부터 고립되고,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무능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 이민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에서 여전히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들을 대변해 줄 대표자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정치적 대표성 문제에 이어 이민자 대표들은 호주 사회에서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호주 주류 문화의 배

---

146) 위의 글, 275쪽.

147)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 사람들 중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타성에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동화정책에 대한 이들의 불만은 그들의 자녀들이 언어와 인종차별 때문에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심화되었다. 즉 그 당시에 호주사회에서 상당한 규모의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던 백인 이민자들은 노동쟁의나 파업을 통해 정부에 호전적인 계급투쟁의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동화정책에 대한 비영국계 유럽 이민자들의 불만은 호주사회의 새로운 갈등이 되어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호주는 건립 이후 백인 인종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백인 유럽인의 이민을 장려하고 유색인종의 이민을 철저히 제한하였다. 하지만 ‘백인’ 인종 간에도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였다.

## (2) 대응

### ① 동화주의 정책

1950~1960년대 호주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주로 동화정책이었다. 호주 정부는 호주 민족이 정치, 문화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단일체이기를 원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기존의 앵글로 켈틱 중심의 호주문화, 사회, 경제적 구조에 적응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다.

또한 그 당시에도 호주의 이민정책은 ‘동화 불가능한’ 유색인종들을 배제하기 위해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 당시까지 대부분의 앵글로 켈틱 호주인들은 아시아인 또는 황인종들을 호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1960년까지 백호주의 정책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비영국계 유럽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에 대해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주류문화로부터 고립되고 방치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물론, 호주사회에서 모국어가 철저히 배제되

어 있다는 것과 언어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것은 노동쟁의나 파업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② 다문화주의 정책

호주는 1973년 고프 위트램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다문화사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오래된 동화 독트린은 실패했고, ‘호주의 모든 구성원이 민족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1978년 이후 민족특성에 맞는 이주, 정착서비스와 복지프로그램, SBS방송실시, 가족초청이민 완화 등 권고, 지방에 에스닉 위원회 설치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호주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네 가지 기본원리는 첫째, 시민적 의무, 둘째, 상호존중, 셋째, 상호공평성, 넷째, 공동이익추구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실천전략으로 첫째, 조화롭게 살기, 둘째, 더 공평한 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셋째, 생산적 다양성이<sup>148)</sup>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 간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호주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종교,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민족 간의 화합을 조성하려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다문화 축제개최 등을 들 수 있다.

## ㉠ 언어지원 프로그램

이민자들의 언어 및 문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는 온라인 및 전화서비스를 통해 다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

---

148)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6호(2006).

다. 정부의 주요정책 및 행정서비스 등도 다국어 온라인 서비스나 책자를 통해 안내되는데, 특히 사회복지 의료, 법률서비스 등이 있다. 그리고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호주정부는 매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민자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3만 호주달러를 보조하고, 성인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개별 직장을 통해 부가적 재정지원을 한다. 또한 지역의 공공박물관 및 도서관에 다문화권의 도서 및 문화관련 자료, 물품 등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호주정부는 매해 3월 21일을 국가적 ‘화합의 날’로 지정하고 주로 지역 다문화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행사를 주관하도록 장려한다. 이 행사는 주로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 공연, 강연 등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149)</sup>

### ㉠ 문화적 다양성 관리

과거 동화정책이 호주 사회의 동질성을 강조했다면,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 정책은 문화적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정책의 목적은 ‘문화적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이 의미하는 것은 백인 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주가 채택한 다문화주의는 백인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백인 다문화주의로 다인종주의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문화주의가 인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인종적 갈등 요소를 억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 이에 따라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누적된 인종갈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문화 다양성의 제도화에만 노력을 기울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150)</sup>

149)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 갈등,” 279쪽.

150) Jon Stratton and Ien Ang, “Multicultural imagined communities: Cultural difference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USA and Australia,” in david



호주정부는 ‘인종’ 대신 ‘에스닉’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에서 전통적인 인종담론에 토대를 둔 생물학적 원리주의를 배척하고 인간다양성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니티는 출생지 또는 모국어에 따라 구분되면서 호주의 새로운 이민자들은 더 이상 아시아인/황인종, 유럽인/백인이 아니라 ‘베트남인’, ‘피지인’, ‘일본인’, ‘한국인’, ‘영국인’ 등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sup>151)</sup>

그러나 현재 호주에서 ‘에스닉’이라는 용어는 주류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소수공동체를 일컫는 말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에스닉 그룹은 ‘역사적으로 또는 신화에 의해 공통적인 조상을 가지고, 동일한 역사적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징적 요소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그들의 민족성으로 정의하는 그룹’이라고 일컬어진다. 때문에 에스니시티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호주에서는 소수공동체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개념은 다문화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존중’, ‘관용’과 함께 쓰이면서 위계관계를 형성한다. 즉 ‘에스닉’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구를 관용하고 존중해야 하는가? 또는 누가 누구에 의해 존중받고 관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며 존중하고 관용하는 주류 공동체와 존중받고 관용되어야 하는 수동적 공동체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문화주의가 실시되는 호주에서 아시아인들은 애보리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종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그들의 피부색, 외모의 차이로 인해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도 백인들이 누리는 인종적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 또 아시아인들은 호주 사회 내에 완전히 포함된 것도 배제된 것도

---

Bennett(ed.), *Multicultural States*(London, Routledge: 135-62, 1998), p. 105.

151) 1970년대 베트남 ‘보트피플’의 이민허용은 많은 호주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국가가 더 이상 유럽인들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 갈등,” 279쪽. 이는 최근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중의 하나이다.

아닌 회색영역, 즉 모호한 공간 또는 제3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sup>152)</sup>

### (3) 평가와 시사점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최근 호주 내에서 주장된 ‘하나의 호주’에 대한 지지와 함께 비판받기 시작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에는 인종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인종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는 호주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는 과거 백호주의 정책 아래 기득권을 누렸던 많은 백인 호주인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백인 우월주의가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호주에서 다문화주의가 표방한 ‘차이 속에 공존’ 방식은 오히려 공동체 간에 문화적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여 공동체 간의 분리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즉 국가중심의 강력한 다문화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 내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결국 호주 사회에서 관리자-백인, 관리대상자-소수공동체(유색인종)라는 인종적 위계질서를 강화하였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1980년대 다문화주의 정책이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함께 나오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계속되는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3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다문화호주위원회(Council for Multicultural Australia)’가 설치되었고, 이후 1회 계약을 연장하여 2006년까지 운영되었다.<sup>153)</sup> 2007년에는 ‘이민, 다문화주의와 토착문화국(Department of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Indigenous Affairs)’의 명칭이 현재의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으로 변경되었는데,<sup>154)</sup>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

152)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45쪽.

153) 김아름,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8쪽.

으로 보인다.

이처럼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비영어권 유럽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즉 백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따라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이주민들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다는 호주인들의 불만이<sup>155)</sup> 가중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현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심하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다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단일문화, 단일인종 체제를 유지했던 한국 사회에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민자들은 민족 정체성에 위협을 주는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탈북자들의 적응문제와 함께 통일 이후 지난 60년간 이질적인 이념과 문화아래 생활했던 사람들과의 사회통합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호주의 경험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대비가 정부 주도하에 인위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호주의 사례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다문화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한국 사회에 한국인 단일인종, 남한중심의 단일문화 중심으로 위계화된 권력 질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 9-1) 독일 ·베트남 - 독일

---

154)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동녘, 2008), 45쪽.

155) 정치인 폴린 리 한슨(Pauline Lee Hanson)은 단일국가정당(One Nation Party)을 통해 반 이민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는 첫 연설에서 ‘아시아인들에 의한 호주가 위기에 처했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아름,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49쪽.

## (1) 갈등 양상

독일의 정치·제도적 통일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 주민들 간 정신·문화적 이질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는 양 지역 주민의 생활방식, 가치관, 경험체계 등이 상이하여 동독지역 주민들이 아직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치·경제·문화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독 후 처음 몇 년간 통일의 날에 동독의 음악을 몇 곡 들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독일의 어떤 방송국에서도 이를 방송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내적 통합의 문제를 시사한다.

독일의 내적통합에 소요되는<sup>156)</sup> 기간에 관한 통일 직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6~8년이면 동서독 간 경제격차가 해소되고 내적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몇 년이 지나 현실적으로 변화하였다. 199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통합에 14년 그리고 내적통합에 24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독일 주민들이 통일 후 5년 여가 지나는 동안 내적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한 결과라고 하겠다. 통일 후 16년이 지난 2006년에도 2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내적통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2,892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독지역 주민들 중 단지 22%만이 자신을 실질적인 독일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62%는 구동독과의 연결고리도 없고 독일연방공화국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고 한다. 동독지역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990년에 59%로 나타났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

156) 본 조사는 작센 주의 통일 당시 학생 약 400명을 대상으로 1987년부터 중단으로 의식변화를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다. Peter Förster가 조사책임자로 수행해왔으며, 2007년 Eine sozialwissenschaftliche Langsschnittstudie begleitet seit 1987 rund 400 junge Ostdeutsche auf ihrem Weg aus dem realen Sozialismus in den realen Kapitalismus (Mit Unterstützung der Rosa-Luxemburg-Stiftung seit 2002)이란 자료로 Leipzig에서 발간되었다. 이하 Sächsische Langsschnittstudie로 약칭.

39%로 20%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지난 20년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sup>157)</sup>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의 성숙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적통합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문화갈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독일민족의 정체성은 18세기에 형성된 ‘문화민족’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분단 기간에도 지속된 전통문화의 보존을 통해 이어졌다. 동일한 역사와 언어, 경계를 넘는 방송의 영향과 학자와 예술가들의 교류는 정치권에서 이루기 어려운 민족의 정체성이 맥을 잇는데 공헌해왔다. 물론 40여 년의 분단은 문화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었고 이것은 통일 후에 극복해야 할 문제였다.

1990년 8월 31일자의 통일협정 35조는 이를 반영해 “예술과 문화는 -양 국가에서 상이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족의 계속적인 합일의 근거임”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독일분단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부정적인 부분들을 교정해 나갈 것임을 명시하였다. 문화에 대한 결정을 연방차원이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해온 서독의 체제에 신생 5주가 편입해 들어오면서 그간 동독시절에 중앙집권식으로 행해지던 문화행정이 변화를 겪게 된다. 신생주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정부가 1994년 말까지 동독정부가 운영하던 문화예술 지원기금을 함께 관리하며 체제정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도 베를린의 국립도서관과 박물관들에 있던 소장품의 재배치와 통폐합을 비롯해 많은 구동독의 문화기관들이 재편성되었다. 구동독의 소도시들과 대도시들에 지역별로 산업체와 당, 노조에서 운영해온 문화의 중심지였던 수백 개의 문화의 집들이 통일과 함께 폐쇄되었고, 1994년 초에 이르면 동독지역 6,500개 도서관 중 약 75%가 폐관되어 1,750개로 줄어들었다.<sup>158)</sup>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의 연극당과 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

---

157) 1990년부터 복지단체 ‘국민연대’(Volksolidarität)의 위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이며 「Sozialreport」라는 제목으로 문건화되고 있다.

158) Eckart Spoo, "Kulturpolitik," in: Gabrielle Gillen/Walter van Rossum (ed s.), *Schwarzbuch Deutschland. Das Handbuch der vermissten Informationen* (Hamburg: Rowohlt, 2009), pp. 383-384.

트 오더의 발레단, 합창단, 음악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기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심지어 에어프르트 같은 동독의 도시는 예술극장이 없는 최초의 독일 주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동독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바이마르를 비롯한 몇 개 등대노릇을 할 동독 도시들에서 시범사업을 행한 후, 2003년 신생주의 문화지원사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독지역에서 일하던 1만 5천에서 2만 명에 달하던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비롯해 많은 수의 문화계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문화 갈등의 원인은 문화통합의 토대가 되는 경제통합이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하여 쉽게 이루어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의식체계의 상이함 역시 사회적 일체감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 경험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통일에 대한 찬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기간 1년 이하자의 경우 통일에 대한 찬성률은 90% 이상을 보이는 반면, 1년 이상 실업을 경험한 자는 77%만이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특히 30대 중반 통일 당시 중고생이었고 통일 후 4~5년 후부터 직업세계에 진출하기 시작해 경제적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기 시작한 세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업경험 빈도수는 늘고, 그에 따라 통일지지 입장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동독에의 일체감을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sup>159)</sup>

문화갈등의 다른 요인으로 역사적 경험체계 및 그에 따른 의식체계의 상이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사회체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작동하는 독일 정치제도에 대한 동독주민의 만족도는 서독주민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계층별로도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독지역 주민의 독일 정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47%에 이르고 불만족도는 53%를 보이고 있어, 절반 정도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동독주민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3%에 불과한 반면, 그 두 배에 이르는 67%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통일의 방식에서도 문화 갈등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통일의 과

159) 출처: Sächische Langsschnittstudie.

정이 약한 동독 체제가 자발적으로 혹은 순리에 따라 강한 쪽 서독의 국가(체제)에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 편입·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동독 주민은 서독 제도와 그 작동방식에 적응·변화해야 했다. 통일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유럽통합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독일은 ‘재분배사회’에서 ‘경쟁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60)</sup>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의 현실은 동독인들에게는 더욱 적응하기 어려웠다. 경쟁사회인 독일사회에서 강한 서독은 동독인들에게 인색했다. 동독에서의 직업교육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근로에 있어서도 서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 (2) 대응

독일의 문화통합 정책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사회적 차원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은 공공분야에 대한 것이었다. 통일 독일의 문화정책은 처음 10년 동안에는 무엇보다 구동독 지역에서 박물관과 도서관, 연주회장과 전시공간 등 문화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프로이센 왕국의 문화유적이 밀집해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라든가 작센 왕국의 문화유적이 밀집해 있는 작센 주 등지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복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문화기반 확충과 문화재 복원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자, 2000년대부터는 그러한 정책 기조를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 동서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독일 정부가 구동독 지역의 문화기반 복구와 동서화합을 위해 수행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 직후 1991~1993년 동안 “구동독 지역 문화재 보호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총 28억 마르크의 특별예산이 투입되어 약 230개소의 문화재 및 문화시설들

---

160) 이상욱, “통일 10년 후의 독일사회 연구: 경쟁사회 지향인가, 재분배사회 지향인가?,” 『독일어문학』, 제11집(2000), 121-154쪽.

이 긴급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04년까지 연방정부는 ‘문화등대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구동독지역의 국보급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에 재정적 협조를 유지하였다. 2005년부터 2단계 ‘연대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구동독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예산 1050억 유로를 책정하였는데, 그 절반을 차지하는 목적사업비 510억 유로의 2%를 문화지원 예산으로 정하여 국가적 목표인 문화 분야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적 교육이념으로 강조되는 “평생학습 능력의 기초를 문화예술 소양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소양 교육의 강화를 문화정책의 새로운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문화산업 및 창의산업의 육성을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화예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협의의 ‘교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동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애초에 통일조약에서 표방했던 ‘문화국가(Kulturstaat)’의 이념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된 문화국가 실현 노력은 언급한 ‘문화등대’ 프로젝트 및 수도 베를린 문화진흥 및 문화재 복구를 위한 지원, 베를린장벽 역사유적지 복원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sup>161)</sup>

그렇지만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통일독일의 문화정책이 긍정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동독적’ 잔재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통일 후 특히 정치 및 문화 분야에서는 ‘동독적인 것’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태도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청산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동독적인 것’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 인프라 와해라든가 문화예술인의 배제 등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적 지원은 꾸준히 유지되고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는다. 문화정책에서 오래 동안 견지되어온 ‘문화주권’ 원칙이 지속되어 왔다. 문화주권 원칙에 따라 문화정책의 책임과 권한을 주정부의 주권으로 일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동독지역 주정부들은 지역주민 참여문화의 활성화

---

161) Paul Raabe, *Kulturelle Leuchttürme in Brandenbrug, Mecklenburg- Vorpomern, Sachsen, Sachsen- Anhalt und Thüringen*(Berlin: Edition Leipzig, 2006), pp. 21-23.



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이는 다양하게 분산·축적되어 있는 구동독지역의 문화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사회적 대응은 동독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통일 초기 ‘동독적인 것’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태도로 인해 동독 문화 인프라가 해체되고 문화엘리트는 소외되었으며, 그에 따라 동독은 점차 정체성의 휴경기지 혹은 담론의 부재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산’ 분위기는 대략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동독인들이 새로운 자의식에 눈을 뜨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독 고유의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확산되면서 동독 고유의 ‘부분문화(Teilkultur)’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동독문화는 서독문화의 변화를 이끌면서 통일독일의 문화장 전체를 변화시켰다. 동독문화가 통일독일 문화장의 ‘아방가르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sup>162)</sup> 동독인들은 전례 없는 체제단절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화단절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심리적·사회적 자원을 이용한 것이다. 이후 자신들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자의식을 형성해갔다. 서독인과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이등국민이라는 감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서독인과 다르다는 자의식이 형성되어 갔다. 동독에서 생성된 부분문화는 서독의 동독화도, 동독의 서독화도 아닌 어떤 고유한 제3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형성된 동독문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약화되기보다는 강화되고 있다.”<sup>163)</sup> 동독 고유의 문화 형성이 문화통합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통합을 달성하는데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162) 김누리,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독일문학』, 제108집(2009), 220쪽.

163) Polf Reiss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Das Transformations- und Vereinigungsmodell und seine Ergebnisse," in: Hannes Bahrman u. Christoph Links (Hrsg.). *Am Ziel vosbie. Die deutsche Einheit Eine - Zwischenbilanz*(Berlin, 2005), p. 88.

### (3) 평가와 시사점

독일의 통일은 문화적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정치·제도적 통일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 주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동서독의 정치체제 차이로 인해 형성된 생활방식, 가치관, 경험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동독의 가치나 제도는 의미 없는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독일 통일 이후 처음 몇 년간 통일의 날에 동독 음악을 몇 곡 들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독일의 어떤 방송국에서도 동독 음악을 방송하지 않았다. 동독인의 입장에서 느낀 문화적 소외감과 상실감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통일 직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내적 통합의 예상 기간은 6~8년이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1996년 설문조사에서는 내적 통합에 24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내적 통합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통일 후 16년이 지난 2006년에도 2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08년 조사에서 동독지역 주민의 22%만이 독일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통일이 진행되면서 동독의 문화시설들이 통폐합되고, 예술인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동독지역 주민들은 동독의 문화와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동독주민들로서는 익숙했던 재분배 방식에서 경쟁사회로의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의 현실은 동독인들이 더욱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쟁에 익숙한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에게 인색했다. 동독에서 배운 교육과 직업훈련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노동력에서도 서독인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경쟁사회 독일에서 동독인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동독인들은 서독인과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이등국민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독일의 통합사례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상호성에 입각하여 남북 주민의 상호적응성을 높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차원의 통합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용력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통합은 남북 어느 한편이 꺾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남북 주민이 상호적으로 꺾어야 할 문제가 된다. 이 과정은 당연하게도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적응이 아니라 상호 적응일 필요가 있다.<sup>164)</sup>

## 9-2) 독일 베트남 - 베트남

### (1) 갈등양상

1975년 남베트남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면서 남북베트남은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남베트남 주민들은 북베트남 체제에 편입되어 사회주의 이념을 따라야 했다. 이처럼 베트남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은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만나 일으키는 갈등의 해소과정일 것이다. 이에 통일베트남 정부의 사회통합노력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베트남 내무부의 한 보고서에서는 이미 정권유지 위협요인으로 확대된 일반대중의 반정부 운동이 상당 수준 조직화되어 있고 성격이 다른 각 조직들이 1990년대 초반 이후 견고하게 연대관계를 유

---

164) ‘적응’(adaptation)은 생물학적 용어로서 생물유기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으로서 특히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다루는 개념이었던 것을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정치사회학에서는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에 적응해 나가는 재사회화 과정(re-socialization)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적응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알포트(Allport)는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으로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로 규정하고, 게이트즈(Gates)는 ‘개체가 환경과의 조화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행동을 발전시키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라자루스(Lazarus)는 적응을 ‘두 가지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인자, 『적응심리』(정민사, 1986) 참조.

지하면서 운동을 펼쳐나아가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5개의 반정부 내지는 반체제 비밀결사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165)</sup>

첫째는 과거의 남베트남 정부 인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진복을 도모하고 있는 ‘극 반체제세력’으로서 공산당 조직에 침투하여 반정부적인 카르데들과 연계를 맺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력이다. 둘째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과정을 틈타 다당제와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선호의 지식인과 예술인들로서 해외거주 베트남인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는 공산당원과 카르데 중 반사회주의로 사상전환을 한 자들로서 불순 인쇄매체의 배포 등을 통해 정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넷째는 느슨해진 당의 통제를 틈타 생겨난 종교단체들로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다섯째는 자선단체를 사칭하는 개인이나 소집단들로서 지속적인 충원을 통해 반정권 운동을 한다고 본다.

베트남 정부의 차원에서 반체제 조직의 활동이 구체화되고 세력화되고 있다는 것은 베트남 통일 후 지난 30년 간 진행된 베트남의 국가재통합과정으로 사회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정책을 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치통합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베트남 정부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 대응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인해 남북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 통일베트남은 사회주의를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과 이질적인 양 베트남 사회를 하나의 사회로 통합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

165) 최동주, “통일 베트남의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정치교육: 정치재교육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5호(1998), 379-380쪽.

즉 전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주의적 내용을 지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회문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정책들이 학교교육과 사회재교육, 정치교육 및 종교개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교육

베트남 공산당의 교육정책은 모든 베트남 인민을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풍부한 도덕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관계자들에게는 여기에 맞춰 두 가지의 과제가 주어졌다. 첫째,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성격을 지닌 고양된 문화를 갖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 “정확한 사고를 개발하고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개발하여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사회, 자연 그리고 그 자신의 주인으로서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sup>166)</sup>

이에 대해 1979년 1월에 당 중앙정치국은 “젊은 세대를 위하여 교육은 아동기에서 성년기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사회주의 건설에 요구되는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혁명적 도덕성, 과학적 지식과 기술, 기능능력 및 체력을 갖춘 새로운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1975년까지의 남베트남의 교육제도는 프랑스의 모델을 모방하여 기술획득보다는 엘리트주의 즉, 순수한 지식습득을 더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베트남공화국에서는 세 가지 혁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학기술혁명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이전까지의 남베트남 고등교육은 기술교육에 취약하였다. 때문에 통일 이후 베트남은 각급 사립학교의 국유화정책을 실시, 1975년 10월 공산당 정부는 모든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바꾸기 위해 사립학교장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sup>167)</sup>

1979년 1월 11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 나온 결의에 따라 베트

166) 이수훈,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 1호(1989), 83쪽.

167) 위의 글, 88쪽.

남은 교육개혁에 착수하게 된다. 그 결의문에 따르면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사회주의가 새로운 베트남인 즉 사회와 환경 및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근로대중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탁아소와 유치원은 교육제도의 핵심요소로서 시골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처에 세워져야 한다. 여기서 두 살에서 여섯 살까지의 아동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배우도록 하고 새로운 베트남의 교육과 삶에 대한 준비과정이 되게 한다.
- 2) 일반의무교육을 중학교(15세까지)까지 연장한다. 이 과정에서는 보편적인 과목(혁명적으로 해석된)을 교육하고 동시에 노동교육과 조직화된 방식의 근로습관을 기르는 교육을 담당한다. 이 과정의 사회활동은 호치민 아동대와 호치민 청소년자위대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 3)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고등학교(10학년에서 12학년)에 진학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업학교와 상업학교에 진학해 취직을 준비한다. 대부분의 직업교육은 지방수준에서 조직되고 관리를 받는다.
- 4) 대학이나 여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술적 연구와 전문 고도기술 인력의 훈련에 주력한다. 교과과목은 세계 최선의 과학 및 기술방면의 업적을 포함시킨다.
- 5) 성인교육은 두 개의 차원에서 실시된다. 첫째, 연령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보충교육, 둘째, 당원과 공무원 및 여타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직업에 관련된 현장교육이다.<sup>168)</sup>

이 결의문은 통일베트남 사회의 인력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및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화할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에 관한 당 결의문은 학문의 실천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실천에서 괴리된 이론은 금지시키고 있다.

## ② 정치재교육

거의 모든 사회는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형태에 관계없이 사

---

168) 위의 글, 89쪽.

회구성원들에 대해 그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교육은 정치사회화 또는 사회화의 개념과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1983년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공산당 정부는 사회주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적 통제가 용이한 공포사회를 만들어갔다. 즉 단기에 국가 내 가치의 통합을 이루려는 공산당 정권이 남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에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통일하기까지 남베트남은 토지소유와 산업구조에 따른 다원적 계층구조, 장기간 서구사회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국제주의, 전쟁 기간 심화된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부패와 개인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또한 남베트남 주민들의 97%가 종교를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통일 이전 북베트남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단일계급제의 실현과 이를 위한 집단주의 선호 및 적용, 그리고 반외세 투쟁을 앞세운 사회주의의 민족주의화 현상이 주를 이루었다. 전쟁 후 통일을 이룬 베트남 통일정부는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사회를 통합해 나아갔다. 때문에 남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 주입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통일 후 남베트남의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된 것이 공산당 정부의 정치교육 정책이었다.

당은 교육혁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아 있는 남쪽의 ‘자본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자료들을 소각하였고 북베트남에서 1954년 이후 시행되어 온 모든 방송, 언론매체의 국유화를 남쪽에도 적용하였다.<sup>169)</sup>

통일 이후 베트남의 성인들을 모두 정부가 결성하고 운영을 후원하는 종교별, 연령별, 성별, 직종별 다양한 교육단체에 등록하여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였다. 사상재교육을 위한 이런 조직이나 기관에서의 토론, 비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남베트남 성인들은 강제적으로 마르크스-레닌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다.<sup>170)</sup> 특히 남베트남에서 군대, 행정부, 교육기

169) 최동주, “통일 베트남의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정치교육: 정치재교육을 중심으로,” 388-389쪽.

170)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중조직을 지원하고 조직화하고자 했음에도 불구

관 등에서 고위간부직을 지낸 인물과 같이 상류층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별 분류과정을 거쳐 사상개조를 위한 별도의 정치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전 베트남 사병이나 하위 행정직에 종사하던 일반 도시 중류층들에게는 베트남 전쟁의 반제국주의적 성격과 베트남 공산당과 호치민의 위대함을 홍보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sup>171)</sup>

1979년 이후 베트남 공산당이 추구했던 교육시스템은 지적능력의 함양을 통한 사회 인텔리 계층의 양산이라는 목적을 추구했던 과거 남베트남의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회주의 3대혁명소조의 하나인 과학기술능력의 배양과 사회주의도덕률을 지닌 도덕적 인간의 양성에 주목표를 두었다. 이후 특히 남베트남의 교육은 지식위주에서 교육에서 기술교육 중심의 실용성 우선교육으로 바뀌었다.

1988년 말경, 경제개방 및 사회분위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변화로 비효율적이고 강압적이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던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반정부성명이 발표되었다. 이후 정부는 도이모이의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을 내놓았고, 사회적 요구에 의해 1993년 말 이후 과거 남베트남의 교육체계를 많은 부분 반영한 반사립과 완전사립 학교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통일 후 베트남 정부는 교육을 통해 남베트남 사회의 전통적 이념의 잔재인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및 국제주의의 제거에 중점을 두고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하였다. 하지만 현실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사회주의 가치통합을 저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남베트남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북부지역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되면서<sup>172)</sup> 남베트남 사람들의 불만이 가중되었

---

하고 남부지역의 조직 확대는 실제로 미비하였다고 한다. 김호기·공유식, “베트남 사회주의 개혁: 사회구조와 문화통합의 변화,” 『사회발전연구』, 제2호 (1996), 154쪽.

171) 최동주, “통일 베트남의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정치교육: 정치재교육을 중심으로,” 389쪽.

172) 호치민 시립대 교수인 트란 덕 쿠옹의 글에서 “통일이후 높은 교육과 중등 직업교육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그 크기와 비율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며 빠르게 발전하였다. 단기간 내에 대학들은 이전·개혁되었고, 이러한 바



으며 강제수용을 통한 재교육의 방법 등으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 ③ 종교에 대한 개혁조치

베트남의 전체인구 90%에 해당하는 약 5천만 명이 불교신자이다. 그리고 전체인구의 약 7퍼센트인 3, 4백만 명이 가톨릭 신자이다. 남베트남 지역의 카톨릭 신자는 북베트남 신자와 비교해 두 배나 많다. 이는 제네바 협정의 결과 베트남이 분단되었을 때 북베트남의 가톨릭신자의 절반이 남베트남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베트남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교구와 지역사회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교구장이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경우가 많다.

남베트남 서부지역 촌락에 호아하오 교단과 카오다이 교단이 있다. 호아하오 교단은 불교의 한 분파이며 카오디아 교단은 부처, 예수, 공자, 모하메드 및 여타 종교의 인물들을 숭배하는 다종교적인 혼합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 통일베트남 공산당은 삼조정책을 실시하였다. 삼조 정책이란 ‘1) 종교의 자유권을 존중하고 무신론권을 존중하라’, ‘2) 당에 의해 제시된 정치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과 종교집단을 교육하고 동기화하라’, ‘3) 교회를 “제국주의의 족쇄”로부터 해방시키고 인민들에게 돌려주도록 도우라’는 것이다.<sup>173)</sup>

이는 프랑스와 대항해 싸웠을 때의 세 가지 부정정책(가족부정, 종교부정, 나라부정)과는 다른 것으로 통일베트남은 반종교적이지 않았다. 또한 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도 않았다. 1980년 헌법 제70조는 “국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sup>174)</sup>라고 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

---

탕위에 북부의 높은 중등 직업교육으로 전국적인 통일체계가 형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교육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란 덕 쿠웅, “통일이후 남북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 『한국과 국제정치』, 제13권 3호(1997), 205쪽.

173) 이수훈,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에 관한 연구,” 92-93쪽.

다. 즉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모든 종교 활동을 구체적인 정부 규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정책의 의도는 제4차 전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정치보고서의 인용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종교에 편승하려는 모든 제국주의의 음모를 절대 반대하고, 종교의 배후에 숨어있는 제국주의와 반동분자들의 모든 왜곡된 선전을 분쇄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종교 그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고 있다. 1977년 11월에 결의문 297호가 발표되는데, 결의문의 내용 중 일상적인 미사나 예불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종교의식, 강론 및 법회나 목회자의 모임 등과 같은 종교 활동은 해당지역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 불교에 대한 개혁조치

베트남의 최대 종교인 불교는 프랑스인에게 차별을 받았고 디엠정권에서는 탄압을 받았다. 1963년 통일 이전 디엠 대통령의 불교탄압 조치는 불교봉기를 유발하여 디엠정권을 몰락시켰고, 사실상 베트남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후 불교는 두 개의 종파로 분열되는데 그 중 남베트남의 안쿠앙 사원을 본부로 하는 안쿠앙 종파는 남베트남 정부를 반대하였다. 이후 1975년 10월 25일 관련 지시를 사원 주지승에게 내리면서 1976년 정부당국과 ‘통일불교종단’의 관계는 악화되어 결국 정부의 반대세력이 되었다.<sup>175)</sup>

이후 새 정부는 이러한 반대세력에 대해 독실한 불교신자들은 미제국주

---

174) 한홍렬·김연각·김영우, “전환기 베트남의 문화적 정체성,” 『지리학연구』, 제33권 4호(1999), 255쪽.

175)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원 앞에 불교기를 거는 것을 금한다. 2) 불교 의식에 호치민 대통령이나 사망한 해방 전사들의 기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금한다. 3) 승려들이 세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금한다. 그들도 혁명을 배우기 위해 정상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4) 주지승은 사원 내 모든 승려들에게 위대한 혁명의 영광된 승리를 주지시킬 책임이 있다. 5) 승려들은 혁명조직의 정치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평신도들의 사원 출입을 금한다. 이수훈,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에 관한 연구,” 97쪽.

의자요 북경반동분자들과 협조하는 것으로 낙인찍었다. 하지만 정부는 반종교적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국은 종교집단의 협조와 지지가 정통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불교조직 통일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친 공산주의 불교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 ㉠ 가톨릭에 대한 개혁조치

통일베트남정부의 종교정책은 가톨릭교회를 다른 종교집단보다 더 강력히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가톨릭교회가 가장 잘 조직되어 있고 세력도 컸기 때문이다. 즉 가톨릭의 위계질서가 통일베트남 정권의 민족해방과 사회진보를 향한 모든 운동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작용하였고, 국가내부의 국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통일베트남 정부는 남쪽 가톨릭계에 대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다. 첫 조치는 외국목회자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주재 교황청 대사인 앙리 메트르 신부가 즉각 추방되었다. 베트남에서 국가와 종교 간의 새로운 관계는 교회에 관련된 일마저도 가톨릭교회가 당 노선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베트남의 종교정책은 기본적으로 탄압과 민족종교로의 전환 노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탄압정책은 불교, 가톨릭 및 여타 종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통일베트남에서 종교가 교파를 가릴 것 없이 탄압을 받는 이유는 통일민족 국가건설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인민을 집단으로 조직하는 조직체인 종교집단은 베트남 공산당에 대한 잠재적인 반대세력이며 그 주도권에 있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탄압은 지금 현재 베트남의 반정부 세력을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 (3) 평가와 시사점

통일정부가 추진했던 정치재교육을 통한 남북 지역의 가치통합과정은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의 주입과정이었으며, 남부주민의 기존 가치체계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대체과정은 단기간의 완성을 목적으로 정치교육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수단은 학교교육, 성인 주민 재교육, 종교의 억압 및 통제 등이었다.

이는 남베트남 주민들을 사회주의적 가치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통일정부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남베트남 주민들에 대해 지나치게 독단성을 띠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주입하는 과정으로 나타난 경직성은 통일정부의 사회통합노력을 반감시켰다고 하겠다. 즉 남베트남지역에 대한 사회통합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sup>176)</sup> 1980년대 이후 베트남 정부는 정통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혁명의 역동성보다는 체제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인민의 의식과 정서에 내면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즉 베트남의 경험은 각기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갖고 있던 이질적인 집단이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3. 문화갈등과 사회통합의 시사점

본 연구는 실질적인 ‘사회문화통합’ 개념화와 사회문화 갈등 해결과 극복을 위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 간 갈등과 통합 유형 정리, 문화통합 사례조사의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화통합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통일과정에 따른 문화갈등과 문화통합의 유형화 및 매핑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가별 갈등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76) 통일베트남 정부가 남베트남 지역에 실시한 정치통합정책은 남부지역 주민들을 새로운 정치체제에 적극적으로 동화시키기 보다는 남부지역 주민들을 성분에 따라 분리시켜 차별대우함으로써 질서유지를 순조롭게 하는데 그 주안점이 주어졌다. 김국신, “독일·베트남·예멘 통일사례,”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 연구』 (한울, 1994), 17쪽.

[표 6] 문화갈등의 국가사례

국가사례	갈등양상	대응	시사점
아일랜드	0 영국의 침략과 대규모 이주, 종교 갈등 0 내전, 신구교 테러 0 일상적, 문화적 수준의 갈등 지속	0 아일랜드 문화 강조 0 아일랜드 고유어 복원, 병기 0 스포츠, 예술 분야의 독자성 확립	0 문화적 갈등이 정치사회적 인식을 확대 0 정치세력에 의한 갈등 증폭
이스라엘	0 구소련 붕괴로 인한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대량 유입 0 아프리카 유대인들의 유입	0 집적 적응 방식 프로그램 운영 0 공식체계와 비공식 체계를 통한 적응 프로그램	0 문화요소와 복지요소가 결합된 적응 및 통합정책 0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통합
한반도(이념갈등)	0 분단의 심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갈등	0 국민적 합의기관, 단체를 통한 통합노력 0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냉전인식 개선 0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인식 확대	0 냉전문화의 뿌리 0 지역발전의 차이
한반도(문화갈등)	0 산업화와 결혼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갈등	0 이주민과 이주민가정에 대한 정책 0 복지적 지원과 문화적 지원 병행	0 단일민족, 단일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유럽연합(국가 간)	0 유럽통합 과정의 언어, 문화, 경제적 차이	0 문화통합 정책의 의제화 0 경제적 차이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0 언어문화 이해 프로그램	0 사회주의 생활방식과 자본주의 생활방식의 통합 0 열린 조정 방식을 통한 문화통합
유럽연합(국가 내) - 스페인	0 인종, 언어, 문화적 차이 0 정치적 탄압에 대한 테러	0 자치권 인정, 언어 인정	0 식민지화 감정의 정치적 불만 표출
유럽연합(국가 내) -이탈리아	0 경제적 차이로 인한 분리 독립 주장	0 이탈리아 남북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0 경제적 불균형이 분리 운동의 근거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홍콩인의 정체성 상실</li> <li>0 중국 정치·인권에 대한 불안감</li> <li>0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부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고도의 자치권 인정</li> <li>0 정치적 분리는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홍콩 경제의 쇠퇴와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갈등 약화</li> <li>0 홍콩만의 문화를 통한 자기 정체성 확인</li> </ul>
남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흑백갈등</li> <li>0 다민족, 다문화 갈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언어선택의 민주적 권리 보장</li> <li>0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li> <li>0 평화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사회통합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li> <li>0 평화지향의 사회통합</li> </ul>
캐나다·호주·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이중언어 국가</li> <li>0 퀘벡 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이중언어 정책</li> <li>0 다문화주의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언어와 문화적 전통의 인정을 통한 통합</li> </ul>
캐나다·호주·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의 갈등</li> <li>0 주류 계층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불만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동화주의 정책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문화적 위계질서의 권력화 대비</li> </ul>
독일·베트남·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동서독 지역의 문화적 갈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국가 차원의 정책: 구동독 지역의 문화기반 복구와 동서화합</li> <li>0 사회적 대응: 동서독 문화를 극복한 제3문화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문화적 통합의 중요성 인식</li> <li>0 상호적응성 제고를 위한 정책</li> </ul>
독일·베트남·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남북베트남의 이질적인 체제와 이념 충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학교교육 - 사회주의 일반 교육의 강화</li> <li>0 사회재교육 -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재교육</li> <li>0 종교개혁 - 불교, 가톨릭 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사회통합 과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li> <li>0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문화집단의 통합</li> </ul>

문화와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일어나는 문화갈등은 온전하게 해소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정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갈등의 정도와 범위는 원인과 대응, 문화적 차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

다. 문화접촉의 경우를 문화적 차이와 문화접촉의 주체 간의 관계에 따라서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문화 갈등에서 두 문화의 문화적 차이는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큰 경우에 갈등이 커진다. 문화접촉과 갈등을 비교하자면 문화유형이나 체계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접촉이 문화의 어느 한 요소 차원의 접촉보다 갈등이 심각하다. 접촉하는 두 문화가 근본 가치부터 행위규범까지 완전히 다른 경우에 문화적 갈등은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문화가 접촉하느냐의 문제도 문화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주체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문화주체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문화적 갈등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적대적인 상황은 국가 간의 관계와 같이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계급 혹은 집단과 같이 사회체제 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문화적 차이가 큰 경우에도 문화를 접촉하는 상황이 비적대적이라면 문화적 갈등은 심각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현상에만 머물 수 있다. 반면에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주체 간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면 문화적 갈등은 증폭된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크고 문화 주체 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문화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고 관계도 비적대적이라면 문화갈등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화의 차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문화적 갈등의 원인을 유형화 하면, ‘우호적인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가 적은 문화가 접촉하는 경우’, ‘우호적인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가 큰 문화가 접촉하는 경우’, ‘적대적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가 적은 문화가 접촉하는 경우’, ‘적대적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가 큰 문화가 접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은 문화적 차이가 적고, 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각각 자본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가 형성되었다. 이후 남북은 전쟁을 비롯하여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체의 적대적 관계에 따라서 문화체제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남북한은 오랜 문화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다. 무엇보다도 같은 언어를 갖고 있으며,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가족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여 많은 문화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자체의 요인보다는 문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며, 문화적 갈등은 남북한의 사회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증폭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화접촉이 일어난 경우에 문화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문제였다. 문화갈등의 원인은 인종적인 요인, 이주에 의한 갈등, 분단에 의한 갈등으로 나누었으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연합이나 단일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 연합단계에 있는 국가, 단일국가를 이룬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국가의 문화 갈등 및 통합 사례는 두 개 이상의 문화권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제도의 통합을 넘어서 ‘문화의 통합’을 성취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문화통합’의 관점을 갖는 것, 나아가 ‘문화통합’의 관점에서 통일정책, 통일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말해 준다. 먼저 몇 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의 사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의 상황은 동일한 민족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적대적 관계의 두 체제(혹은 집단)가 갈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아일랜드의 문화적 갈등은 문화적 차이 못지 않게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화적 갈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일랜드는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종교적 갈등과 계급적 요인, 지배와 독립이라는 요인이 갈등의 축이 되고 있다. 문화적 갈등이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독립된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여전히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갈등의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문화적 차이가 점차 희석되는 과정에서 유럽통합이나 경제성



장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문화적 통합이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를 결합시키는 것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문화통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은 소련출신 이민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집중되었다는 사실이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주하면서 문화적 갈등이 드러났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으로 공동체성이 극히 높았고, 지적 능력이나 전문성을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력하게 통합을 유지하고 정치세력화 하였다. 문명 수준에서 뒤떨어지고 사회적 편견도 받았던 에티오피아 이민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교하여 이념적 차이와 생활 차이를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갈등의 폭은 더욱 크고 격렬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례는 문화갈등이 이주민(혹은 사회이동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적 통합이 중심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사회적인 차원의 지원 부족이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심화시킨 경향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홍콩이 사회주의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겪는 문제들이다. 새로운 체제에 편입되면서 홍콩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고, 본토의 중국인들과는 경계의식이 형성되었다. 홍콩인들은 국제적이고 세련된 홍콩인으로서 본토 중국인들을 탐욕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한다. 홍콩인들은 넓은 의미의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본토의 중국인과 차별화하려는 의식이 있다. 통일과정에서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홍콩의 대중문화는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남북한의 통합에서도 외형적인 통합 이외에도 내적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럽연합(EU)의 사례는 문화통합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철

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합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개별국의 문화와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는 동서유럽 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방적인 통합은 유럽 2등국이라는 열등감을 생기게 할 수도 있었지만 문화적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칫 강대국으로부터의 지배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인들은 ‘다양성 속의 통합’을 유럽을 설명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열린 조정방식(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도 통일과정에서 통합의 방법을 시사한다. 열린 조정방식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에게 정책이나 규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형편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방식을 탈피하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탈리아의 분리주의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이탈리아의 분리운동은 전통적인 원인이었던 인종이나 언어, 종교 등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였다. 남북의 경제적 불균형이 그대로 문화적 우열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만델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흑-백 갈등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언어정책,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 평화교육 정책 등을 실행하고 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청산작업과 평화교육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였다. 통합 이후 진행되는 과거청산의 작업과 교육은 남아공의 사례에서처럼 분명 사회통합을 위한 화해와 평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갈등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며, 우리는 과거청산 작업이 어느 한쪽의 희생에 의한 것일 때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캐나다의 다문화 사회를 대응해 나가는 이중 언어 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통일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현재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와 남한의 표준어에 대한 언어통합에서 강제적인 남한의 표준어로의 통일이 아닌 통

일 당사자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유지·발전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는 동일한 언어구조와 체계로 인식하지만 남북한의 어휘와 의미구조, 심상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통일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호주의 경험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대비가 정부 주도하에 인위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즉 호주의 사례는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다문화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한국 사회에 한국인 단일 인종, 남한중심의 단일문화 중심으로 위계화된 권력 질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할 것을 시사한다.

독일의 통합사례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상호성에 입각하여 남북 주민의 상호적응성을 높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차원의 통합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용력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통합은 남북 어느 한편이 꺾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남북 주민이 상호적으로 꺾어야 할 문제가 된다. 이 과정은 당연하게도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적응이 아니라 상호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베트남 통일정부가 추진했던 정치재교육을 통한 남북 지역의 가치통합 과정은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의 주입과정이었으며, 남부 주민의 기존 가치체계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대체과정은 단기간의 완성을 목적으로 정치교육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었는데 그 수단은 학교교육, 성인 주민 재교육, 종교의 억압 및 통제 등이었다. 베트남의 경험은 각기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갖고 있던 이질적인 집단이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통합 방식에 대한 성찰을 시사한다.

이처럼 각각의 사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지만 주어진 조건과 상황 변수에 따라 각기 너무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곧바로 남북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맞는 ‘문화 통합’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 1. 문화통합의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의 특수성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해 각각의 유형별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사와 사례를 통해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예견되는 사회문화적 갈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유형과 사례들은 유형의 일반적 특성과 각국의 사회적 특수성이 반영된 사례들이다. 한반도의 사회통합에는 일정 부분 유형적 보편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 통합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사이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이념과 체제 대립이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였던 동일 문화권이 이념과 체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서독의 사례와 유사하다. 다행히 세계사적 차원에서는 이념과 체제 대립이 와해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외적 상황 조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 문화통합에서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이념과 체제 대립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사이에는 수백만의 살상이라는 전쟁의 상흔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혈족 사이에서도 피해를 받고, 현재도 수백만의 전쟁 이산가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혈족 사이의 만남과 생활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직접적인 전쟁 체험 세대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특별한 치유 과정 없이 수십 년 동안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온 상황이다. 따라서 전쟁 자체의 비극적 상황보다도 전쟁 이후 재생산된 상호 적

대적 감정이 더욱 강하고 해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남북한 문화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전쟁 이후 심화되어 온 적대감의 치유라 할 수 있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 가족이나 친척의 ‘자유 상봉’을 조기 실현하여 이들을 ‘문화통합’의 선도자로 만들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개별 사례들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이념적인 층위와 지역문화적인 층위를 제외하면 비교적 동질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념적인 층위에서의 이질성 극복은 첫 번째 과제의 해결과 함께 사회적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적인 층위에서의 이질성은 극복 대상이라기보다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살려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 외 문화의 저층을 형성하는 언어와 민속 등 전통문화의 보존에서 동질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이나 종교, 언어, 교육 등 문화 분야에서는 체제 대결 양상이 반영되어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후에라도 분단 이후 달라진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를 지속한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통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꾸준한 상호 교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류와 더불어 문화 분야에서도 몇 가지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통합에 이를 것이다.

넷째, 현재 남북한 사이의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생활수준의 차이가 생활문화의 차이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것과 유사한 문화충격이나 갈등이 남북한 주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체제 차이에서 오는 이질적 문화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문화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지역 주민들이 ‘빈곤의 재생산’에 의한 ‘이등국민’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포용’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과 문화정책이 결합된 ‘문화복지 정책’의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2.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사례와 남북통합

세계 각국의 문화갈등과 사회통합 사례연구는 남북 문화통합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단절과 함께 문화적 단절을 겪었다. 문화적 단절은 남북 사이의 심리적 거리, 정서적 장벽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장벽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문화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사례를 통해 남북 문화통합의 방향과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의 문화통합은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된 민족에겐 문화적 토대가 중요하다. 문화는 분단에 저항해야 하고, 유대감은 지속되어야 할 통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문화통합은 결국 통일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목표인 것이다.<sup>177)</sup> 남북이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유무형의 고통과 상처를 성찰하고, 통합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해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통일논의처럼 민족사적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이나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는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치적 측면에서 인간적 삶의 문제, 분단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해소하고 통합이 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sup>178)</sup>

이는 남북한의 통합이 세계사적 흐름에서 분쟁의 해결과 냉전적 분단구조의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성하는 과제와 연관된다. 우리에게 당연시 되었던 민족적 단일성에 의존한 통합의 논리는 원초주의적인 동질화로서 민족적 배타성을 드러내기 쉽고,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다른 한편

---

177) 윤여령,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과제: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1998), 227쪽.

178) 남북문화의 통합의 가치에는 자유(freedom), 평등(equality), 공평(equity), 존중(respect), 관용(tolerance), 복지(welfare), 협력(cooperation), 신뢰(trust), 안보(security)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곧 통일한국 구성원 개개인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문화적 성숙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으로서 남북의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포용적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소양을 강화해야 한다.

을 강요하는 폭력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합과정에서도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곧 힘의 우세로 나타나고, 이 힘의 우세가 곧 민족적 정통성으로 표현되어 일방적인 강요로 나타난다면 분단 구조를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sup>179)</sup>

문화적 차원에서 남북문화의 통합은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 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남한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충족되어야 한다. 통일독일의 동독지역 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2등 국민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문화의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에 기초한 문화적 포용력을 높여 남북이 서로에 대해 포용적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차이는 필연적이며, 오랜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세대에 맞는 포용력의 시민의식과 통합의식을 교육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남북의 문화통합은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은 분단으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었다. 광복 이후 겪었던 좌우의 갈등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분단의 상처는 정치적 차원에서 온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의 차원으로 들어와 있다. 남북의 문화통합 과정은 분단으로 인해 겪었던 갈등과 상처가 우리 생활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 분단의 구조와 적대적 타자로서 존재했던 남북의 관계는 타자에 대한 관용적 시선을 거두고 적대적 시각으로 타자를 바라보는데 익숙하게 만들었다. 남북의 분단은 분단기억을 내면화된 잠재적 상처, 사회적 무의식이라는 ‘분단 트라우마’로 만들어 적대적 시각을 생성했다. 남북

---

179) 남북의 문화통합은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적 소통과 접근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문화로서 보편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각국은 문화적 혼효(混淆) 속에서 한편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 소통과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은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계승을 명분으로 상대를 공격했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갈망했다. 그런 갈망이 좌절되면서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sup>180)</sup> 남북은 역사적으로 완전하다는 스스로의 인식에서 벗어나 역사적 결여(缺如)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상처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역사를 성찰할 때, 상호 소통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남북이 치열한 이념분쟁과 함께 전쟁의 고통과 상처로 인한 묵시적 반목과 대립이 일상적으로 녹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화적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

남북의 문화통합은 상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남북 분단의 책임을 어느 한 편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문화통합의 과정을 승자의 시각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문화통합 과정에서 다른 한편이 받을 상처는 또 다른 집단적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문화적 가치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근원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사유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 분단이 낳은 심리적 상처와 분단적 장벽은 인식의 영역에서 합리적 판단을 거부하고 무의식적 거부반응으로 내면화되었음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남북 분단이라는 구조가 낳은 정신적 상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분단이 생산한 ‘사회적 무의식’이 통일한국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작동될 것이다.

셋째, 남북 문화통합은 남북 주민의 상호적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통합이란 남북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차원의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을

---

180) 남북 분단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의 의식 속에서 ‘또 하나의 나(남에서는 북, 북에게는 남)’에게 물음으로써 자신의 죄의식을 봉쇄하였다. 남과 북은 통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서로에게 전이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피해의식을 양성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복수의 환상, 거세의 공포를 체험하게 만들었다. 복수의 환상과 거세의 공포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감시를 정당화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남북의 분단 트라우마는 정치군사적 대립이라는 현실 속에서 상호 유대감을 파괴하고 공포를 생산하였다. 문화통합은 무엇보다 먼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의미한다. 남북 사이의 통일문제는 주로 국가 체제적 차원에서 체제의 통합 문제로 인식되었다. 남북의 분단을 냉전구조로 인한 결과와 체제 경쟁의 차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적 차원의 통일 문제는 통일이 남북한 주민,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가져다 줄 사회적 적응 압력과 갈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sup>181)</sup>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적 차원에서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포함하여 남한 주민들 역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의 문화통합에서는 언어문제를 포함하여 생활문화에서 예견되는 문화적 갈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상호 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언어의 문제는 단일 언어의 신화에 빠져 있다. 남북한은 한글을 같이 쓰고 있지만 표기체제부터 언어의 심상구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언어심성의 차이는 이질적인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화갈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언어는 문화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이다. 언어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비롯하여 북한의 문화체계에 대한 이해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럽통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서유럽 국가들을 지배했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제국주의 및 종족주의에 대한 거부, 전체주의 및 국수주의에 대한 거부, 모든 파트너 또는 이웃의 패권국가적 성향에 대한 경각심, 법치의 중요성, 인권의 존중, 자유 및 결속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유럽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문화의 자율성과 창의성, 문화발전의 고유 법칙을 인정하고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소용돌이로부터 문화적 통합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을 남북문화통합에서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sup>182)</sup>

넷째,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민족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의 문화통합은 남북과 해외 한민족의 문화정체성 재정립을 의미한다. 문화적 의미

---

181)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변화를 통한 접근: 변화를 통한 접근,” 208-209쪽.

182) 박신의,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국학연구』, 제10집(2007), 94쪽.

에서 통일은 한민족의 민족 문화의 복원, 창출과 연관된다.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심어 주고, 남북 분단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남북 문화의 차이를 민족문화의 차원에서 극복하고 한민족 문화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이 경쟁하였던 문화의 정통성 논쟁에서 벗어나 포용적 민족문화로 전환하는 문제이다.<sup>183)</sup>

해외동포들 간에 이념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일치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동포는 100여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세대가 흐르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말과 글이 문화적 표현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이민자들에게 하나의 민족의식이나 국민의식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들에게 남북한의 문화적 통합이 민족적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권익 신장을 통해 한민족 디아스포라 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sup>184)</sup>

다섯째, 문화통합 심화를 위한 전략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남북문

---

183)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라져가고 있거나 변형되어 버린 전통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확대하고,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환경과 역사 속에서 축적된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윤여령,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과제: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참고.

184)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민족 구성원들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국권 상실기에 흩어진 민족들이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하와이, 원동 시베리아, 중국의 동북 지방, 일본 교민들의 대부분이 국권상실기에 해외로 나간 경우이다. 두 번째는 해방 후에 경제적 문제로 나간 이민자들이다. 브라질 및 남미, 미국 LA지역, 독일 등에 흩어진 교민들이 그들이다.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 소위 투자 이민의 유형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나간 교민들이다. 이들 해외 한민족들은 한반도를 떠나게 된 역사적 이유와 인식적 토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역사적 배경과 정서적 체계를 포용할 수 있는 민족적 정체성 수립이 필요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해외동포 문제를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화통합은 결과로서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남북한 문화가 교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예측하고, 갈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 국가별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내면적인 통합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독일통일에서 나타났듯이 통합의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차이, 심리적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풀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통일전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측 및 갈등의 지형도를 구축하여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한의 문화통합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남북 간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남북 문화통합의 내적 장애를 극복하고 문화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sup>185)</sup> 문화는 접촉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 남북한 주민들이 문화통합의 과정에서 문화적 충격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한다.

문화통합이 모든 갈등을 온전하게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회이건 이념, 종교, 인종, 지역, 계층, 성별, 세대, 부의 분배 등의 갈등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갈등은 상존한다. 갈등은 사회에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확립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sup>186)</sup> 문제는 갈등의 해소 방법을 찾아내는 사회적 해결 능력이다. 남북한 사이 갈등의 해소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일반화하거나 고정관념을 통해 타자를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통일한국의 문화통합을 위해서 남북 간의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sup>187)</sup>

185) 박신의,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89쪽.

186)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Glencoe, Ill.: Free Press, 1956), p. 95.

187) 김병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1차 세미나 자료집(2011. 10. 7), 41쪽. “사회문화공동체는 ‘내부의

여섯째, 전통문화예술의 복원과 심성체계 통합이다. 남북의 전통문화는 민족문화정책의 차이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문화정책을 앞세우면서도 원형에 대한 의식 없이 현대 인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남한은 원형 보존에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상업화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남북의 전통문화는 상호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의 문화통합은 전통문화의 복원과 함께 생활현장의 창조적 적용을 통해 심성구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민족문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심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물이며, 문화통합의 매개물이다.

‘한반도기’나 <아리랑>과 같이 영토적 의미의 상징이나 복고적 전통의 상징을 넘어서 민족의 상징물과 통합의 가치를 만들어 통일시대 한민족 문화의 정서를 복원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 평화통일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즉 민족상징물의 통합을 통한 동질성을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자산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남북은 역사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남북 주민들이 각각의 역사를 따로 갖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의 현대사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사의 부분에서 남북의 차이는 문화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통합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독일 통일과정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문화통합의 과정에서 남북한 주

---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체계의 차이는 존재하나, 그 차이가 단순히 이질성으로 배타적·분열적 작용을 하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 아래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질적인 두 사회체계가 교류와 소통 증대를 통해 연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단시일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사회문화적 소통을 증대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편견과 선입견, 갈등을 줄이고 상대에 대한 호감과 공존의지를 창출하는 노력은 사회문화적 통합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통일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들이 역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역사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단계별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체계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다. 통일한국 시대에는 남북한 문화예술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 접근 및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예술은 교육체계부터 의미체계, 미학체계가 다른 장으로 작동된다. 역사통합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예술체계, 문화체계 통합의 토대를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공유, 희로애락의 정서적 공유 없는 문화적 통합은 표면적인 통합에 그칠 뿐이다.

###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지속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 유형화를 시도한 사례들 가운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 방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부분과 이와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통합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첫째, 이념과 체제 대결에서 발생한 ‘냉전적 사고’의 원형을 조사 연구하여 ‘탈이념의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통일 비전을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한의 문학작품이나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나타난 냉전적 사고 및 집단적 트라우마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 치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남한만의 작업으로 추진하였다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문학자들을 기반으로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학술 토론회 등을 통해 담론화하고, 온·오프라인 자료로 발간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상흔의 치유 작업과 함께 구술을 통한 ‘상흔’의 기록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쟁 이산가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사 구술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조사를 통해 진단과 치치가 필요한데,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경우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좋다. 개별적으로는 이산가족의 상봉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집단적인 성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 경험을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상봉 전후의 정신적, 정서적 변화를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산가족 박물관 같은 것을 건립,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언어, 민속 등 민족 공통 자산은 물론이고 상호 이질화되어 있는 문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언어분야의 경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바,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언어 분야 후속 연구 및 다른 분야로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대중문화, 생활문화 등 여러 분야의 북한문화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접근을 통한 ‘실태 조사’가 빠른 시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문화통합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지속되어야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1차 자료인 북한의 문헌자료를 활용하고,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간접조사를 통해 생생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 분단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류 사업 주최자는 물론이고 행사 참가자, 취재 기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분류하여 아카이브를 만들고, 그 결과 중 일부는 가칭 ‘남북문화교류

사업 백서'로 발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남북 문화통합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남북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생생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남북 문화통합의 방향과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문화적 적응 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축적하여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문화통합의 방향성과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겪게 될 문화적 충격과 갈등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과 갈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통해 문화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을 돕는 정책을 개발하여 그 실행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남한 사회 또는 남한 주민들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문화통합 사례를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 주로 문헌자료에 의한 개괄적 조사와 그 유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현지 조사, 특히 주요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통합의 주제는 제도화된 영역 그 너머에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형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서 문화통합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정책 담당자, 민간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서독과 같이 자본주의로의 흡수통합이 된 이후의 문화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내 독일문화통합연구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특히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책의 구체적인 철학과 방법론을 조사·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 통일 전후의 문화통합 관련 자료와 정책들을 조사하여 번역·출판하고, 현지 주민들

에게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북한 문화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독일 사례의 소개가 주는 폐해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베트남과 같이 ‘전쟁’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 국가의 문화통합 사례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에 의해 통일이 선회된 후 후행적으로 문화통합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곳으로서, 통일 초기에 급속하고 또 일방적으로 문화통합을 시도하여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례이다. 최근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방으로 인해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있는 바, 통일 이후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는 전쟁 상흔의 극복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국의 사례를 관통하는 문화통합의 개념과 관점, 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한이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의 섬’에서 문화통합을 통한 ‘세계평화의 전진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철학적 문화론적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국제학회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아가고 담론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2011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1).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이주민지원을 위한 상담매뉴얼』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007).
- 길은배,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김국신, “독일·베트남·예멘 통일사례,”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 연구』 (한울, 1994).
-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김인자, 『적응심리』 (정민사, 1986).
- 김학성, “독일사례를 통해 본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방향,”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새뮤얼 헌팅턴 지음,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 신기철·신용철 엮음, 『새우리말 큰사전(상)』 (삼성출판사, 1992).
-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도서출판 창, 1995).
- 
- \_\_\_\_\_,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교보문고, 1991).
-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 우실하,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문화 바로 읽기』 (소나무, 1997).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들녘, 2008).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도서출판 세명, 2001).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이온죽, 『남북한 사회 통합론』 (삶과 꿈, 1997).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통일연구원, 1994).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또하나의 문화, 1994).

\_\_\_\_\_,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3』 (또하나의 문화, 1994).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 2000).

최승운 외, 『문화운동론2』 (공동체, 1986).

통일부, 『2009통일백서』 (통일부, 2009).

피터 그레이(Peter Gray) 지음, 장동연 옮김, 『아일랜드 대기근』 (시공사, 1998).

하랄트 뮐러 지음, 이영희 옮김, 『문명의 공존』 (푸른숲, 2000).

한만길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의 실태』 (통일연구원, 2004).

히라노 겐이치로 지음, 장인성·김동명 옮김, 『국제문화론』 (폴빛, 2004).

Avi Sagi, *The Multicultural Challenge in Israel*(Brighton, Ma.: Academic Studies Press, 2009).

Claus Offe,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m Neuen Osten*(Frankfurt/New York: Campus, 1994).

*Eine soizialwissenschaftliche Langsschnittstudie begleitet seit 1987 rund 400 junge Ostdeutsche auf ihrem Weg aus dem realen Sozialismus in den realen Kapitalismus*(Mit Unterstützung der Rosa-Luxemburg-Stiftung seit, 2002).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New York: Free Press, 1992).

Fred E. Jand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cond edition*(London: Sage Pub., 1998).

- Lambert M. Surhone, eds., *Russian Jewish Immigration to Israel*(N.Y.: Betascript Publishing, 2010).
- Len Lyons et al. *The Ethiopian Jews of Israel Personal Stories of Life in the Promised Land*(Woodstock, Vermont: Jewish Lights Publishing, 2007).
-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Glencoe, Ill.: Free Press, 1956).
- OCOL, *1996-1997 Annual Report. Canada: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Official Languages*(1996).
- Paul Raabe, *Kulturelle Leuchttürme in Brandenbrug, Mecklenburg-Vorpo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Berlin: Edition Leipzig, 2006).
- R. H. Lauer, *Social Change*(Boston, Allyn and Bacon, 1973).
- Sabine Wichert, *Northern Ireland Since 1945, Second edition*(London: Longman, 1999).
- Surhone, Lambert M. eds., *Russian Jewish Immigration to Israel*(N.Y.: Betascript Publishing, 2010).
- W. E. Moore, *Social Change second edition*(N.J.: Prentice-Hall, 1974).
- Willan F. Ogburn, *Social Change*(N.Y.: Viking Press, 1922).

## 2. 학술논문

- 강명옥, “조선민족의 피출의 공통성을 부인하는 사대매국행위,” 『민족문화유산』, 1호(2009).
- 강휘원,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국가정책연구』, 제23권 3호(2009).
- 공유식, “베트남의 사회통합: 국가형성의 조건과 과제,” 『아주사회과학논총』, 제7호(1994).
- 국응도, “복합 문화와 이중언어 사회 속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5권

- (1990).
-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8권2호(2004).
- 김경웅, “통일의 사회문화적 접근: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와 통합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4호(1996).
- 김광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적 정체성,” 『아프리카연구』, 제13호(2001).
- \_\_\_\_\_,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정체성과 국가건설 그리고 아프리카너의 역할,” 『아프리카연구』, 제14호(2001).
- 김누리,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독일문학』, 제108집(2009).
-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21권 2호(1998).
- 김병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1차 세미나 자료집(2011. 10. 7).
-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호(1992).
- 김정규,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연구,” 『사회이론』, 제37호(2010).
- 김정호, “중국의 소수민족교육과 다문화교육: 중국 초등사회과의 다문화교육 내용 탐색,” 『사회과교육』, 제47권 1호(2008).
- 김택환, “독일통일후정치경제사회통합의 애로가 한국통일에 줄 교훈,” 『한국교원대교수논총』, 제9-1호(1993).
- 김호기·공유식, “베트남 사회주의 개혁: 사회구조와 문화통합의 변화,” 『사회발전연구』, 제2호(1996).
- 류지성·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2008).
-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6호(2006).
- \_\_\_\_\_,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

- 갈등,” 『국제 정치논총』, 제48집 1호(2008).
- 박성훈·윤성원·김장호,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논집』, 제8권 15호(2008).
- 박신의,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국학연구』, 제10집(2007).
- 박재영,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호(2008).
- 박종철,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 『영남대통일문제연구』, 제16호(1994).
- 박지향, “아일랜드 역사서술: 민족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역사비평』, 50(2000년 봄).
-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북한사회연구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1997).
- \_\_\_\_\_,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와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1차 세미나 자료집(2011. 10. 07).
- 배성인,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세계화와 주체화의 변증법,” 『통일문제연구』, 제14권 1호(1998).
- 신승연, “캐나다 다문화주의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5-2호(2009).
- 신용철, “중국 조선족의 문화와 남북한의 문화적 통합,”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 제5호(2001).
- 심미경·유연옥, “아동의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응 문제행동,” 『교육심리학』, 17권 2호(2003).
- 양민석·송태수, “독일통일 20년: 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국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4호(2010).
-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과정에 대한 한 접근: 모델의 구상과 적용,”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1998).

- 오정숙,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문화통합 정책,” 『비교문화연구』, 제7집(2003).
- 유정석,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현실과 쟁점,” 『한국민족연구논집』, 30권(2007).
- 윤여령,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과제: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통일문제연구』, 10권 2호(1998).
-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학회 2001년도 춘계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2001).
- \_\_\_\_\_,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2000).
- \_\_\_\_\_,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통일논총』, 제18호(2000).
- \_\_\_\_\_, “효과적인 다문화 가정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워크숍 발제문(2008. 6. 12.).
- 이두원,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2차 세미나 자료집(2011. 11. 11).
- 이상욱, “통일 10년 후의 독일사회 연구: 경쟁사회 지향인가, 재분배사회 지향인가?,” 『독일어문학』, 제11집(2000).
- 이수훈,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 1호(1989).
- 이영란, “독일통일과 사회·문화 갈등,” 한국사회학회 2003년도 전기사회학대회(2004).
- 이옥연, “연방제를 통한 통합과 분권의 구현: 캐나다 경험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1호(2006).
-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개념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 『통일연구』, 2권 2호(1998).
- \_\_\_\_\_,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통일논총』, 17(1999).
- 이창언, “캐나다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한국문화

- 인류학』, 31권 2호(1998).
- 이풍길·김수옥·임병우, “이스라엘의 이민군을 위한 사회적응 지원 교육프로그램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6권 2호(1999).
- 임춘성, “1997년 회귀를 전후한 홍콩중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중국현대문학』, 제23호(2002).
- 장경섭, “남북한 사회통합의 내용과 방송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문화방송, 1997).
- \_\_\_\_\_,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이종석 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 장용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어정책과 국가통합,” 『아프리카연구』, 제19호(2005).
- 장정아, “타자의 의미: ‘홍콩인’ 정체성을 둘러싼 싸움,” 『한국문화인류학』, 36권 1호(2003).
- 장진숙,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 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1권 3호(2010).
-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사회통합’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26호(1995).
- 전영선, “북한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4권 1호(2011).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2호(1997).
-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변화를 통한 접근,” 『한국사회학』, 제41집 6호(2007).
- \_\_\_\_\_, “사회통합의 전망과 과제,”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발표논문집(2000).
- \_\_\_\_\_, “한국통일의 사회통합 문제: 북한사회화의 효과,” 『정책과학연구』, 15권 1호(2005).
- 정윤희, “독일, 베를린의 다문화 정책 사례: 배제에서 통합으로,” 『국토』, 342호(2010).

- 정판룡, “세기교체와 중국조선족 가치관의 변화 및 민족전일체성문제,” 『중국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연구』 (연변대학교 출판사, 1997).
-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1993).
-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2004).
- 최동주, “통일 베트남의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정치교육: 정치재교육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5호(1998).
- 최진우,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정체성의 정치,” 『국제정치학논총』, 제46집 4호(2006).
- 최현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한국 사회통합 정책 연구: 중국과 싱가포르의 상호성 원리의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성,” 『한국민족문화연구』, 35집(2009).
- 최 협,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논단』, 제6권(1992).
- 최혜양, “캐나다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이해,” 『다문화콘텐츠연구』, 4호, 통권 9호(2010).
- 트란 덕 쿠옹, “통일이후 남북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 『한국과 국제정치』, 제13권 3호(1997).
- 한경애, “유럽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EU학 연구』, 10권 1호(2005).
- 한민주, “캐나다 퀘벡의 언어정책,” 『불어불문학연구』, 제59권(2004).
- 한상우,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3호(2010).
- 한운석,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와 담론』, 제54집(2009).
- 한홍렬·김연각·김영우, “전환기 베트남의 문화적 정체성,” 『지리학연구』, 제33권 4호(1999).
- 허태희,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1차 세미나 자료집(2011. 10. 7.).
- 홍석준, “1997년 이후 홍콩인 정체성의 지속과 변화: 홍콩인 정체성 만들



- 기의 문화적 의미,” 『인문학논총』, 제5집 2호(2006).
- 홍석준·이헌중, “홍콩 중국인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의 지속과 변화,” 『중국현대문학』, 제23호(2002).
- 황익주, “아일랜드에서의 일상적 사교활동과 사회집단 분화: 인류학적 사례연구,” 『지역연구』, 3권 4호(1994 겨울).
- \_\_\_\_\_, “유럽통합의 진전과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변화: 인류학적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9권 3호(2000 가을).
- \_\_\_\_\_,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아일랜드 사회의 변화와 적응: 니나(Nenagh)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권 2호(1998 여름).
- Tran Ngoc Them, “1975년 국토통일 전과 후 베트남에서의 문화 화합 과정,” 『통일연구』, 제8권 2호(2005).
- Begoña Aretxaga, “Striking with Hunger: Cultural meanings of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Kay B. Warren, ed., *The Violence Within: Cultural and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Boulder: Westview Press, 1993).
- C.J. Jooste, “Partition as a constitutional option,” D.J. van Vuuren et al.(eds.), *South Africa in the nineties* (Pretoria : HSRC, 1991).
- Davida Wood, “Politics of Identity in a Palestinian Village in Israel,” Kay B. Warren, ed., *The Violence Within: Cultural and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Boulder: Westview Press, 1993).
- Eckart Spoo, “Kulturpolitik,” in: Gabrielle Gillen/Walter van Rossum (eds.), *Schwarzbuch Deutschland. Das Handbuch der vermissten Informationen*(Hamburg: Rowohlt, 2009).
- Jay Makarenko, “Official Bilingualism in Canada: History and Debates,” *Mapleleafweb*(2007).
- Jon Stratton and Ien Ang, “Multicultural imagined communities: Cultural difference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USA and Australia,” in David Bennett(ed.), *Multicultural States*(London, Routledge:

135-62, 1998).

Kathleen Heugh, "Recovering multilingualism: recent language-policy developments," in Rajend Mesthrie, (ed.), *Language in South Africa*(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Kay B. Warren, "Interpreting La Violencia in Guatemala," Kay B. Warren, ed., *The Violence Within: Cultural and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Boulder: Westview Press, 1993).

Michael Hanchard, "Culturalism Versus Cultural Politics," Kay B. Warren, ed., *The Violence Within: Cultural and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Boulder: Westview Press, 1993).

Raymond Breton, "From Ethnic to Civic Nationalism: English Canada and Quebec," *Ethnic and Racial Studies* 11, no. 1(1988).

Samuel P. Huntington,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 3, Summer(1993).

### 3. 학위논문

곽원섭,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아름,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독고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정옥, 『프랑스의 사회갈등과 통합: 무슬림 이민자 차별과 배제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정은, 『유럽연합(EU)의 제 5차 확대로 본 동서유럽의 통합: 남북통합을 위한 성찰』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용민, 『평화교육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차현주, 『분단국가 통일 사례 연구: 베트남·예멘·독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홍성이, 『분단통일국의 통합과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 기타자료

“런던데리,” <http://www.megastories.com/ireland/town.htm>.

“옛 소련 유대인 이스라엘 집단 이민 20년,”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9B%20%EC%86%8C%EB%A0%A8%20%EC%9C%A0%EB%8C%80%EC%9D%B8&contents\\_id=AKR20090907172900079](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9B%20%EC%86%8C%EB%A0%A8%20%EC%9C%A0%EB%8C%80%EC%9D%B8&contents_id=AKR20090907172900079), 2011년 12월 20일 검색.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유대인 8천명 이민 허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764279>, 2011년 12월 20일 검색.

“피의 일요일,” <http://www.megastories.com/ireland/derrymap/rossvill.htm>.

“Jewish Agency for Israel,” [http://en.wikipedia.org/wiki/Jewish\\_Agency\\_for\\_Israel](http://en.wikipedia.org/wiki/Jewish_Agency_for_Israel), 2011년 12월 19일 검색.

고부웅,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http://member.namo.co.kr/~hrsong/text3-4.htm>.

구춘권, “문명의 충돌과 공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두 가지 전망,” <http://jpreview.jinbo.net/journal/0012/chunkeun.html>.

유영철,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http://www.kida.re.kr/woww/special/ira.htm>.

“Good Friday Agreement,” [http://news.bbc.co.uk/hi/english/static/northern\\_ireland/understanding/events/good\\_friday.stm](http://news.bbc.co.uk/hi/english/static/northern_ireland/understanding/events/good_friday.stm); <http://www.nio.gov.uk/issues/agreement.htm>.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 1&cid=AD100702687611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1&sec=1](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0702687611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1&sec=1), 2011년 12월 20일 검색.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 1&cid=AD100702687611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1&sec=1](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0702687611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1&sec=1).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0495075498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0&sec=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9B%20%EC%86%8C%EB%A0%A8%20%EC%9C%A0%EB%8C%80%EC%9D%B8&contents\\_id=AKR20090907172900079](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9B%20%EC%86%8C%EB%A0%A8%20%EC%9C%A0%EB%8C%80%EC%9D%B8&contents_id=AKR20090907172900079), 2011년 12월 20일 검색.

[http://en.wikipedia.org/wiki/Jewish\\_Agency\\_for\\_Israel](http://en.wikipedia.org/wiki/Jewish_Agency_for_Israel), 2011년 12월 19일 검색.

[http://news.bbc.co.uk/hi/english/static/northern\\_irelan/understanding/events/good\\_friday.stm](http://news.bbc.co.uk/hi/english/static/northern_irelan/understanding/events/good_friday.stm); <http://www.nio.gov.uk/issues/agreement.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764279>, 2011년 12월 20일 검색.

<http://www.megastories.com/ireland/derrymap/rossvill.htm>.

<http://www.megastories.com/ireland/town.htm>.

##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유형에 대한 기초연구

---

2011년 12월 인쇄

2011년 12월 발행

발행인: 최광식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34

전화/ 02-3704-9427

인쇄처: 성균관복사

전화/ 02-877-7187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71000-000373-01